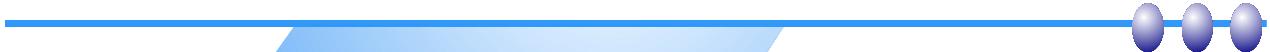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5. 12.



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674
----------	-----

제안년월일: 2025년 12월 9일

제안자: 운영위원장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간: 2025. 12. 1.(월)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구의회사무국
- 감사대상 사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포함

4. 감사반 편성(총괄: 운영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이규선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성수, 이준우, 이예찬, 전승관	• 의사팀 • 정책지원관

5. 감사장소: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6. 감사방법

- 개별감사
- 공개 질의·답변
- 감사 종료에 따른 위원장 강평

7. 지적사항: 불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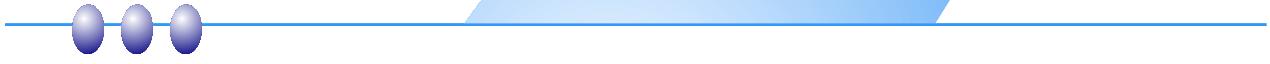
붙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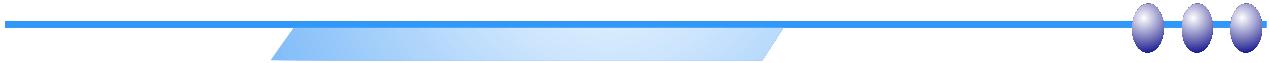
[운영위원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2. 1. (월)	김지연	<p>[영등포구의회 정기적 조직문화 진단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이행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의회는 구청에 비해 소규모 조직이지만, 임기제, 일반직 등 고용형태나 업무 내용에 있어 조직 구성원 간의 편차가 크고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특성상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시기나 내용이 존재하기도 함.○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상호간 직무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함.○ 실제로 2024년 7월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였을 때, 조직원이 직장 내 문제로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비율은 7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2025년에는 조직문화진단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2024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 조직진단 실시를 통해 조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 및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적 갈등 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해야함.○ 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	12. 1. (월)	전승관	<p>(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1.1%로 상향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임. ○ 영등포구의회 사무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와 관련한 검토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국가 정책 방향 취지에 맞춘 구매 확대와 실적 관리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사무국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취지에 맞춰 구매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기 바람.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범적인 지방의회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는 등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5. 12.



행 정 위 원 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정위원회]

의안 번호	675
----------	-----

제안년월일: 2025년 12월 8일
제안자: 행정위원장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2025. 11. 24.(월) ~ 12. 1.(월)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및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9조 제3항에 따른 사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행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현호, 최봉희	• 의사팀 • 정책지원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1감사장, 동주민센터 (양평2동, 대림3동)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일차		- 수감사항 정리	
3일차		- 공개질의 및 답변	
4일차		- 강평	
5일차			
6일차	오전		
	오후		

※ 토요일 ~ 일요일: 지역의정활동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

6. 감사방법

-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실시
- 현황보고 및 청취
-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 답변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시정 및 지적사항: (붙임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붙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행정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1.26. (수)	양송이	<p>[반장조직 활성화 관련 전수조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자치행정과는 반장 조직을 재정비하였음. ○ 이는 반장 조직이 고령화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인원 및 활동 의사가 없는 반장 등은 해촉하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반장 역할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임. ○ 그 결과 반장 정원 4,991명 대비 현원은 2,392명으로 위촉률이 47.9%에 불과함. ○ 부서에서는 반장 본연의 임무인 행정정보의 전달 및 홍보 등이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반장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각 부서별로 반장이 참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했음. ○ 자체 수요조사 결과, 총 6개 부서에서 반장 참여 사업을 제출했음(감사담당관, 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를 통해 18개 동·통·반 조직 개편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반장 임무 확대 이전에 본연의 임무 수행에 원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함. ○ 동장을 중심으로 통·반장 임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체제를 검토해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방안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시과, 복지정책과, 청소과, 치수과, 건강증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의 임무는 우리 구 조례 제7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조례에 규정된 본연의 임무 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더불어, 기존 반장 임무에 대한 숙지 및 이해 부족으로 원활한 임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무리한 역할 확대가 아니라 현재 주어진 기본 임무 수행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임. ○ 반장 지원 확대에 앞서, 기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반장 위촉률이 50% 미만으로 낮아진 현황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이를 단순히 조직 재정비의 결과로 볼 것만이 아니라, 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통·반 구성과 구역 설정의 타당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구조적 신호일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통반 개편은 단 1건에 불과함 (당산1동 반 개편). ○ 인구·주거형태의 변화와 시대를 반영하는 현실적인 행정구역 설정의 기회일 수 있음. ○ 덧붙여,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장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할 것임. 	
2	11.26. (수)	양송이	<p>[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의 연차적 반복 구조 개선과 수요기반 지원체계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경비보조금은 매년 1~3차(또는 4차)에 걸쳐 분할 지원되고 있으며, 전년도 10~12월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별 프로그램·환경개선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상당한 잔액이 발생하는 구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 2025년 11월 2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88%, 잔액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반복되는 잔액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수요조사 방식·교부 시기·사업선정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도서구입비 일괄 지급과 같은 연말 잔액 해소 목적의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경비보조금의 연간 집행계획을 보다 균형 있게 운영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교육경비보조금이 잔액 해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효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736,112천원으로 확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액 규모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매년 반복적으로 잔액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편성·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잔여 예산 해소를 위해 도서구입비를 여러 학교에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음. ○ 도서구입 자체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일 수 있으나, 예산 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보완적 선택이 되어서는 안됨. ○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별 특성과 학생·학부모 요구, 교육과정 연계 여부 등에 근거한 '수요기반 지원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는 ①전년도 수요조사 → ②연중 2~3차 교부 → ③연말 잔액 처리의 구조가 반복되며 예산 구조에 따른 집행이 수요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집행 패턴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본래 취지인 수요기반 맞춤형 지원과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 	간 집행 구조를 점검하고 지원 절차의 내실화를 도모해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으로 교육적 효과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운영이 학교 요구에 기반한 계획적·전략적 지원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간 집행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3	11.27. (목)	양송이	<p>[구민상 심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량평가 요소 도입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 구민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상징성을 가진 사업임. 그러나 현행 심사체계는 공적 내용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 내에서도 정량화된 평가요소 없이 서술식 심사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정성 위주의 심사체계는 심사결과의 일관성·예측 가능성·비교 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으며,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위원회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 정량평가표(정량·정성 혼합형)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심사 과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매년 반복되는 구민상 선정 관련 민원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 개선 및 심사 과정의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구민상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왜 이 후보가 선정되었는가”, “공적의 경중이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가” 등의 민원이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정성평가만으로 구성된 현행 체계에서는 심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구민 신뢰 확보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정량평가표 도입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정량표가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보조하는 기본적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정량화 요소 도입은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음. 	
4	11.27. (목)	양송이	<p>[효율적인 주민자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관리 체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주민자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①1~3월 사업계획 수립 → ②3~4월 자치행정과 검토·보완 → ③ 4~12월 사업 실행 → ④결과보고 및 주민공개의 절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사업이 연중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제출 이후의 진행상황 점검·중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 주민자치사업이 기존 직능단체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의 취지 (지역 특성·주민 주도·자치역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명확히 제시되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동별 주민자치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한 결과, 11월 까지 일부 동의 사업은 미완료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일부 동에서는 삼계탕 나눔, 김장 행사 등 기존 직능단체가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사업과 구조·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사업으로 제출·추진되고 있음. ○ 주민자치사업 기본계획은 “지역 특성 기반의 동 특화사업”, “주민 주도·자치 역량 강화”, “중복 사업 지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계획 검토 단계에서 이러한 취지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주민자치사업은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 확대·지역문제 해결·자치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단순 행사성·소모성 프로그램에 머물 우려가 있어 기획 단계에서의 타당성 심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p>량 강화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함.</p> <p>○ 아울러, 동별 사업 추진 역량 및 기획·집행 수준의 편차를 고려하여, 동일 예산 일괄 배정 방식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성과·기획의 충실도 등을 반영한 차등 지원 방식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p> <p>○ 종합적으로 주민자치사업이 예산 소진 중심이 아닌, 지역 특성 반영 및 주민참여 확대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검토 - 집행 - 평가 전 단계의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18개 동에 기능강화사업과 동특화사업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원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현행 방식은 동별 기획 역량, 사업 집행 수준, 성과의 편차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 일부 동은 기획·집행 체계가 안정적이나 일부 동은 일정 관리나 기획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동일 예산 배분 방식이 사업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11.28. (금)	양송이	<p>[전기차 전용 소화기 및 소화기 함 구매·설치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관내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주차장 29개소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80개와 소화기 보관함 46개를 구매·설치하였음 ○ 해당 소화기는 “비전도성 강화 액(수계형) A/C급 소화기”로 조달청의 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중에서 전기차 화재 전용 소화기로 광고되면서 일반 소화기의 10배가 넘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고, 집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집행기관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검증·인증 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보다 면밀한 논의 및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와 홍보에 치중하여 예산 낭비와 주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또한 소화기 개당 단가 533,500원으로 총 42,680,000원의 예산을 소요해 구매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조달청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해당 소화기의 혁신제품 인증은 “전기화재 진압 시 비전도성 소화약제 투입으로 전기·전자 설비 피해 및 감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화기”라는 취지이며,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로서 혁신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소방청에서도 2024. 8. 11. 자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화재는 국내외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진압이 불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발표하며,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소화기와 관련하여서는 그 적응성에 대해 아직 기술적인 논란이 있고 객관적·공식적인 검증·인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성급하게 적지않은 예산을 소요하는 구매사업의 추진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집행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 여부 또는 제품 선택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채 사업 시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집행기관은 사업 시행 후 “우리 구가 전기차 화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홍보했는데, 결국 신중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일임 	
6	11.28. (금)	양송이	<p>[각 부서 공모사업 관리 및 매칭 비용 예측에 있어 기획예산과 역할 부실 및 중장기 재정전략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는 중앙정부·서울시·공공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국·시비 재원을 적극 확보해야 하며, 기획예산과는 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 매칭 구조, 향후 재정 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함. 이는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가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향후 진행 예정인 공모사업을 파악하여, 총사업비·의무 매칭 비율·연차별 소요예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장기 재정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공모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특정 부서·특정 연도에 매칭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 컨트롤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뿐 아니라 연도별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세부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p> <p>○ 그러나 기획예산과는 현재 어떤 부서가, 언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취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국·시·구비 매칭 구조와 연차별 구비 부담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p> <p>○ 공모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구비 부담이 수반되거나, 반대로 100% 국비로 구비 부담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등 다양하므로, 이를 통합 관리하지 못하면 특정 연도에 매칭 부담이 집중되는 등 중장기 재정 압박 및 부실한 예산 편성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세입 증가세 둔화, 잉여금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원 인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기획예산과의 재정전략 부재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p>	타워로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7	11.28. (금)	양송이	[국회 예산 편성 전 국회의원, 시·구의원, 집행부 간 협의체계 부재 및 국비 확보 전략 미비]	○ 기획예산과는 구 재정의 전략 컨트롤타워로서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전·후 시기는 지자체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집행부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함. ○ 그러나 영등포구는 이러한 기본적인 협의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며, 함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한 공식 기록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음. ○ 국비 확보는 집행부 단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협의체 운영 및 사전 조율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바람.
8	12. 1. (월)	양송이	<p>[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예수금 과다 인출에 따른 중장기 재정건전성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예탁금 및 예수금 순증 4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음.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규모로 재원을 인출하여 일반회계 재정에 충당한 것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운영 취지와 조례상 사용 요건을 다시 한번 명확히 검토하기 바람. 특정 사유가 부재한 채 단년도 예산 보전을 위한 기금 인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운용 원칙을 확립하고 세입 확충 방안 모색을 병행하여 기금이 본래 기능인 '재정안정성 확보'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 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체예산 중 약 4.13%(400억 원)를 차지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라는 목적을 가지는데, 급격한 기금 인출은 본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적 세입감소, 재해·재난,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단년도 재정운용을 위해 예탁금·예수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며, 금번 인출을 전례로 삼아 이후에도 매년 기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조가 될 경우 중장기 재정 건전성이 우려됨. 	라며, 동일 규모의 재정수요가 향후에도 반복될 경우를 가정한 중기 재정전망을 제시하기 바람.
9	11.22. (금)	박현우	<p>[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방안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화상(피부)’, ‘관절’ 등의 진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 밀집해 있고, 종합병원 수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며,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김포국제공항에서는 30분 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특화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어, 우리 구에 비교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과(화상)’, ‘안과’, ‘건강검진’을 특화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홍보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이동할 수 있어 중국·일본·몽골 등 인접 국가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유리해 2017년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 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 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특히 6개 언어로 운영되는 9개 의료 관광 SNS 채널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여의도 봄꽃 축제 등 현장에서 직접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 마케팅을 펼쳤음 ○ 그 결과 2018년 6,578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는 지난해 1만 3,469명으로 약 105% 증가하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함. 또한 올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스마트의료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로 연장되었음 ○ 또한 부서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5 서울의료관광 로드 쇼』에 참가하여 'B2B 상담회', '홍보부스 운영', '현지 의료기관 팸투어'를 수행하는 등 스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민관·해외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 보고』에서 본 위원이 '중국 무비자 입국 실시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 급증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였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또는 인플루언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유관 주체를 대상으로, 또한 의료관광 수요가 풍부한 해외 거점을 사업 시행 무대로 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면, ○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간 협력의 시너지 구축을 위하여 ①관내 34개 협력기관 (27개 병원 포함)의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②의료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번 우리 구의 인도네시아 행사 참가를 계기로 한 인도네시아와의 의료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함. 인도네시아는 여의도에 주한 대사관 및 대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메디컬특구 브랜드 홍보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기여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p> <p>○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두고 우리 구의 인프라와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볼 수 있어, 부서에 다음과 같은 보다 면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바임</p>	<p>관저가 소재해 있고, 구청장이 인도네시아 총영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는 등 우리 구와 사이에 각별한 역사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사 참가에서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스마트메디컬특구로서 성장동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해 ①해당국 출신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②인도네시아 현지 의료관광 에이전시 및 해외 바이어와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③스마트메디컬특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을 직접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하여 시장을 개척할 것을 제안함.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쉬운 업무가 아닐 수는 있으나, 우리 구는 이미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일례로 우리 구는 튀르키예 대사관과 긴밀히 업무협약을 진행하여 환경부의 지원 아래 여의도 앙카라공원과 튀르키예하우스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음</p> <p>○ 다만, 인도네시아 행사 참가에서 사용한 브로셔는 ①3 ~ 5개의 특화 의료 분야와 함께 분야별 대표병원을 명시하고 ②의</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료관광 시 혜택 사항을 명시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므로 면밀하게 보완하여 향후 유사한 행사 참가 시 반영하기를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K컬쳐 붐으로 실제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우리 구는 금융특구와 관련해 시의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른 기회를 상실한 뼈아픈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료관광 정책 개발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아가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관련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시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 특례와 함께 의료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구가 의료관광을 통해 산업적·문화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함
10	11.28. (금)	박현우	<p>[정보통신실 UPS 및 배터리 분리 조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 2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의 리튬이온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PS 배터리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UPS와 배터리를 방화 격벽으로 분리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간 분리 시 필수 요건은 ①$26 m^2$ ($6.5m \times 4m$) ②내화벽 및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가 폭발해 발생한 화재로 인한 서버 소실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복구 과정에서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청 정보통신실의 경우 UPS 배터리가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발·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납축전지형으로 확인되었고, 올해 ① 6. 27. UPS 정기검사 실시 결과 합격 판정 ② 10. 10. 정보통신실 출입보안 및 화재감시 취약지점 상시 모니터링 강화 조치 ③ 10. 22. UPS 분전반 적외선 열화상 분포 및 배터리 내부저항 측정 실시 결과 양호 ④ 그 밖에 UPS 및 배터리 자체 정기점검 이행 등 화재 예방 및 대처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서버 화재와 관련해 UPS실과 배터리실의 공간 분리 여부 또한 중요한 사항인데, 구청 정보통신실의 경우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됨 	<p>방화문 설치 ③하론소화기 및 항온항습기 별도 설치 ④UPS, 축전지 접속용 전선케이블 관통부 내화 구조로 밀폐 처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총무과에서는 요건에 부합하는 별도 공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요건 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각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대부분의 행정이 전산화된 시대에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는 데이터설비 운용에 대한 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보여주었음. 집행 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에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되, 불의의 화재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보통신실의 UPS 배터리 별도 공간 분리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제안함
11	11.28. (금)	박현우	[앙카라공원], '튀르키예하우스'를 둘러싼 공공외교·문화외교·보훈외교 차원의 우리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총무과 교류협력팀은 튀르키예 앙카라시의 '한국공원'이 위치한 알틴닥(Altındağ)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역할 증대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행정과는 “영등포구 여의도 동 56번지 소재 ‘자매공원’ 명칭 변경에 대하여 2025년 8월 29 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1971년 서울시와 앙카라시 간 체결한 자매결연도시를 기념하여 조성한 본 공원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과 전통적 우정을 기릴 수는 의미의 ‘앙카라공원’으로의 명칭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을 확인함. 이에 영등포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명칭 변경 안건 상정 후 심의를 거쳐 이를 원안 가결하였음. 그에 따라 ‘앙카라공원’ 명칭 변경은 올해 12월 예정인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명칭 고시를 통한 확정 변경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임 ○ 정원도시과는 1977년 조성된 ‘앙카라공원’의 노후화에 따른 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7억 원을, ▲ 2025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각각 확보하여 물질정원 등을 조성하였음. 이와 함께 ▲2024년에는 서울시 특 	<p>구와 친선결연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 우호증진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 이 대통령이 앙카라시 알틴닥구에 위치한 ‘한국공원’을 방문하면서 우리 구 여의도 소재 ‘앙카라공원’이 주목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튀르키예 대사관과 2024년 6월 18일 『앙카라하우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구의회는 박현우 의원실 주관으로 2025년 11월 27일 『문화교류 및 우호증진 간담회』를 튀르키예 대통령실 참사관, 튀르키예 문화원장, ‘튀르키예하우스’ 담당자 및 우리 구 유관부처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성료하는 등 ‘앙카라공원’과 ‘튀르키예하우스’를 중심으로 튀르키예와 각별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음. 그에 따라 2024년 2월 기준, 인구 41만 명인 튀르키예 ‘한국공원’ 소재지인 알틴닥구와 외국인 포함, 2025년 10월 기준, 인구 39만 명인 ‘앙카라공원’ 소재지인 우리 구가 친선결연을 추진하여 교류한다면, 두 도시 간 공공외교, 문화외교, 보훈외교에 기여</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별교부금 1억 원을 확보하여 공원 내 위치한 전통주택 '튀르키예하우스'에 대한内外부 정비공사를 실시했고, ▲2026년 상반기에는 시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도·전기·무선 통신 등 보완이 필요한 취약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카라공원'과 '튀르키예하우스' 와 관련한 우리 구 자치행정과, 정원도시과는 본 의원의 현장 간담회 및 의원실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시정 사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적절한 행정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함.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방문을 기점으로 공공외교, 문화외교, 보훈외교 측면에서 추가적인 시정 및 보완사항이 있기에 이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함 	<p>할 것으로 전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둘째, 총무과는 ▲6.25전쟁 전투병 파병국 튀르키예에 대한 우리 구 주관 추념 행사 개최와 ▲이를 상징할 수 있는 현충시설 조성 추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튀르키예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전투병 참전인원 기준 미국·영국에 이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명실상부 형제국으로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6.25전쟁 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우리 구는 6.25전쟁 당시 한강방어선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 곳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 내의 경찰흔 비석, ▲영등포공원 내 맥아더 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지 표지판, ▲신길역 인근 반공순국용사위령탑, ▲여의나루역 근처 한강방어선 전투 백골부대 전적비 등 6.25전쟁을 추념하는 기억의 장소가 밀집한 지역임. 6.25전쟁 전투병 참전국 튀르키예의 희생과 헌신을 추념하는 기념식을 우리 구 주관으로 추진하고, 공원 내 상징적 현충시설을 마련한다면, 우리 구가 보훈외교의 모범적 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례로 호국 보훈 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이미 튀르키예 앙카라시 알틴타구 소재 '한국공원'에서는 튀르키예 주재 한국대사관과 튀르키예 참전용사협회가 함께 6.25전쟁 전투 중 사망자 765명을 기리는 추념식을 매년 6월 25일 거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도 이에 상응한 추념식을 개최한다면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보훈외교의 수범사례가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은 우리 구와 튀르키예와의 역사적·외교적·문화적 교류협력에 필요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외교의 지평을 넓힐 것을 제안함 · 2010년 춘천MBC는 튀르키예 6.25전쟁 참전용사와 전쟁 고아가 60년 후 '앙카라공원'에서 재회한 실화다큐멘터리 '코레 아일라'를 제작하여 방영했고, 2017년 잔 울카이 감독은 한·튀르키예 합작영화 '아일라'를 제작하여 방향을 일으켰음. 이에 영등포의 6.25전쟁과 이 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2025년 12월 1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단독 상연 예정인 남북이산가족 위문 창작 뮤지컬 '해후(가칭)'에도 해당 내용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포함하여 튀르키예 대사관·문화원 및 튀르키예 학생들을 초청하여 문화외교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예정임. 이미 우리 구에는 양국 문화 교류협력에 대한 유무형의 역사적·외교적·문화적 기반이 적지않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를 들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감동적 재회를 상징하는 '아일라'조형물을 '앙카라공원'에 조성하고, 이번에 초연하는 창작 뮤지컬 '해후(가칭)'를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지원하여 발전시켜 튀르키예 현지 공연 개최, 미국 브로드웨이·영국 웨스트엔드 진출을 돋는 역할을 하여 '문화도시 영등포'의 역량을 다 할 것을 제안함 한편, 빵을 주식으로 하는 튀르키예의 식문화에 주목하여 신길1동 소재 한국제과학교와 튀르키예 문화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튀르키예 대사관·문화원 중심으로 튀르키예 학생들이 튀르키예 전통빵 '시미트'를 한국제과학교에서 만들어서 창작 뮤지컬 '해후(가칭)' 관람객에게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통해 6.25전쟁을 통한 문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교류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향후 튀르키예 문화원에서는 한국식 베이커리 만들기 수업을, 한국제과학교에서는 튀르키예 전통빵 만들기 수업을 개설하여 양국의 문화교류를 활동할 예정으로 제반 사안에 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같이 튀르키예와 다양한 문화적 교류를 창의적으로 선도하는 융·복합적 사업을 기획·시행함으로써 우리 구의 새롭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함 ◦ 넷째, 튀르키예 대사관·문화원과 소통을 전담하는 행정국 주무부서를 총무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튀르키예 대사관·문화원과 우리 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외교, 문화외교, 보훈외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관 부처의 협력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잡적·중층적 사안이므로 이를 총괄할 주무부처가 필수적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 총무과에서 유관부서를 총괄하는 주무부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함 ◦ 집행기관은 ‘앙카라공원’과 ‘튀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르키예하우스'와 관련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우리 구가 가진 지역적·역사적·문화적 특색을 적극적·능동적·창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중한 보훈·문화 자원을 발굴·생산하여 "6.25전쟁의 과거를 추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추동하는 진정한 보훈도시", "우정과 환대의 이웃, 글로컬 문화도시 영등포"로 거듭나는 초석을 마련하기를 기대함. 우리 구가 글로컬 영등포로 수법적 역량을 발휘하여 튀르키예와 공공외교, 문화외교, 보훈외교에 기여하여 지방정부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선도적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를 고대함
12	11.24. (월)	김지연	<p>[정신건강 생애주기별·시기별·이슈별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 마음건강 사업은 현재 힐링캠프 상담실, 마음안심버스 등 정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 시기를 주로 '봄철' 등 특정 계절에 한정해 연 1회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위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계절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마음건강 사업을 생애주기별·시기별·이슈별 대응체계로 전환할 것. ○ 청소년 수능기, 신학기 적응기, 명절 전후·연말 고립 시기, 취업·이직 등 청년층 스트레스 집중 시기, 중·노년층 상실·우울 증가 시기 등을 반영한 정밀한 연중 개입 로드맵을 마련할 것. ○ 둘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연령·가구구조·사회적 사건·생애주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특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경우 연중 상담·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정서적 부담이 가장 커지는 수능 전후, 신학기 적응기(3~4월)를 겨냥한 선제적 대응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마음안심버스 이용객 분석에서도 청년·중장년층의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지속 확인되고 있음에도, 취업 시즌, 연말 고립기 등 특정 시기 특성을 반영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가구 구성 특성을 반영한 마음건강 사업 역시 부재한 상황임. 특히 우리 구는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외로움·고립감이 심화되는 명절 전후·연말·겨울철과 같은 고위험 시기를 고려한 1인가구 특화 홍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현재 마음건강 사업은 생애주기별·시기별·이슈별로 발생하는 실제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인가구 정서 고립 완화 프로그램, 명절·연말 집중 심리지원, 상시 심리지원 연락체계 등을 신설하여 실제 취약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셋째, 마음안심버스·힐링캠프 등 기존 사업은 고위험 발생 시기나 특정 이슈(사건·사고·학교 위기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상황별 확대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	11.24. (월)	김지연	<p>[현장방문 민원처리 결과 구분 시정 및 민원관리 체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민원은 전화·온라인·서면 민원과 달리,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즉각적인 상담·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상대적으로 해결 욕구와 긴급성이 높은 민원 유형임. ○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장방문 민원은 초기 상담뿐 아니라 이후 처리 과정의 정확한 기록·관리 역시 매우 중요함. ○ 현행 운영 기준에 따르면 현장방문 민원은 △현장 종결 △소관부서 전달 △타기관 안내 등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음. ○ 실제 운영 내역을 검토한 결과, 1차 상담 후 소관부서로 이첩되어 추가 검토·조치가 이루어지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관리 시스템상 '현장 종결'로 분류된 사례가 확인됨. ○ 이러한 처리 방식은 민원의 실제 진행상황과 시스템 분류가 일치하지 않아 민원 이력 파악이 어렵고, 후속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 민원 중 소관부서로 이첩된 건은 시스템상 '진행 중'으로 명확히 표시·관리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분류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소관부서가 처리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부서 간 민원 연계·회신 절차를 강화할 것이며, 민원 진행 흐름이 누락 없이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민원 관리가 실제 처리 흐름과 일치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관리 절차를 재점검하여 민원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확인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민원관리팀 단계에서 종결로 표시될 경우, 사후관리·진행상황 추적·완료 여부 점검 등이 누락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민원처리 실적의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현장방문 민원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한 정확한 분류 기준 마련과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14	11.24. (월)	김지연	<p>(민원 처리기한 준수 관리 미흡 및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민원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 민원은 법령 관련 설명이나 해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 사항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건의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고충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서는 민원 처리기한 도과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반복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업무량 조정·내부 점검 강화, 조직 개편의 근거로 활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처리기한 준수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가피한 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함. 불가피하게 처리기한을 초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유 기록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동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덧붙여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지연 처리 (월 5건 이상 또는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여 민원 처리기한 준수를 중요한 행정원칙으로 삼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민원 처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처리기한 미준수 사례를 다수 발견했음. 자세히 살펴보면 수일 초과뿐 아니라 경미한 시간 단위의 지연도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났음. ○ 지난 몇 년간 서울시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에서 우리 구가 20위권의 순위에서 머무른 것은 처리기한 준수율 및 단축율 낮았던 점이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민원 처리기한 관리 체계 개선이 당면 과제라고 할 것임. ○ 민원 담당 인력 감소 등 행정 환경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여건과 별개로 도과 사유 분석·내부 프로세스 보완 등 부서별 자체 개선 노력이 충분 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p>일 사유로 인한 반복 도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함.</p> <p>○ 민원 처리기한 준수는 주민 만족도 및 대외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각 부서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기한 준수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5	11.26. (수)	김지연	<p>[금연단속원 급격 감원에 따른 현장 안전 위기, 인력 충원 및 보호체계 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총 15,339개소의 금연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상업지역·주거밀집지 등 민원 다발 구간이 많아 타 자치구 대비 단속 수요가 높은 지역임. ◦ 그럼에도 최근 3년간 금연단속원은 2022년 24명에서 2025년 10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단속 인력 공백이 심화됨. ◦ 금연구역 수는 지속 증가하는데 단속원만 감축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며 단속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구조적 인력 부족은 현장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7월 금연단속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단속원 신체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확인됨. ◦ 단속 공백이 증가하면 금연 민원은 더 많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단속 인력의 부담과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금연단속원 인력을 즉시 충원할 것. ◦ 금연구역 규모와 민원 다발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민원 대응이 가능한 인원 규모로 단계적으로 충원할 것을 요구함. 인력 감축 기조는 단속 효과뿐 아니라 단속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임. ◦ 둘째, 단속원 안전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 ◦ '제시 - 사후 관리'가 포함된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 단속 중 폭언·폭행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벨, 보디캠, 무전기 등 안전장비 지급, 업무위험 상황에서의 즉시 업무중단 권한, 기관 명의의 경찰 협업 등을 마련할 것. ◦ 셋째, 금연단속 권역을 재정비하고 단속밀도를 현실화할 것. ◦ 광범위한 권역에 과소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은 위험을 가중 시킴으로, 금연민원 다발 지역 중심의 핵심 권역 재조정·집중 단속 구간 설정이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라도 인력·제도 개선이 시급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넷째, 단속원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할 것. ◦ 고령 단속원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위기대응·자기방어·안전 수칙 등 실질적인 전문 교육을 정례화할 것. ◦ 다섯째, 금연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속원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기적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 단속 과정에서의 폭언·폭행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상시적 위험이므로, 피해 발생 이후 단순한 사후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조치를 포함한 지속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여섯째, 금연구역 규모가 타 자치구 대비 월등히 많은 영등포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금연정책 마련 필요. ◦ 타 자치구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등포의 구조적 단속 수요를 반영한 예산·인력·시스템 편성이 필요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6	11.26. (수)	김지연	<p>[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지원체계 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기본 기능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현황 살펴보면, 방과 후 청소년·아동의 안전한 체류공간, 지역주민의 일상적 이용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사랑방 기능과 더불어 지역 돌봄 기능 보완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이는 도서관의 공공적 성격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것으로, 현재 기능을 고려한 운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그러나 이러한 기능 확대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의 핵심 기반인 운영위원회 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활발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 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순 식대 제공 중심의 형식적 지원에서 벗어나 부서가 운영목표 설정 지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프로그램 검토 체계 구축 등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의 별도 예산 편성 및 그 근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각 동별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는 작은도서관별 동별 운영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하여야 함. 아울러 문화재단의 작은도서관 운영팀과 협력하여 작은도서관 우수 프로그램의 동별 활성화의 좋은 예를 상호공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역 생활돌봄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여를 이끌어내는 곳도 존재하나, 운영위원회별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수준의 편차가 적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운영의 품질은 프로그램 구성력, 주민참여도, 운영위원회 역할 수행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현재 지원 체계는 도서관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p>로, 그에 부합하는 시설환경 개선(조명·냉난방·안전장치·학습 공간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p>
17	11.26. (수)	김지연	<p>[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기초현황 파악 및 협력체계 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의회는 2025년 7월 15일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어 8월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가 발의 및 통과되어(시행일 2025.9.18), 관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조례 시행 이후 우리 구는 11월 11일 서울시교육청과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에서 추진 중인 학교 체육 시설 개방 및 스쿨매니저 사업에 대한 기초현황 조사 및 통합 관리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함. ○ '남부형 스쿨매니저' 사업에 대해 대상학교·운영범위·역할·예산 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구 사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보완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덧붙여, 학교체육시설 개방 정책이 예산 편성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책 기반 구축 → 현황 파악 → 관계기관 협력 → 운영체계 마련의 전 과정에 대해 부서가 주도적으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바 있으며, 2026년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약 1억7천만 원의 예산을 2026년도 본예산안으로 편성, 현재 구의회 심사 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남부형 스쿨매니저' 사업을 운영 중이며, 담당부서인 미래교육과에서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 내용·대상학교·운영방식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 구가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행정의 정합성과 대응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 ○ 조례 제정과 함께 차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현황 파악·관계기관 협의·운영체계 설계가 충분히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 추진 기반이 미흡해질 수 있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8	11.26. (수)	김지연	<p>[공립 작은도서관, 축소 아닌 진흥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현재 관내 공립 작은도서관을 총 19개소 운영 중임. 동 운영 17개소와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2개소(밤동산·조롱박 작은도서관)가 있음. ○ 동 직영 작은도서관은 지난 2022년 24개소가 운영 중이었으나, 지금까지 7개소가 폐관되었음. ○ 2025년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에서, 2024년 운영 총평을 통해 “이용률이 적고 노후화된 시설은 시설 전환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작은도서관의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지역기반 독서 인프라는 AI 활용 능력의 기반이 되는 문해력과 정보이해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독서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률이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률이 적고 노후화되었다고 시설 전환할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으로 이용률이 증가한 사례를 참고하여 환경개선 및 장서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공립 작은도서관의 장서 구입 금액을 다시 2022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고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시설 전환하는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작은도서관이 7개소나 폐관되고 매년 장서 구매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전체 이용자수와 대출권수가 2022년부터 3년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이용자수 2022년 181,231명, 2023년 192,763명, 2024년 277,442명/ 대출권수 2022년 226,703권, 2023년 231,445권, 2024년 281,980권) ○ 덧붙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과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작년 8월 본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작은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서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주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 규정(제7조의3)’ 신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제16조)와 조사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작은도서관 진흥과 체계적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의회의 조례 개정 취지는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기반 독서 문화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집행부의 ‘이용률 저조·시설 노후’를 이유로 한 시설 전환 방침은 개정 조례의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판단됨. 	
19	11.26. (수)	김지연	<p>[수능 응원 현수막 게시의 옥외광고물법·조례 미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미래교육과에서는 총 2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공목적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및 영등포구 조례에 따른 허용 장소·형식·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내부 협의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여, 관내 23개소에 25개의 수능 응원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해당 현수막은 지정계시대에 설치되지 않았으며, 이는 「옥외광고물법」 및 영등포구 조례가 규정한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 장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됨. ○ 이는 사전 계획 수립과 게시 장소 확보 절차가 미흡하여,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정계시대 외 위치에 설치하게 된 것으로, 학생 통행이 많은 장소를 고려해 게시했다는 사유는 있으나, 법령·조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 ○ 또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는 ① 낭비적 예산 소모, ② 도시환경 저해, ③ 주민 피로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 목적성만으로 절차 미준수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움. ○ 이번 사례는 내부의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사전 검토 체계 	<p>청함.</p> <p>○ 지정계시대 외에 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부서 간 협업 및 일정 관리, 게시 장소 사전 확보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미흡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반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20	11.27. (목)	김지연	<p>[동 소통간담회 프리젠테이션 미결재 자료의 대외 활용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절차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는 구정 방향과 주요 현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식 행사임에도, 해당 과정에서 사용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은 ‘미결재 자료’였던 사실이 확인됨. ○ 이는 주민 대상 공식 행사에 사용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확정 절차 없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미결재 자료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음. ○ 이는 ①미결재 자료를 주민 대상 행사에서는 활용하면서,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소통 간담회 등 공식적인 대외 행사 및 활동에서 활용되는 설명자료·프리젠테이션은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결재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청함. ○ 미결재 자료가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검토·확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함. ○ 「지방자치법」 제49조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에 의거하여, 의회의 서류제출요구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책무를 준수해야 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의회의 정당한 감시·견제 기능에는 제출하지 않는 상충된 업무 처리로 비춰질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결재 자료가 대외적으로 활용된 경우, 내용 오류 또는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법」 제49조의 행정사무감사·조사권에 의거, 서류제출 의무는 엄격하게 요구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동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결재 여부는 정당한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서류 제출 거부는 법령 위반이라고 사료됨. 	
21	11.28. (금)	김지연	<p>[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소진에 대한 '임시 힐링'이 아닌 정기적·전문적 소진예방 체계 구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은 총 28명이며, 이 중 적지 않은 직원이 5년·7년·10년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상담인력 대상 '정기적·전문적' 심리상담 및 소진관리 제도를 즉시 구축할 것. ○ 연 1~2회 소진 진단, 정서회복 프로그램 등 제도화된 관리체계 도입하고, 대면상담·비대면상담 등 다양한 정기상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상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근속 인력인 것으로 확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 상담업무는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 위기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등 높은 정서적 부담과 2차 심리적 외상 위험이 큰 업무임. ○ 이러한 고위험 사례를 수년간, 장기간 누적하여 담당하는 것은 소진 위험을 높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운영 중인 직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연 2회로 '직원 간 자유 소통의 날·힐링 만찬' 등 일반적 교육 혹은 친목 도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이는 누적된 정서적 부담을 해소하거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소진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 자살유가족 관리, 장기간 고위험군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임에도, 정기 상담·심리평가·진단 등 상담사 본인을 위한 공식적 보호체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즉, 상담사가 구민의 정신건강 	<p>제도를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둘째, 기존 힐링프로그램 외에도 소진예방이 가능한 개별적, 조직적 워크숍 등 전문 심리치유를 제공할 것. ○ 셋째, 위기개입·자살 고위험군 등 고난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즉각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 위험사례 처리 후 심리안정 지원 등 고위험군 담당자 보호트랙 운영이 필요함. ○ 넷째, 직원 소진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및 상담사 소진 예방을 예산 편성 및 조직 운영의 핵심 요소로 반영할 것. ○ 상담사의 정신건강이 곧 구민 정신건강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므로, 소진 예방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업무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행정 기능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의 정신건강은 제도적으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지어, 사례 자문 또한 주로 “사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공”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상담사 본인의 정서 회복이나 소진 예방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실정임. 	
22	11.28. (금)	김지연	<p>(구민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 제안제도, 공무원 제안제도는 구민과 공무원들의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 함으로써 구민 생활 편의증진 및 행정운영 능률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음 ○ 그러나 연간 운영 성과가 매우 저조하며, ○ 집행률이 11월 기준 38%로 나타남. ○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증진을 위한 제안제도운영이 미흡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 제안제도 및 공무원 제안 제도의 집행 목표와 개별 집행 항목에 대한 시기별 세부 집행 계획, 그리고 근본적인 참여 저조 명확히 설정하기 바람. ○ 구민·공무원 제안제도는 구의 혁신적 정책 발굴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제안된 정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 가능 분야와 범위를 명확히 안내·홍보하여 불필요한 반려 제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소극적·형식적 집행이 아닌,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 제안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3	11.28. (금)	김지연	<p>[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시행 시 절차상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p> <p>○ 정원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이 주민 반대로 인해 착공 일시 중단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의 편성과 투명한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민원, 제안사항이 구의회로 접수된 바 있음.</p> <p>○ 제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p> <p>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원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진행 상황을 주민이 언제든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p> <p>② 공원과 같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충분한 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뿐만이 아닌, '정기적인 의견 조사 및 회의'를 실시하여, 시설 변경, 개선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예산 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것.</p> <p>③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회의의 회의록을 남길 것</p>	<p>○ 조례 개정 취지가 실제 운영에 반영되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범위를 조례에 맞게 확대하는 세부 절차와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또한 이에 맞게 조정하기 바람.</p> <p>○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민원을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 과정에 미비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예산과는 예산의 수립과 지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그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단계의 메뉴얼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4	11.28. (금)	김지연	<p>[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취지 반영을 통한 예산과정 참여 확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편성·집행·평가 등)'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 개정 취지가 반영된 구체적 제도 변화나 실행 사례가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현황이나 과정을 공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p>[주민참여예산제 전 과정별 참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과정 : 제안사업 공모, 민관 합동 제안사업 심사, 최종 주민투표 실시 -예산 집행과정: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집행 현황 (집행액) 공개(신규) -예산결산 및 환류과정 : 2023년 사업추진 결과 영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해당 영화제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것을 요구함. 또한, 해당 영화제에 대한 지원이 보조금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당 영화제 측과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포구 홈페이지 공개,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위원 대상, 운영 관련 설문조사 실시(신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 이후, 금년도 신규 확대 참여 사항은 단지 공개된 집행액, 사업 추진 결과를 확인하거나,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소극적 방식뿐이며, 이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음. ◦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문의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공모의 참여에서부터 결과 확인, 집행과 환류까지 주민이 참여의 주체로서 효능감을 느끼기 어려웠다고 판단됨. 	
25	11.28. (금)	김지연	<p>[추가경정예산 집행 부진 지적 및 편성 원칙 재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 현안이나 시급한 재정 소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올해 추경 사업 중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 ◦ 전체 추경 편성 사업 중 12건이 집행률 50% 이하이며, 이 중 4건은 집행률이 10%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경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을 명확히 검증하기 바람. ◦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 특히 10% 이하인 사업의 경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 단계에서의 수요 산정·사업 설계·절차 관리 등에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재점검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하에 불과하여, 이는 긴급성을 전제로 하는 추경 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p>○ 또한 시설 조성 성격의 예산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집행이 지연된 사례가 확인되는데,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추경 편성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되었음.</p> <p>○ 종합적으로 볼 때, 긴급하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포함되었거나, 편성 이후에도 실질적 준비 부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적지 않아, 추경 편성 및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원칙·절차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일정과 절차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람. ○ 추경 편성 과정에서 형식적·선심성 예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내부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기획예산과가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바람.
26	11.28. (금)	김지연	<p>[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운영 부실]</p> <p>○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은 배달 산업의 활성화 및 영등포구 땡겨요 상품권 발행액의 대폭 증대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 보호 및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의 목적으로 편성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홍보 채널 및 방식 등 전반적 홍보 전략을 재검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기준 미달 신청자가 많은 현황에 대하여, 기준이 적정한지, 관련 안내가 부족했는지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유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우리 구의 특화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플랫폼노동자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유형별 노동자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구현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신규사업은 실제 저조한 신청 현황으로 현재 4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다수의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사업의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였음. 	<p>신청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p> <p>◦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급 외에도 현장 노동자 다양한 지원과 관련한 원스톱 안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27	11.28. (금)	김지연	<p>[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공정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은 ▲ 2018년 사업 추진이 시작되어 ▲2019년 생활밀착형 SOC 정부안으로 선정되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후 ▲2023년 5월 착공되어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 그런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예산이 2년 연속 명시이월되고 준공이 미루어져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추가 	<p>◦ 체육시설 건립은 주민이 개관을 기다리는 지역사회의 주요한 사업임. 사업 지연은 공사비 및 민원 증가로 이어져 준공일을 준수하며,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계획을 세워야 함</p> <p>◦ 불필요한 사업지연에 따른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예측과 검토를 통한 사업 공정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유수지 내 공사로 우기 및 폭염 시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당초 착공 당시에도 유수지내 공사로 5개월 수방기간 공사중지는 고려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타당하지 않음 ○ 수년에 걸친 장기 공사 사업에서 기획보한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시이월을 통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불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시설 개관에 대한 주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측과 계산을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이라는 신뢰행정의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명시이월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화 하여야 함 	
28	11.28. (금)	김지연	<p>(YDP오름 실내암벽장 민간위탁 운영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YDP오름 실내암벽장 운영과 관련한 종목선정 등 위탁 과정의 시작부터 운영 실태 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우리동네 체육관' 사업으로 지역 내 근거리 체육시설 조성으로 구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건강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YDP 오름 암벽등반장의 운영 부실에도 불구하고, 구민 생활체육 활동 증진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향후 수익성 사업에 대한 용역 시행 관리 개선과 함께 'YDP오름'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익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음 ○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차 확인한 결과 이용자 수는 이용형태를 불문하고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고, 수익성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다 수입·지출이 모두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 ○ 부서에서는 올해 2. 25. 시설 운영 관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였고, 11. 17.에는 평가지표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 동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병행하였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본 사안은 부서의 잘못된 사업 시작과 책임있는 운영의 부재로 주민의 공간이 낭비되고, 목적에 맞는 활용이 되지 못한 실패한 사례로 사료됨. 이에 조속히 현행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향후 새로운 공간활용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역 주민이 회원으로 참여해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 복지, 지역 체육 활동의 증진을 도모하는 '스포츠클럽 제도'는 지역 내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수요 중심의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부서에서는 2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참고하여 면밀한 시장조사·수요예측을 시행하고 영등포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생활체육 저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고 해당 공간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효능감 있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힘써주길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9	11.28. (금)	김지연	<p>[영등포로 커먼영업 갈등의 구조적 개선 및 합법 전환 지원 체계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내 전통시장·문래창작촌·거리문화 기반 상권 등은 고유의 분위기와 로컬 감성으로 젊은층 유입이 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옥외영업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보행 불편, 소방도로 점유, 불법 테이블 설치 등 유사한 민원들이 여러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역 전반에서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민원은 특정 상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골목형 상권·시장·창작촌 등 영등포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며, 특히 다수 골목이 소방도로 또는 소방차 진입 확보구간에 해당하여, 법령상 영업 목적의 외부 테이블 설치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환경이 다수 있음. ○ 문제는, 여러 상권에서 옥외영업 허용 불가 지역임에도 단속이 반복되면서, 행정·상인·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상권 전반을 대상으로 한 '구역별 옥외영업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전통시장·문래창작촌·골목상권 등 각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도로·보행로 등 절대 허용 불가 구간, 조건부 관리 가능 구간, 상권 특성에 맞춘 대안적 운영 구간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구역별 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 ○ 둘째, 단속 중심 구조에서 '사전 안내 - 대안 제시 - 사후 관리'가 포함된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 ○ 단속만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반 사유·허용 불가 근거·대체 가능한 합법적 운영 방식 등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설명 책임 체계를 구축할 것. ○ 단속 이후에도 재발 방지 조치·개선 유도·현장 점검 후 피드백이 이뤄지는 체계로 전환할 것. ○ 셋째,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정례 운영 필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있다는 점임. 현행 방식은 “민원 발생 → 단속 → 재발→ 단속”의 악순환이며, 이는 행정 낭비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영업 문제는 단순한 위생 관리 이슈가 아닌, ▲상권 관리(일자리경제과) ▲보행·도시 관리(도시안전과) ▲소방안전(소방서) ▲위생관리(보건위생과) 등이 모두 관여되는 복합적 사안임에도, 체계적 협업 없이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여러 상권에서 반복되는 구조임. ○ 또한 현장 단속 과정에서의 2차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단속 직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허용범위·대안 제시 없이 단속만 반복하는 현행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 ○ 종합적으로 볼 때, 영등포구의 전통시장·창작촌·골목상권 전반에서 발생하는 옥외영업 갈등은 허용 불가 지역(소방도로·보행로 등)의 구조적 특성, 제도·기준 부재, 부서 간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영업 문제는 보건위생과뿐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상권 관리), 도시안전과(보행·도시관리), 소방서(소방도로·안전)가 함께 관리해야 하는 복합 사안임. 따라서 정례 협의체, 공동 점검 체계, 민원 공유·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부서별 중복 대응·사후 대응·반복 민원을 방지할 것. ○ 넷째, 상권 특성을 반영한 ‘조건부 운영·환경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전통시장·창작촌 등 상권 특성상 옥외영업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소방도로 구간은 명확히 제한하되, 보행·안전 방해가 없는 일부 구간에서는 상권 특성을 고려한 환경개선·대체 운영 모델을 검토할 것. ○ 다섯째, 반복 민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 동일 민원이 지속되는 구역은 단순 단속 조치가 아니라 원인 분석·구조적 개선·상권 관리 대책을 포함한 종합 개선안을 마련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부족, 소통·지침 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행정적 문제이며, 단속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지속적 해결이 불가능함.</p> <p>○ 따라서 향후 특정 구역 단속이 아니라, 영등포 전체 상권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각 상권 특성을 고려한 구역별 관리 기준 마련, 부서 협업 시스템 구축, 단속 방식 개선, 상인 안내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별 현황조사와 민원유형 분석을 통해 상권별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 여섯째, 옥외영업이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할 것. ○ 현재 불법 옥외영업을 하는 업소들 중에는, 실제로는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족해 옥외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소도 적지 않음. 이들 업소가 허용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법 상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옥외영업 허용 기준, 신고·허가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합법적인 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0	11.28. (금)	김지연	<p>[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의 병원 편중 및 확보 부족 문제 해결]</p> <p>○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지정 병원 구성이 매년 거의 동일 하며, 신규 병원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병원 수요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균형 있는 동물병원 지정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둘째, 기존 공고 방식만으로는 참여 병원이 반복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병원 참여 유도 방안(직접 홍보, 설명회 운영, 권역별 모집 목표 설정 등)을 마련할 것.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현황을 비교한 결과, 특정 4~5개 병원이 반복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신규 참여 병원은 소수에 불과함. 이는 제도의 취지가 지역 전반의 동물복지 향상임을 고려할 때 지역 편중이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임. ◦ 실제로 병원 위치가 특정 동 (신길·도신·가마산로 등)에 집중되어 있어, 타 지역 취약계층 주민은 접근성이 낮고 이용이 불편한 상황임. 공공의료 서비스 성격의 지원제도임에도,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사업은 지정 병원 모집 공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모집 방식만으로는 영등포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고르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제도의 근본 취지는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필수의료 지원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병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제도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규 병원 우선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임. ◦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 지정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구성의 변화가 적은 구조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지역 의료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없음. ◦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역 분산확보 - 적극 발굴 ◦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확보 전략과 지역 분산 배치가 필요 한 상황임. 	
31	11.28. (금)	김지연	<p>[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구에는 총 4개의 소상공인 단체가 있음. 이 중 영등포구상공회와 서울소공인협회는 구비 예산이 편성되어 역량강화 교육사업, 경영·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는 구비 편성이 전혀 없어 일부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만 교육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모 미선정 시에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 실정임. 서울시 산하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7곳의 자치구는 법적 근거 아래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음.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소상공인 단체의 구비·시비 등 재정 지원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근거한 소상공인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 단체 지원 사업의 적극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설정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음에도, 일부 단체는 구비 지원이 전무하여 단체 회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단체 가입 유인도 낮아지고 조직의 대표성과 구심점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일자리·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2	11.28. (금)	김지연	<p>[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 지원 사업 운영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 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률 전망이 66% 수준으로 낮게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4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부서는 영등포유통상가 및 그 주변 전통시장의 재개발 사업 기대감에 화제공제 가입 기피 현상이 발생한 것을 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을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수요예측에 실패한 원인을 명확히 하여 향후에는 실질적 수요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단순 현수막 설치·리플릿 배부에 그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홍보·독려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3	11.28. (금)	김지연	<p>[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운영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 어르신 등 기준 복지, 행정에서 주로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 방식, 신청 절차, 지원 요건, 1인당 지원 예상액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원되던 연령층의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을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p> <p>○ 재취업 및 이직을 고려하는 중장년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인생의 경로 변경을 지원하는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방향성임</p> <p>○ 그러나 금년도 사업 실적이 34% 집행률로 매우 저조한 현황을 보이고 있음. 저조한 집행의 이유 중 하나는 중장년 1명당 지원액을 1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3.8만원 수준으로 예측에서 크게 벗어난 것임. 이는 중장년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 수요 및 현황, 선호 자격증 등에 대한 구체적 파악 없이 예산을 책정한 부실한 운영 계획에서 비롯함. 응시료 지원이라는 형태는 사후 정산 처리방식의 비교적 지원의 형태가 단순한 편으로, 단순 비용지급으로만 끝날 경우, 본 사업의 목적인 ‘중장년’의 재취업과 이직의 지원이라는 큰 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자격이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직종 변경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배제되고 있는데, 향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단순 응시료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응시하는 주요 시험 종목 및 관련 취업 여부 등의 추가 파악을 통해, 사업의 최종 목적인 중장년의 재취업과 이직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통계적 근거를 마련해야함
34	12. 1. (월)	김지연	[특별교부세 신청의 지역현안 우선순위 반영 및 금액의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세는 영등포구의 재난, 안전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정성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국비 확보를 위한 특별 조정교부금 사전 협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기획예산과는 '우리구는 한정된 특별교부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①각 사업별 시급성 ②효율적인 예산 배정 시기, ③지역별 균등 및 구민 요청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 후 신청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2025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은 기획예산과가 내부적으로 세운 특교세 신청의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사례로 판단됨. <p>1. 신청 내용의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 사업은 붕괴된 교량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 1월 붕괴 이후, 서울시투자심사를 3회나 통과하지 못하여 약 3년간 재건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음. 이에 교량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의 강도 높은 민원 발생 및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요 	<p>지역현안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산 확보의 기회임. 특교세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효율적인 예산배정 시기, 지역별 균등 및 구민 요청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함.</p> <p>◦ 이로써 우선순위의 사업이 적절한 신청시기에 알맞게 신청되어 효율적 예산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하는 중요한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신청에서 최초 신청 시기인 10월 28일 신청에서 ‘도림천 횡단 교량 설치사업’은 제외되었음. ○ 구청에서 최초 신청한 사업은 아래와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단위: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5%;">1</td><td>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공사</td><td style="width: 15%;">600</td></tr> <tr> <td>2</td><td>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td><td>1,100</td></tr> <tr> <td>3</td><td>여의동 국제금융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td><td>735</td></tr> <tr> <td>4</td><td>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td><td>900</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의 요구도, 효율적인 예산배정 시기로 보았을 때,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이 최초 신청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구청의 국비 신청 원칙이 준수된 편성이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기획예산과의 구두 설명에 따르면, 2025년 10월 28일 1차 신청 이후, 행정안전부의 추가 신청에 대한 유선 연락 	1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공사	600	2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1,100	3	여의동 국제금융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735	4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900	
1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공사	600														
2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조성 및 보행로 개선	1,100														
3	여의동 국제금융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	735														
4	도림천 휴게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900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을 받았고, 이에 11월 21일 에야 비로소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항목으로 뒤늦게 신청하였음.</p> <p>2. 신청 금액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청 이후, 약 1개월 뒤인 11월 21일에 추가 신청한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의 금액은 57억 6천 3백만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었음. 이는 본 사업의 설계비를 제외한 전액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연도별 단일 항목 최대 교부액은 11억 원이었음. ◦ 해당 교부세를 신청한 기획예산과도 본 신청 금액의 100%를 교부받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었음. ◦ 행안부 특교세의 3년간 총액은 25년 상반기 30억, 24년 24억, 23년 27억원으로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으로 금번에 57억원의 단일 사업 신청 금액은 연간 특교세 평균 총액보다 큰 금액임. 물론 행안부 특교 신청금과 교부액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신청 금액은 과도한 산정으로 적정 수준의 교부를 기대하기 어려움.	
35	11.27. (수)	김지연	<p>[문화도시 지속성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전부서적 협력, 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이자, 유일한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음. ○ 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포함한 최대 200억원의 재원을 문화도시 사업에 투자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114억원이 지원되었음 ○ 영등포구의 문화도시 조성은 2008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5번의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를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틀을 마련해 왔음. ○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은 법정문화도시 투자의 마지막 해로 문화도시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속할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해임. ○ 문화도시 성과물 집대성: 이는 단순 문화도시 사업별 성과 정리를 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도시의 자원이 될 기록물, 인력풀, 작품 등을 목록화함 ○ 문화도시 성과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전부서적 이해, 관심 필요: 문화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딩, 디자인, 문화 인력 연계 등을 위한 발판 마련 ○ 각 부서 내 문화도시 적용 업무의 담당자 배정 및 활용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바람직함 ○ 문화도시 조례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구민이 일상의 삶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함.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지속적인 문화도시 영등포의 자리매김을 할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문화라운지 따따따 등 문화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전문문화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의 의장도시로서 전국 37개 문화도시를 대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사업은 총 6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진행되어 각 연차별 사업별 성과보고가 진행되었으나, 연차별 양식이 모두 달라 지속적 성과 측정 및 변화를 파악할 수 없음 ◦ 사업의 통계보고는 활동 보고에 불과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통계적 달성을 넘어 사업 전후의 비교 및 개선 점, 정책 목표 성취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24년도에는 1회 문화재단 사업의 타부서 이해를 위한 성과 공유의 간담회가 있었으나, 2025년에는 이런 자리가 부재함. 이런 점점이 없다면,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도시 영등포 조성은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움 	수 있도록 해야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6	11.28. (목)	김지연	<p>[증가하는 체육 신규종목 활성화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영등포구체육회 산하 신규종목 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2023년에 치어리딩 및 한궁이 각각 인정단체로, 2025년에 그라운드골프, 당구, 요트, 팔씨름이 각각 인정단체로, 철인3종이 준회원단체로 가입하였음 ○ 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가입기준은 해당 종목단체에 가입한 클럽이 정회원은 7개 이상, 준회원은 5개 이상, 인정회원은 3개 이상이어야 함 ○ 가입기준을 충족하고 구체육회의 서류 검토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종목단체인지, 연 1회 이상 대회 주최하는지 ▲종목의 보급도 및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되는지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승인됨 ○ 2025년 현재 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28개, 준회원단체 2개, 인정단체 5개를 포함 총 35개이고 산하에 387개 클럽, 20,502명의 회원이 있으며, 종목단체가 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체육회 산하 공식 신규 단체의 증가는 바람직하며, 신규 종목의 원활한 정착과 회원종목으로서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즉, 체육회와 함께 신규종목단체가 인정, 준, 정회원의 단계로 성장하며 다양한 우리 구 전체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의 핵심을 파악해야함. ○ 아울러 부서는 체육 신규종목 활성화의 지원 대상과 방식을 기존의 구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의 대회 개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구석구석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태동하는 체육활동을 발굴하고 하나의 신규종목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2025년 기준으로 ▲18개 종목에서 한 단체 평균 8,000,000 원 총 144,000,000원의 구 예산으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27개 종목에서 종목별 대회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총 164,482,000원의 구 예산으로 협회장기 대회를 각각 개최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구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는 일정한 규모와 성과를 갖추고 절차를 거쳐 승인받아 대회 개최와 같은 지원을 받는 것인데, 생활체육에 대한 이러한 기존의 지원 형태는 체육활동의 자유로운 개성과 창의가 중시되는 추세에 부합하는 지원이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지난 8월 『2025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관내 영등포초등학교 킨볼 팀이 여자 초등부 준우승을 차지하며 활약했는데, 해당 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며 서울시체육회·영등포구체육회가 주관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사업에 선정되어 강사수당 및 운동용품 지원을 받아 40명의 선수가 주말에 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동하면서 거둔 성과로 주목받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프로그램은 학교, 동호회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강화하는 취지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구 생활체육 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음 	
37	11.28. (목)	김지연	<p>[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15,000,000원을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음 ○ 운영 방식을 영등포구 자전거연맹의 지방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연맹을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그러나 올해 초 연맹 회장의 공석으로 사업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후 영등포구체육회 주관의 사업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연맹의 정상화 절차 진행 후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하지만 하반기 연맹 선거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사업의 대상인 학교 학사일정이 이미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의 정상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체험학습에 대한 기회가 사회 여건상 감소하며, 교내에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학생 지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 아울러 본 사업은 금년도 특히 신규편성되었으며, 환경적 교통 수단으로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교육할 수 있다는 소기의 목적이 있었음.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향후 1년간의 행정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이고 예산의 집행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부서는 예산 집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하여 신뢰행정·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은 연내 전혀 진행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사업 내용상 학교 학사일정이 고려되어야 함이 애초부터 명백하므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를 포함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서에서는 사업 운영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검토가 미흡했음. ○ 또한 연맹 내부 사정이 정상화되어 지난 11. 15. 제19회 연맹회장배 자전거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 점을 고려하면, 부서는 정상화된 연맹과 신속하게 협의하여 방학 또는 방과 후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진행을 성사시킬 방법을 모색해 볼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38	11.22. (금)	김지연	<p>[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추진 미흡 및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수요 반영 행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예산에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지원 사업으로 101,000,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불용하기로 결정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무리한 전국 대회 개최를 추진해 불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이므로 지양하고, 제2구장 허가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충분히 공정적인 예측 결과를 확인한 후 추진하기를 바람 ○ 서울시 최초의 파크골프 전국대회의 유치의 타이틀도 중요하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사업으로 벌써 2년째 불용 인데, 전국대회의 요건인 36홀 조건을 위한 제2파크골프장 개장이 하천점용 미허가로 불발된 것이 원인임 ○ 지난 8월경 인근 양천구의 안양천 파크골프장 18홀을 사용한 대회 개최 방안을 마련하여 9월경 대관을 완료하고 10월경 대회 개최 승인 통보를 받았으나, 11월 11일 개최를 앞두고 참가지역별 사전 연습 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하여 양천구와 추가 사용일을 재차 협의 중 양천구 파크골프협회원들의 협조 불가 결정으로 결국 개최가 추진되지 못하였음 ○ 우선 제2구장 허가 미취득은 이제 충분히 예견가능하므로 2년째 전국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자 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었어야 함. 양천구 파크골프장 대관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의 사전 연습 기간도 사전에 파악하고 대관과 관련해 대비했어야 함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나, 실제 파크골프 협회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이 필요함. 예컨대 파크골프장 인근 여자화장실의 증설 및 클럽하우스의 개선 등 파크골프 협회원 및 파크골프를 즐기는 구민의 필요사항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39	11.22. (금)	김지연	<p>[지역 내 역사, 문화시설의 통합적 관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에는 다양한 기념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우리 구 소재 역사·문화적 시설 및 유산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문화유산이 소재해 있음.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구)경성방직 사무동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계양 태극기 등 국회 소재 3건 등 총 4건이 있고,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조선 이흘레 묘지 등 4건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역 곳곳에 근현대 관련 시설이 다수 존재함 ▲반공순국용사 위령탑 ▲현충기념비 경찰훈 ▲맥아더 사령관 한강방어선 시찰지 ▲이탈리아 의무부대 6.25전쟁 참전 기념비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 ▲문래공원 박정희 흥상 ▲문래공원 육군 제6관구 사령부 지하벙커 ▲연령군 이훤 신도비 묘비터(기념석 및 안내표지) ▲한강방어선 전투 백골부대 전적비 ▲대한독립만세운동 표지석 ▲대한독립만세운동 시위터 ▲노래비(타임스퀘어 광장 조형물) 등 ○ 이러한 시설 및 유산은 우리 구 소관인 범위 내에서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소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건은 관리 상태가 다 	<p>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함</p> <p>○ 이를 위해 특히 현재 관리부서로 되어 있는 타 부서와 연계하여 문화체육과가 문화 자원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소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관리부서 분장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개선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례로 영등포동 영등포역 광장 바닥에 설치된 대한독립만세운동 표지석은 역사적 의미와 서사가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 곳에 소재해 문화 자원으로서 발전시켜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나 표기된 글자가 잘 드러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독립운동 현충시설로서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로 분장되어 있을뿐 문화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관심 밖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문화정책적으로 연계하기 어려운 실태임 	
40	11.22. (금)	김지연	<p>[구민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 지원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는 영등포구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회를 통하여 회원종목단체의 대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하고 있음 ○ 한편 단체 소속 클럽의 클럽장은 단체의 대의원으로서 종목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이 중심이 되는 회원종목단체의 구성이 필요함. ○ 특히 신규 종목이나 협회장기, 구청장기 대회에서 구민 요건 80%가 적용되는 것처럼 현 존재하는 종목단체들에 대해서도 임원, 회원이 구민이 중심이 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는 권고할 필요가 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체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구체육 회장 선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회원종목단체 및 그 소속 클럽의 구성원이 구민 여부는 우리 구 생활체육 정책의 효능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립과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 ○ 하지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정관」, 「영등포구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임원 또는 클럽 동호인 포함 구성원에 대한 구민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 부재함 ○ 종래 지역 체육회 관련 규정에는 회장 또는 사무장은 구민이어야 하고 구성원 중 80% 이상이 구민이어야 하는 내용이 정하여져 있었으나, 형평성 및 차별 논란이 있어 삭제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서울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신규 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 절차 중 서류 심사 시 단체에 가입한 클럽별 동호인 명단에 구민이 80% 이상 포함되 는지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회원종목단체로서 구의 지원을 받는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에 대한 승인 심사 시 참가자 중 구민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결국 구체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구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규정에는 명시되지 않고, 우회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현행과 같이 우회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우, 구민이 아닌 클럽장에게도 구체육회 의결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1	11.25. (월)	김지연	<p>[꿈나무육성지원 사업 관련 부서간 효율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 꿈나무를 지원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의 동기 부여를 위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 참가실적에 따라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에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우 관내 초중고 7개 학교가 축구, 기계체조, 사격, 태권도, 보디빌딩, 빙상, 바둑, 양궁 등 종목에서 3위 내 입상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실력 있고 재능이 충만한 우수 체육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 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4년 제정함으로써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음. ○ 학교별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르고, 지속적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p>*당서초, 영문초, 영원초 - 육상 *대방초 - 농구 *영신초, 대동초, 문래중, 여의</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1,000,000원에서 3,500,000 원까지의 지원금이 지급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에도 지난 11. 18.까지 학교별 1년간 수상 실적을 수합한 결과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1위의 관악고에 2,000,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2위의 대동초에 1,500,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2위의 영문초에 1,500,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체조 1위 ~ 3위의 영남중에 4,000,000원 ▲전국동계체육대회 빙상 3위의 선유중에 1,000,000원 등 총 1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음 ○ 그런데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에서는 관내 초중고 재학생 중 체육분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 ~ 4위권 이내 입상한 경우 특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500,000원씩 19명, 중학생 1인당 700,000원씩 10명, 고등학생 1인당 1,000,000원씩 12명 총 41명에게 28,500,000원을 지급할 계획임 ○ 문화체육과의 지원금과 미래교 	<p>도고, 장훈고 - 축구 *선유중 - 사격 *양화중 - 양궁 *영남중 - 야구 *영남중, 대동초 - 체조 *관악고 - 태권도</p> <p>○ 문화체육과와 미래교육재단은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우수한 성적에 대한 포상과 장려”의 취지 및 “결과 중심이 아닌 인재 또는 종목의 발굴과 육성”의 취지로 구분하여 두 부서 각각의 지향과 역량에 따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할 것을 제안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육재단의 장학금은 각각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체육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즉, 우수한 성적을 증명한 대상에 대해서만 사후 집중 지원하는 형태가 중복된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성장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별 특화된 종목의 고른 체육 활동 지원 및 신규 종목 운동부의 지속적 확장이 어려운 구조이며, 한정된 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간 조정이 필요함 	
42	11.26. (화)	김지연	<p>(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지원 관련 조례 이행, 지원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6만 1천여개의 뿌리기업 중 서울시에는 4천 5백여개의 기업이 소재해 있으며 그중 1천 2백여개 업체가 문래동에 소재해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뿌리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현실임. ○ 약 1260여명의 소공인은 열악한 작업환경, 임대료 상승, 생태계 붕괴로 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민선8기에서는 기계금속단지 통이전을 추진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통이전을 원점 검토하면서 소공인의 장, 단기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세부 목표설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조례상의 뿌리산업 정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함. ○ 이는 문래동 지역의 구체적 청사진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이루어, 지역 재개발, 창작촌 골목 상권, 문래예술인회의 등의 예술인 활동, 문래동 주민의 복리를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일자리경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는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통이전 포함 수도권 뿌리산업 활성화 정책 컨설팅' 준공 및 법률안컨설팅 자문,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간담회 개최, 통이전을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방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 본부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함 ◦ 그러나 용역, 컨설팅, 간담회, 현장방문 등 민선 8기의 통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물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2025년도 문래동 소공인 내공장갖기 사업 만료 시점에서, 소공인들은 투표를 통해 84%가 내공장갖기 사업의 환급을 요구하였음. ◦ 이에 '통이전'이라는 목표 설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목표에 따른 세부 계획이 추상적이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소공인에게 닥친 임대료 인상 및 인력난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 관점의 해결과제가 아닌, 일상의 생업과 직결되는 이슈이므로 장·단기 목표를 구분하여 지원이 필요하였음에도, 비교적 장기 목표 위주의 위한 	제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등 다양한 부서가 협업해야 할 것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법률 제안 및 지자체간 단순 방문 및 간담회에 그친 것은 문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2025년 4월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집적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당사자인 소공인협회 이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음에도 별도 구성 없이 관련 기관의 방문 및 협의 위주의 활동을 하여, 체계적 추진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 문래동은 예술, 기술 융복합 지구로서 문화적 가치를 인정 받고 있는 바, 기계금속 집적지의 통이전은 소공인의 이전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적지 통이전’, ‘문래동 재개발’, ‘문화 도시 문래 예술 기술 프로젝트’, ‘문래창작촌 골목 상권’등은 각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43	12. 1. (월)	김지연	<p>[예비군 수송버스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2024년부터 예비군의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 시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의 합리성·건전성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 이를 위해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 등의 공통사업일 경우, 지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내 16개 정류장을 경유하는 3개 노선의 예비군 수송버스를 운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시행 첫해인 2024년의 경우 위 조례가 2023년 11월에 제정되어 구 예산이 미처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한 후 부족분은 우리 구가 추경편성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우선 시비 81,520,000원을 배정받아 집행하였고 부족분 26,000,000원을 추경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그런데 이후 서울시 집행지침이 변경되어 2025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자치구 예산을 우선 집행 후 부족분을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우리 구는 부족분의 서울시 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즉, 2025년 본예산 편성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우리구는 구비 100%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아울러 대상인원의 산정에도, 서울시의 공문에 의한 가이드라인인 훈련대상의 30% 인원 산정을 따르지 않고, 훈련대상 대비 탑승률 80%의 계산으로 	<p>으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함.</p> <p>◦ 예산 심의에 있어 시비 지원이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위한 사업설명서 내 구비 100%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심의 자료 제공임. 향후 국, 시비 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적절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200,35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 이는 25개 자치구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으로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관악구의 100,000,000원보다 두 배가 많고, 관악구는 예비군 훈련대상이 4만명 이상으로 우리 구의 두 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구 예산이 과연 합리적인 수치인지 의문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다수의 자치구에서 부족분의 서울시 지원을 고려해 탑승률 30%로 계산한 점, 구청이 본 사업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최초로 신청 제한을 없앴거나 자치구 편성안 중 최대금액임을 홍보한 점은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치적에 몰두한 선심행정으로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44	12. 1. (월)	김지연	<p>(저연차 공무원 면직 관련 대응 조치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우리 구 8·9급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2021년 8명, 2022년 13명, 2023년 17명, 2024년 12명, 2025년 12명으로 꾸준히 10명을 상회하고 있음 ○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재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충전을 위해 법령 기준의 범위에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원면직 전후로 충분한 면담과 진단의 기회를 마련하기 바람 ○ 조직을 이탈하는 면직 사유에 대한 조사는 조직 환경의 개선에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5년 미만의 의원면직은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23년 기준 신규 임용된 공무원 중 23%가 의원면직한 것으로 나타나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기준 기본급이 200만원으로서 서울시 주 40시간 기준 생활임금 246만원보다도 낮은 실태 ▲악성 민원 등 사회적인 부당한 대우 ▲과다한 업무량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우리 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우리 구에서 근무하다 면직한 저연차 공무원을 통한 진단이 필요함 ○ 하지만 부서에서는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그러한 진단에 필요한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즉, 부서는 다년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면직 비율 증가’를 ‘직원 복지 및 포상금 증진의 사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저연차 공무원의 면직 사유는 파악된 바가 없었음. 	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선에서 반드시 필요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5	12. 1. (월)	김지연	<p>[직원 상담프로그램의 이용자 지속 감소에 따른 홍보 강화 및 통계 구분 필요]</p> <p>○ 3개년 직원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88명 458건 2024년 51명 525건, 2025년은 10월 기준 45명 291건(12개월 단순 환산시, 54명, 349건)으로 상담 인원 및 횟수 등이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임. 1,441명 현원 중 3개년 평균 64명 이용은 약 4%의 이용률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p> <p>○ 본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83조이며, 특히 비밀보장은 83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어 상담 진행자의 인적사항(부서, 내용)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음.</p> <p>○ 타 지자체의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 통계를 제공받아 조직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이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심리적</p>	<p>○ 직원 심리상담서비스 증진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심리적 위기 직원의 스트레스 예방과 직무 소진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음</p> <p>○ 특히 감정노동 직군 및 대민업무 비율이 높은 직원 대상 별도 홍보가 필요함</p> <p>○ 프로그램 이용 실적의 상세 통계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관리의 통계적 근거를 마련함</p> <p>[상세 통계 제공의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주제별 인원 및 횟수 구분 -심리적 위기도 분류에 따른 인원 및 횟수 -성별, 연령, 직급 등에 따른 인원 및 횟수 -월별 신규 인원과 연속 상담 인원의 구분 등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위기 사유의 파악 및 조직 관리의 적용할 수 있어, 조직 관리, 복지 향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아울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할 수 있음.</p>	
46	12. 1. (월)	김지연	<p>[지역 및 광역 신문 구독 기준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우리 구 지역 · 광역 신문 구독 현황을 보면 21개 신문별 최소 3부 ~ 최대 1,103부를 단가 최소 2,000 원 ~ 최대 25,000원에 구독하고 있음 ○ 그런데 신문에 따라 단가가 10 배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나 기준이 없고, 이는 특정 신문의 단가가 변동되는 경우, 신문별 구독 부수의 차이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없이 설정되고 있음 ○ 부서의 설명으로는 구정 내용에 대한 포함 정도에 따른 구독 편차를 설명하였으나, 이는 지역 신문의 경우 대부분 영등포구의 콘텐츠를 보도하고 있어, 내용의 양적 면에서는 편차를 설정하기 어려움. ○ 명확한 구독 부수에 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에서는 신문 구독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및 광역 신문이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이 없다는 것은 공정하고 균형적인 보도를 지원해야 할 구청에서 특정 보도 방향에 대한 구독 편차를 두어, 편향된 시각에 대한 보도의 증폭을 유도할 위험성이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기준 매달 26,990,000 원씩 총 323,88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편성·집행의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47	12. 1. (월)	김지연	<p>[톡파원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부서별·동별 소관 단체 및 위원회, 지역 커뮤니티 내 회장·총무 등 운영자, 1인가구 집중 거주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 회원, 구민에게 구정 홍보 카드뉴스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동네 톡(Talk)파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톡파원 제도는 정책과 행정서비스 정보를 지역 구석구석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공정적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톡파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규정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여, 모집, 운영, 보상에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이로써 부적절한 보상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민에게 구정 홍보 전달에 대한 본 취지를 살려,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부서는 올해 7.8.~7.25. 토파원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질문과 함께 ▲토파원 위촉사실 인지 여부 ▲기본적인 토파원 역할 수행내용 ▲토파원 임기 연장 여부 등의 설문에 응한 모두에게 5천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였음 ○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의 보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부적정함. 위 기프티콘 제공이 기부행위 위반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인정하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여야 함 ○ 토파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SNS 서포터즈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설문조사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구정홍보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설문에 응하기만 하면 기프티콘을 제공받으므로 결국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가 아님 ○ 한편 2024년에도 토파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고 기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티콘이 지급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동안 구정 홍보 소식을 전달했던 사례 중 3장을 캡쳐해 첨부”하도록 했으므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어 조례에 근거한 금품제공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올해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특파원 운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적정함 	
48	11.22. (금)	김지연	<p>[영등포 소식지 편향, 왜곡없는 편집으로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소식지는 2025년을 기준으로 지면이 기존 16면에서 20면으로 확대되었고, 발행부수도 9만 부에서 14만 5천 부로 약 1.6배 증가하였음. 이는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이를 접하는 구민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콘텐츠의 사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과 기준 또한 더욱 엄격하게 요구됨. ○ 그러나 홍보미디어가 영등포 소식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 관련 부서가 제출한 원자료를 편집하는 단계에서 과장과 비약이 발생하여, 주민들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소식지는 지면 확대 및 발행부수 증가로 인해 공적 영향력과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원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게 편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p> <p>예시) 2025년 11월 영등포 소식지 20페이지 -문래공원 리노베이션(개선) 사업</p> <table border="1" data-bbox="488 528 969 724"> <tr> <td>정원도시과 제공 원자료</td><td>홍보미디어과 영등포소식지 편집 문장</td></tr> <tr> <td>25년 본예산으로 구의회 심의 확정된 사업입니다.</td><td>2025년 본예산 심의결과 '구의회 의원 모두가 찬성하여' 통과된 사업입니다</td></tr> </table> <p>○ 예산서에 포함된 모든 사업(문래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포함)이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는 점은 사실임. 그러나 이러한 결정 과정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 구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개별 사안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찬성·반대 의견을 표명함. 이후 이러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와 예산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됨.</p> <p>○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미디어과의 편집 문장과 같이 표현할 경우, 최종 예산으로 확정된 모든 사업이 마치 '구의회 의원 모두가 찬성한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심각히</p>	정원도시과 제공 원자료	홍보미디어과 영등포소식지 편집 문장	25년 본예산으로 구의회 심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결과 '구의회 의원 모두가 찬성하여' 통과된 사업입니다	
정원도시과 제공 원자료	홍보미디어과 영등포소식지 편집 문장							
25년 본예산으로 구의회 심의 확정된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결과 '구의회 의원 모두가 찬성하여' 통과된 사업입니다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게 단순화한 것은 물론, 명백하게 왜곡한 표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영등포 소식지는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당시 주민 민원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래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해 17명의 구의원 전원이 리노베이션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음. 이는 공적 홍보 매체로서 요구되는 사실성·중립성·책임성을 스스로 훼손한 부적절한 편집이며, 시정이 필요함. 	
49	12. 1. (월)	김지연	<p>[반장 임기의 규칙 재정비를 통한 반장 조직 활성화 근거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는 통·반장 위·해촉 및 임기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조례 제5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장은 임기 3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임기 제한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반면, 반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연임 제한은 없음(시행규칙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장의 임무 특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장의 임기 규칙과 같이 적절한 임기 및 연임 규칙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통장과 반장 간 임기 제도의 형평성 및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장 조직의 활력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해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반장은 사실상 무제한 임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제도적 미비가 존재함. ○ 반장은 주민 의견 전달, 사실 조사 협조, 안전·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동 행정을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구에서 추진 중인 반장 조직 활성화를 고려할 때, 반장의 역량·적합성·책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임기 제한이 없는 현행 체계에서는 ① 신규 참여자 유입 저해, ② 동일 인물의 장기 점유로 인한 조직 운영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통장과 달리 반장은 위촉 절차와 체계가 간단함에도 임기 제한 규정이 없는 점에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함. 	
50	12. 1. (월)	김지연	<p>[임신·출산 지원사업, 국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극적 추진체계 마련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임신·출산 지원 관련 주요 사업 중 집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홍보체계를 보다 적극적·확장형으로 개선할 것. ○ 홈페이지·소식지 홍보 외에도 산부인과·난임병원·대학병원·보육기관 등과의 연계 홍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20~37% 수준에 머무르는 사업이 다수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7%,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22%,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18% 등) ◦ 부서에서는 “서울시 전체 실적도 낮고, 다른 자치구도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오히려 전국적·광역적 차원에서 정책 정보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즉,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자치구는 중앙·광역 정책이 실제 구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해당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 및 필요성을 전제하여 예산배정을 한 것으로 예산의 범위 자체로 정책적 판단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치구는 정책이 실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돋는 조력 역할이 강조됨. 	<p>강화, 연령·상황별 타깃형 안내 체계 구축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국시비 매칭사업의 수요 예측을 면밀히 점검할 것. ◦ 반복되는 과다편성·미집행 사례가 있다면 정확한 수요 기반으로 조정 건의를 추진하고, 반대로 잠재 수요가 충분하다면 상담·발굴·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높일 것. ◦ 셋째, 분산된 임신·출산·난임 정보를 한데 모은 ‘통합 안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주민이 흩어진 정보를 직접 찾아 해매지 않도록 원스톱 기반 안내체계를 마련할 것. ◦ 넷째, 사전 수요조사 및 동주민센터·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실제 필요한 주민에게 정책이 도달하도록 할 것. ◦ 이는 단순 사업 운영을 넘어,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초자치단체가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임. ◦ 저출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홍보 실적을 보면, 많은 사업이 홈페이지·소식지 중심의 기본 안내에 머물고 있어, 산부인과·난임병원·보건소 등 실제 대상자가 있는 기관과의 협력 기반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는 정보가 필요한 구민에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실적 문제라기보다, 홍보 접근성 부족, 수요 예측의 어려움, 사업 구조가 지역 설정과 맞지 않는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을 의미할 수 있음. ○ 저출산 문제는 국가·광역·기초 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며, 특히 서비스 최종 제공 단위인 기초 단체에서의 수요 파악과 정책 효과성 검토 및 공유는 국가적 중요성을 가짐. 이에 적극적 제도 개선이나 기준 조정을 조율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함. ○ 그렇기 때문에 부서가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 위에, 구민 발굴·기관 협력·홍보체계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한다면 	께 만들어 가야 할 국가적 과제임.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 걸음 더 적극적인 조력과 추진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훨씬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 이라 판단됨.	
51	12. 1. (월)	김지연	<p>[안양천 체육시설 개선사업 추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에서는 올해 안양천 체육시설 중 양평누리 체육공원 성인 야구장 및 테니스장, 문래동 영통이 역새1축구장 등 일부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였음 그런데 양평누리 체육공원 성인 야구장의 경우 마사토 내야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이 필요해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9월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해 시행이 지연되면서 결국 예산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됨 영통이 역새1축구장의 경우 기존 마사토 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가동형 펜스를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해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는데, 설계용역조차 내년으로 지연되고 명시이월됨 양평누리 체육공원 테니스장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에서는 더 이상 해당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천점용허가 취득을 위한 준비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하천점용허가가 전제되는 경우와 같이 예측하기 어렵고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정이 없는 한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면 확충의 경우 또한 지난 4월 서울시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예산을 교부받았고 이후 제2차 추경으로 재원 확보가 완료되었으며 10월 29일부터 설계용역에도 착수했음에도, 하천점용허가를 올해 12월에야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은 명시이월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시급성 ·필요성 ·중대성을 내세워 추경편성을 관철시켜놓고도 각각 ▲자신했던 하천점용허가 취득에 실패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지체하거나 ▲설계용역을 자체하는 등 추경편성 당시의 적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여 결국 추경편성이 무색하게 명시이월되었음 ○ 지난 추경예산안 심사 당시 하천점용허가가 전제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추경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염려에 대해 부서에서는 ▲변경허가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추경편성 후 설계를 통해 허가를 득한 후 진행하여 내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 결과적으로 본다면 근거 없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부정확한 예측을 통해 성급한 추경편성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되었고, 영통이 억새1 축구장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추진을 해태하여 사업이 더욱 지연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해당 사업들은 추경편성이 부적정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한 사업지연 및 명시이월로 인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음 	
52		신흥식	<p>[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미흡. 미래교육재단 기부 활성화 적극 대책 마련 재촉구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출연금·기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부금은 감소 또는 정체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음. ○ 상세히 살펴보면, 미래교육재단의 출연금은 2023년 462백만원, 2024년 1,124백만원, 2025년 1,613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부금은 2023년 44백만 원, 2024년 29백만 원, 2025년은 11월 현재 25백만 원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증가 대비 기부금 감소 흐름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순 홍보 수준을 넘어 기부 활성화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 줄 것을 요구함. ○ 다양한 기부자층 발굴, 민간 협력 확대, 기부 문화 조성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기부 유치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기부자니즈 분석·동기 파악·선호 분야 조사·기부 결과 확인 방식 등 기부자 분석 체계 구축을 요청함. 그리고 이를 위해 기부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기부 활성화 미흡”이 2025년에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재단은 기부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기부금 전달식 개최 및 언론보도, 재단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운영, 정기기부자 감사편지 발송을 수행했다고 하나, 기부금 총액 감소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낮은 활동에 머물러 있음. 	<p>인터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정례화할 것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원하는 기부자에 한해 개인정보보호 규정 범위 내에서 기부금 사용내역·성과·수혜사례 등 결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부자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체계는 기부 신뢰도와 참여율 제고에 필수적임. ○ 타 지자체 및 재단의 우수 기부유치 사례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재단의 기부유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타 기관의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략을 도출해야 할 것임. ○ 끝으로, 현재 기부 활성화 전략이 충분히 검토되거나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부금 감소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함. ○ 예산 소진이 미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2025년도는 1월부터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빠르게 사업 추진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인정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공고문을 안내하고,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문자발송 등 지속적인 안내 필요함.
53	11.26. (수)	신흥식	<p>[홍보물품 선정·예산 집행 전반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의 홍보물품 선정과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었음. 2025년 한 해 동안 보건소 4개 과의 홍보물품 구매 예산은 총 209,102천원으로 파악됨. 문제는 단순한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집행되었는가임. 자살예방사업 홍보로 양산, 모기퇴치 팔찌, 마약·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물로 계란찜기,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핸드크림 등 사업 주제와 무관한 홍보물품이 반복적으로 선정됨. 그리고, 물품별 홍보 효과, 주민 행동 변화 기여도, 메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는 예시일 뿐, 이는 모든 부서 공통의 문제임. 첫째, 사업 목적·대상·행동 목표와의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홍보물품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 둘째, 홍보물품의 효과성 검토 및 성과지표를 도입할 것. 셋째, 구매 항목 중 주제와 부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내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 홍보물품은 단순한 판촉물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의 요소임. 세금으로 제작·배부하는 물품인 만큼, 사업 목적에 맞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함. 보건소 및 부서 모두 '효과 중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전달력 평가 등 성과 분석이 부재하여 관성적·반복적 구매가 지속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품 선정·구매에 대한 사전 기준 자체가 없음. 	<p>심·목적 중심'의 예산 집행 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과에서 구청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기 바람.
54	11.26. (수)	신흥식	<p>[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대응 미흡 및 자료제출 체계 보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28일 까지 공공시설에는 '정당한 편의 제공' 요건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됨. ○ 이에 민원여권과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약 5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총 35대(교체 33대, 신규 2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기준 조달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사업 추진 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1차·2차 구매 단가 차이 발생 경위, 구매수량 산정 기준,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서는 소관 사업의 추진 내용·근거·예산 구조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도록 내부 검토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충분하고 투명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 기준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함. ○ 감사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자료 제출·보완 설명을 기본절차로 운영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함. ○ 종합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구청 전반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의회와의 소통 및 협조를 강화하고 감사 대응 체계를 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달방식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담당 팀장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자료도 최소한의 개요 수준에 그쳐 충실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감사장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사후 추가자료 제출이나 보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아쉬운 부분으로, 사업 자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대응은 미흡했음. ○ 이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라기보다,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감사 대응 및 자료 제출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라 판단됨. 	부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55	11.26. (수)	신흥식	<p>[공유촉진위원회 기능 미이행에 따른 정책 추진 미흡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촉진 조례」는 공유 촉진 정책 추진과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촉진 조례」에 따라 구는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그러므로 적극행정 관점에서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유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조례에 명시된 연간 개최 횟수 규정은 없으나, 정책 수립·평가, 제도 개선 등 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회의를 미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56	11.26. (수)	신흥식	<p>[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기능 미이행에 따른 정책 추진 미흡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가 주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조례에 연간 개최 횟수에 대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사회통합 및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만큼, 위원회를 통해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적극행정 관점에서 안전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적 규정은 없으나, 사회적경제 정책 발굴·지원 등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회의를 미개최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57	11.28. (금)	신흥식	<p>[여의도브라이튼 도서관 개관 지연에 따른 예산낭비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브라이튼 도서관은 당초 계획이 현재 조성 내용과 유사하며, 개관은 2023년 11월 예정이었음. ○ 최호권 구청장은 취임 후 도서관 조성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사업계획을 2차례에 걸쳐 변경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결국 도서관 개관은 2년 이상 지연되었음. ○ 또한, 개발사업주체인 (주)신영에서 4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었으며, 구청장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2년 동안 착실하게 개관을 준비해서 2024년 말에라도 개관했다면, 2025년 내내 해당 공간을 공실로 두게 되어 사용 없이 비용만 지출한 예산낭비는 없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단적이고 성급한 사업 중단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낭비와 함께 구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점과 돌이킬 수 없는 행정 신뢰도 하락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임. ○ 남은 임기동안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대형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일정 변경 시에는 의회 보고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필히 거쳐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예산 낭비는 총 273,100,140원임. 물론 2026년 2월로 연기된 개판 시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정책 혼선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구민에게 돌아 갈 공익 제공의 기회가 2년 이상 지연되었음. ◦ 구청장 임기 초반,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5분발언, 주민들의 민원을 통한 항의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언 등 영등포의 많은 관계인들이 원안대로 도서관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58	11.28. (금)	신흥식	<p>[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미수립 및 위원회 미구성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미수립,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미구성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개정 예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명시된 대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심사 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발전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해당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은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59	11.24. (월)	우경란	<p>[여의도브라이튼 도서관 조성 지연 및 사업 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브라이튼 도서관은 여의도 및 영등포구민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수차례 지연 끝에 2025년 12월 개관 예정이었으나, 다시 2026년 2월 임시개관, 2026년 3월 정식 개관으로 개관 일정이 연기되었음. ○ 도서관이 조성되는 브라이튼 시설은 오피스·공동주택·판매 시설로 관리 주체가 3곳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공사 진행 및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 ○ 각 관리사무소가 제기한 요구 사항과 민원 제기로 자재 반입·폐기물 반출 시간 제한, 점심시간(11~14시) 소음·진동 작업 금지, 구조기술사 검토 및 보완공사, 도면상 확인이 불가했던 타 시설 선로 단선에 따른 복구 공사 발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브라이튼 도서관 조성공사가 주민의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신경써줄 것을 요구함. ○ 공사 착공 이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 처리 프로세스 정비 및 관리사무소와의 지속적 소통체계 구축을 요구함. ○ 과거 공사 지연 및 추가 예산 소요 사례를 참작하여, 향후 유사 사업에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 예산 관리, 설계 검증체계 강화를 당부함. ○ 마지막으로, 개관 연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간 진행 상황 공개, 공사진척도 관리, 개관 일정 준수 등 투명한 관리·보고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복합적 제약이 누적되며 공사 일정이 순연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천장(텍스) 철거 후, 상가·오피스·공동주택 공용 배관이 다수 통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도서관 배관, 환기, 전기 시공 등이 원 설계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조 보완과 설계 변경 검토 등이 추가로 필요해 공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음. ○ 그리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선급금 지급 및 관급자재 발주가 약 2주 지연되어 착공 일정이 추가로 밀렸음. ○ 그 결과, 개관 지연과 추가 공정으로 인해 도서관 개관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공시설 지연 사례는 구정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지난 신길3동 공공복합청사 및 신길6동 자치회관의 흡음재 추가 공사가 설계단계의 예측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점과, 신길책마루문화센터가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22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까지 총 3년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사 지연과 추가 공사, 이로 인한 예산 증가라는 패턴이 재차 반복될 수 있음.	
60	11.25. (화)	우경란	<p>(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종합병원 수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공항 및 육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며, 여의도와 한강 등 수변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됨 ○ 이러한 지역의 의료·관광 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제도가 시행 중이고, 우리 구도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팬데믹 등을 이유로 지정연장이 유보되었다가 올해 다시 2027년까지 연장되었음 ○ 다만, 당초 특구지정뿐만 아니라 이번 지정연장도 마찬가지로 관내 의료 인프라에 대한 환자 유치가 주된 취지이고, 이를 관내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를 조속히 정비하고, SNS계정 홍보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또한 향후 SNS계정 홍보·관리 용역업체 선정 시 과업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이나 기준을 보완하여 업체에 대한 역량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기 바람 ○ 나아가 우리 구는 화상, 뇌질환 등 특성화 진료과목 또는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병원과 건강검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우리 구 의료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간병 서비스, 동반인 체류 지원, 치료 후 요양·치유 등의 웰니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역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이며, 구청은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의 가교로서 광고·홍보를 담당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구청이 담당한 역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숙박, 외식, 관광시설 등 협력기관 소개 페이지 전부와 다국어 화면에서 연결되는 유튜브 링크가 모두 오류인 상태임. 또한 그 밖의 기본정보, 관광정보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한국어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 콘텐츠의 개수도 과업지시에 충실한지 의문이고, 콘텐츠의 질 또한 간단한 의료관광 소개, 맛집·관광명소 소개가 전부일 정도이며, '팔로워' 8천명에 비해 '좋아요'가 비정상적으로 적고, '팔로우'나 '추천'을 한 계정은 운영되지 않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다국어 인스타그램 계정의 경우에도, '팔로워' 2000 ~ 4000, '팔로잉' 5 ~ 40여명에 그치고 있어 부실하고, 공식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계정에 걸맞지 않는 팔로잉도 다수 발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하여 홍보·관리 용역 업체 선정도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됨.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90 점, 입찰가격 평가 10점의 배 점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술능력 평가에서는 최종 2위 업체가 78.9점을, 최종 1위 업체가 그 보다 0.5점 낮은 78.4점을 받 았음. ○ 그런데 가격평가에서 최종 1위 업체가 3개의 입찰경쟁 업체 중 유일하게 추정가격보다도 낮 은 금액을 입찰하여 10점 만점 을 받았고, 최종 2위 업체는 그 보다 0.5088 낮은 9.4912점을 받았음 ○ 결국 90점 배점인 기술능력 평 가에서는 최종 2위 업체가 0.5 점 앞섰는데, 10점 배점인 가 격평가에서 최종 1위 업체가 0.5088점 앞서면서 최종 순위 가 뒤집힌 것임. 기술능력 평가 가 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 질적인 변별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물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1위업체의 부실한 과업 수행 성과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현행 기술능력 평가 기준이 업체의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측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61	11.25. (화)	우경란	<p>[치매 유병률은 높은데 사업은 최소 수준... 치매안심마을 운영 전반의 재정비 및 예산 정상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의 치매 유병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조기검진·예방·가족지원 등 핵심 사업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검진은 동당 연 1~3회, 예방 프로그램은 동당 1개뿐이며,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는 인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임. 치매안심마을은 조기검진 - 인지예방 - 가족지원 - 가맹점 관리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임. 그러나 영등포구는 해마다 예산 규모가 작고, 연도별 편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치매안심마을 예산의 대폭 증액 및 안정적 확보 필요. 치매관리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예산 조차 부족한 상황임. 최소한 조기검진·예방·가족지원·가맹점 관리에 필요한 기본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고려할 것. 특히 매년 들쭉날쭉한 편성 방식이 문제이므로, 연속성·지속성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함. 둘째, 사업 규모와 예산을 연계한 현실적 운영체계 마련 시급. 치매 유병률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 예산이 최소 수준에 머무는 한, 조기검진 확대·프로그램 다양화·가족지원 도입은 불가능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커 지속성도 담보되지 않는 구조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조기검진 확대·예방 프로그램 다양화·가족지원 도입·가맹점 관리 강화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현행 예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이는 사업이 “형식적 운영”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결정적 요인임. ◦ 즉, 영등포구는 치매 유병률은 높지만, 치매관리 예산은 서울시 대비 최하위권 수준으로 낮아, 정책 대응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할 것. 홍보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예산을 “실적이 아닌 서비스”에 투입하도록 재설계해야 하며, 예방 프로그램·가족 지원·가맹점 관리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 영등포구는 치매 유병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안심마을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속성도 없는 수준임. ◦ 이러한 상태에서는 치매 예방·조기발견·가족지원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결국 사업은 ‘홍보 중심·최소 운영’으로 머물 수밖에 없음. ◦ 치매는 장기·지속적 관리가 필수인 질환으로, 예산 확대 없이는 어떤 개선도 의미가 없음. 따라서 영등포구는 치매안심마을을 실질적인 치매관리 기반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 예산 정상화·안정적 확보·증액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요청함.
62	11.25. (화)	우경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서울시 주관 전환에 따른 이용지원 공백 및 사용률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지적된 낮은 사용률 문제와 장애인 이용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 주관 체계 속에서도 자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자치구가 수행하며 비교적 밀착형으로 운영해왔음. ○ 특히 우리 구는 상담센터를 운영해 신청 지원, 기관 매칭, 상담 기능을 제공한 바 있음. ○ 그러나 2025년부터 본 사업이 서울시 주관·자치구 협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자치구의 직접 지원 기능이 축소되고, 상담·이용 지원 창구도 서울시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 지원 공백이 발생함. ○ 장애인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발급·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2025년 영등포구 차원의 상담센터나 별도 지원 창구가 운영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축소된 상황임. ○ 2024년 결과보고에 따르면,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률은 58.9%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온라인 접근 어려움, 교육기관 정보 탐색, 카드 사용 등 장애 특성에 기 	<p>치구 차원의 이용 지원 기능을 보완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함.</p> <p>○ 서울시 상담체계만으로는 영등포구 장애인의 신청·이용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우리 구 자체 지원 시스템 마련을 요청함.</p> <p>○ 운영기관이 자치구별 사용 실적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머물지 말고, 선정자 명단 기반의 자체 모니터링·사용 안내·기관 매칭 등 자치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p> <p>○ 또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자치구 역할 확대 및 정보 공유 체계 확보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p> <p>○ 영등포구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접근 지원, 신청 절차 안내 강화, 이용기관 정보 제공, 저사용자 관리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원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인한 이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에도 2025년 서울시 주관 전환 이후 사용률 제고를 위한 별도 방안이나 보완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서울시 운영체계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음. ○ 또한, 운영기관인 서울시 평생 교육진흥원은 자치구별 사용 실적 현황을 제공하지 않아, 자치구는 지역 내 선정자의 이용 현황, 미사용자 파악, 사용 독려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 이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성공 여부를 자치구가 확인하거나 개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임. ○ 2025년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300명에서 60명으로 1/5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접수 경쟁률은 1.1:1에 그쳐 참여율 또한 높지 않은 상황임. ○ 전년도보다 지원 인원이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 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차원의 능동적 관리·지원체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가 부재하여 사용률 제고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63	11.27. (목)	우경란	<p>[현업직 및 촉탁직 인사 운영 절차·기준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은 정년 이후에도 충분히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단 또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공단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고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단체협약」, 「무기근로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해 촉탁계약 직원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촉탁계약직 채용은 공단이 정년 퇴직 전 대상자 희망원을 접수 받아 『촉탁계약직 재고용 인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년퇴직 이전 3년내 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신체검사 결과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침 ○ 그런데 정년퇴직까지 길지 않은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신규 채용된 직원의 경우, 공단에서 단기간 근무하고 정년이 도래하면 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어 촉탁계약직 제도의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공단은 촉탁계약직 제도의 운영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되는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촉탁계약직의 자격 요건에 정년퇴직 당시 근속 연수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 「무기근로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인사관리규정」 등 근거 규정을 점검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론 일반적으로는 정년에 가까운 고령의 현업직이 신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는 않음. 2025년의 경우 상반기 22명, 하반기 17명의 촉탁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는데, 정년퇴직 당시 근속 연수는 최단 2년 10개월, 최장 20년 11개월, 평균 12.5년인 것으로 확인되어, 대체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보임 ○ 하지만 신규 현업직 채용 전형에서 정년을 불과 몇 개월 채 남기지 않은 연령의 지원자가 합격해 근무 중인 경우 또한 있어, 위와 같은 촉탁계약직의 문제점은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아야함 	
64	11.27. (목)	우경란	<p>[고용률 양적 성과와 함께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의 질 제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가 최근 고용률 등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여 지역 고용정책을 선도하고 있음. 다만, 세부 사업별 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개선 여지가 있음. 올해 상반기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박람회의 경우 반복되는 낮은 참여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청년층이 선호할만한 다양한 직무군의 기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취업을 위한 교육 사업인 만큼, 취업에 이르지 못한 수료자에 대한 향후 취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업박람회에서는 구인 규모가 261명이었으나 실제 면접 참여 인원은 318명으로, 구인 규모 대비 면접 참여율이 낮은 편이지만 부서는 “매년 통상적인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청년층 참여율이 1/4 수준인데 비해 직무군이 다양하지 않음.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과정의 경우 취업률이 5%에 불과함.	
65	11.28. (금)	우경란	<p>[대림중앙시장 상인교육 예산 집행의 과다 및 운영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림중앙시장 상인교육은 총 12시간 과정,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노동법·상가법, 켈리그래피, 디지털마케팅, 유튜브 촬영·편집 실습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전체 사업비는 1,400 만원으로, 일반적 소상공인 교육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음에도 교육 시간·교육생 수·교육 방식을 고려할 때 소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한 다른 교육사업과 비교하여 예산이 다소 높게 지출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상인교육 추진 시 강사료 책정 기준, 실습비, 장비대여비 등에 있어 비용 구조를 현실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66	11.28. (금)	우경란	<p>[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의 미흡한 구조, 즉각적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을 검토한 결과, 플랫폼 미등록·검색 오류·홍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행안부 개방형 플랫폼 (웰로·위기브) 및 고향사랑e음에 즉시 등록·정비하여 기부자가 영등포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재·답례품 부적정 구성 등 전반적인 운영 구조의 미흡함이 확인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네이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상단에 노출되는 행안부 제공 개방형 플랫폼(웰로·위기브)에 영등포구는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행안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에서 ‘영등포’를 검색해도 어떠한 답례품도 노출되지 않는 오류가 장기간 방치되어 왔음. 이는 행정이 기본적인 플랫폼 관리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 구청 홈페이지에도 고정된 홍보가 없어, 시민은 직접 검색·탐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답례품 구성 측면에서도, 지역성 반영이 미흡하여 선호도 기반 설계 없이 ‘상품권’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영등포구 내에서 최근 다양한 중소기업·로컬 브랜드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답례품 공급단체로 적극 발굴·유치하려는 노력 역시 부족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플랫폼 내 검색 태그·노출 오류를 전면적으로 점검·수정하여 기부 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도록 해야 함. ○ 셋째, 구청 홈페이지 내에 고향사랑기부제 상시 홍보 창구를 구축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함. ○ 넷째, 지역성·선호도·영등포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답례품 재편 및 지역기업 발굴·유치가 필요함. ○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임. ○ 이번 기회를 통해 영등포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기부자가 영등포를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기부자를 유입시키는 구조·노출도·상품 구성·홍보·제도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정비가 시급한 상태임. 	
67	11.24. (월)	이규선	<p>[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기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40명이며 체납액은 47억 원 이상임. 반면 올해 징수 목표는 91억 원으로, 목표액의 절반 이상이 고액 체납자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공무수행 관점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 징수 전략이 필요하므로 현장 징수 공무원의 의견 반영, 타지자체 징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고액·장기 체납을 별도 분류한 맞춤형 목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68	11.24. (월)	이규선	<p>[골목형상점가 행사 성과관리 미흡 및 예산 집행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평가·성과보다는 관행적 예산집행에 치우친 것으로 보임. 2024년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 자료를 보면, ① 쿠폰 판매 목표와 실제 판매량 간 큰 차이가 있으며, 방문자 수 예측 및 쿠폰 정책 설정 실패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적·참여 인원 데이터도 불명확함. ② 매년 반복되는 행사임에도 매출 증대·상권 활성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목표, 운영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분명한 운영방식을 세우기 바라고 행사 성과(매출, 방문자 수, 상권 활성화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하기 바람. ○ 공연팀 섭외 시 공모 방식이나 지역 연주자 발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기준 없이 섭외하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 퀄리티에 따라 개별적 가치를 평가하여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예산 규모는 동일하더라도 행사 전반의 공연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실질 성과 평가가 부족함.</p> <p>③ 6개의 공연팀을 섭외하고 일괄 50만원씩 지급한 것은 연주 퀄리티, 인지도에 대한 평가는 없이 행정 편의에 따라 행정 집행한 것으로 보임.</p> <p>④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후 매출 증감 자료 요청에 대해 '인근 지역 대비 활성화'라는 단편적 설명만 제출되어 객관적 지표 부재 혹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임이 드러남.</p>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길 바람.
69	11.24. (월)	이규선	<p>[소상공인 교육사업 참여율 저조 및 관리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소상공인 디지털전환교육, 창업아카데미,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그러나 상반기 디지털 전환 교육의 경우 수업별 출석률이 평균 50% 미만이며, 창업아카데미의 수료율은 74%, 문래동 소공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율은 75%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 무료 교육이라는 특성으로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률 제고를 위한 의지 있는 교육생 선발 기준 마련 필요. ○ 성실하지 않은 교육생에 대한 지원 중단·환수 등 조치에 대해 검토하여 사업 실효성 제고하기 바람. ○ 나이도 및 교육내용에 대해 사전에 자세하게 안내하여 교육 품질 및 참여 지속률 개선 필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실하지 않은 참여자 이탈이 반복되지만, 지원 중단·교육비 환수 등 조치가 전혀 없음.</p> <p>○ 또한 설문에서는 난이도 불적합, 설명 부족 등 교육 품질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됨.</p>	
70	11.24. (월)	이규선	<p>[직원 복리후생 운영 미흡]</p> <p>○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내 배낭연수를 통해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소통을 활성화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수 기간에 따라 직원 1인당 당일은 10만원 내, 1박2일은 20만원 내, 2박3일은 31만원 내의 경비를 각각 지원하고 있음</p> <p>○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100팀 457명의 직원이 참여해 114,189,000원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 48팀 215명이 참여해 35,800,000원이 지원될 예정임</p> <p>○ 그런데 보다 많은 직원의 참여를 위해 매 반기별로 직전 미참여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나, 1년 단위로 보면 중복 참여할 수 있고 실제 매년 중복 참여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임</p>	<p>○ 직원 배낭연수의 경우 현행 신청요건인 “직전 반기 미참여”를 “직전 연도 미참여”로 변경하는 등, 보다 많은 직원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p> <p>○ 직원 휴양소 이용 지원의 경우,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휴양소 발굴, 연 1회 이상 직원 선호도 조사 실시 및 반영, 별도의 휴양소 신청 시스템 구축 등 개선 사항을 적극 개진함</p> <p>○ 다만 현행 사업 방법을 전제로 한 미비점 보완 및 개선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업 방법의 재구상 또한 모색하기 바람.</p> <p>○ 구체적으로는 콘도 법인 회원권 운영은 유지하되, 일반 휴양소는 직원이 자유롭게 원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자율이</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은 직원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8개 60구좌의 콘도 법인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고, 여수의 32평 아파트를 휴양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고급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객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음 ○ 콘도의 경우 직원 신청에 따라 각 콘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대리예약을 해주고 있는데 성수기나 인기있는 일자에는 이용가능성이 높지 않고, 임차 휴양소는 극소량의 한정된 시설을 전 직원이 이용하고자 하므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해 이용자를 엑셀에서 무작위 추첨하거나 부서별 인원 비례하여 할당 후 부서 자체에서 선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직원의 수뿐만 아니라 숙박 기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실제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그러한 의견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작위 추첨이라는 우연한 결과에 따른 이용 여부의 결정은 직원들의 안정적이고 고른 휴양소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휴양소 이용 지원 방식은 업체 협회·계약, 이용 신청 접수, 대리 예약, 이용자 	<p>용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함</p> <p>○ 서울시뿐만 아니라 양천구 등 다수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해당 방식으로 휴양소 이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올해부터 해당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음</p> <p>○ 타 자치구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도 높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첨, 부서별 인원 배정 등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망라되어 담당부서의 업무를 과도하게 가중시키고 인력 부족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71	11.24. (월)	이규선	<p>[영등포아트홀 공연장 안전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법」 제1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 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안내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 및 방향이 피난안내도상에 표시된 형태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비치하여야 하고,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트홀 관람객 출입문에 부착된 피난안내도를 법령 기준에 부합하게 보완하여야 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에서 조속히 개선하여 제작·제시할 것을 표명함 ○ 향후 관객의 관람 위치 등 연출 형태가 특수성을 띠는 경우, 비상시 별도의 피난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시행하여 공연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난사다리 등의 위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 소화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 및 심장박동기 등 응급 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p> <p>▲현재 위치가 표시된 피난안내도의 위치 ▲비상 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 피난 및 대처 방법이 포함된 내용으로,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아트홀 4개의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피난안내도 중 2개는 피난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또 다른 2개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지 않아 법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공연장의 어두운 환경적 특성상 비상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해 피난유도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는데, 아트홀의 경우 객석 내 통로 총 16개소에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런데 관객의 피난동선이 일반적인 공연과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연출의 공연의 경우, 해당 공연에 필요한 별도의 피난대책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이 마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8. 8.부터 3일간 아트홀에서 상연된 『마법의 회전목마』 공연은 무대 위에 마련된 별도 객석에서 관객이 관람하는 형태로서, 비상시 관객의 피난 동선이 평소와 달라지므로 그에 따른 별도의 피난유도선 설치 등 대책이 마련되고 관객에게도 주지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됨 	
72	11.24. (월)	이규선	<p>[양평누리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운영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누리 체육공원 파크골프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월·수·금 및 격월 토·일 중 1일을 영등포 파크골프협회가 소속 클럽에 한하여 이용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나머지 일자를 시설관리공단이 구민 우선 온라인예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위탁 절차도 없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일반 구민의 이용 기회 배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은 협회원, 지역주민, 그 밖의 일반 이용자 모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정하고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 이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서에서는 구청·시설공단·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클럽장 회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음 ○ 내년 제2구장 조성을 전제한다면, 규모에 부합하는 예약 및 이용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또한 있으므로 해당 계획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협회가 우선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 이용자 중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층 비율이 높아 예약의 편의를 위해 협회를 통한 이용신청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 인근 타 자치구의 안양천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도 지역 협회의 우선사용 비율이 각각 양천구 72%, 구로구 70%, 금천구 67%로 우리 구 57%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 협회의 우선사용이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73	11.25. (화)	이규선	<p>[동행정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하위동 관리 강화 및 후속조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상반기 동행정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우수는 양평2동, 우수는 도림동·신길 7동, 장려는 대림3동·신길5동·영등포본동으로 선정되었음. ○ 각 동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수상 동별 우수직원에게도 포상(도서문화상품권 10만원)이 이루어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처럼 상위권 동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중·하위권을 반복하는 동은 평가결과 분석과 부진지표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속적인 부진이 더 이상 누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함. ○ 특히 자치행정·도시안전·생활보건 등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인 동에 대해서는 부서 맞춤형 컨설팅, 실무교육 강화, 타동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행정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평가는 19개 분야, 30개 단위사업, 57개 항목을 대상으로 정량평가는 부서장, 정성 평가는 자치행정과장이 실시했으며, 평가 분야에는 자치행정·홍보·복지·도시안전·생활환경·보건 등 다양하고 핵심적인 동행정 기능이 반영됨. ○ 각 동에서는 구정 발전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평가결과를 보면 동별 행정 역량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분야별 점수에서 상·하위 그룹 간 격차가 확인됨. ○ 특히 상위권의 경우 일부 동이 2024년 하반기에 이어 2025년 상반기에도 연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행정역량의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하위권은 전년도 대비 결과가 반복되었다고 단정할 수준은 아니나, 일부 동은 중·하위권을 지속적으로 오가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확인됨. ○ 이러한 결과는 특정 동에서 기 	<p>요청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동에서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위권 동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 도입 및 부진 분야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구 차원의 행정지원 및 인력·업무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함. ○ 나아가 평가제도가 단순한 순위 산출이 아니라 동행정 품질 향상을 위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재구성, 동별 여건 반영, 정성평가 기준 투명화 등 평가체계 자체의 개선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함. ○ 끝으로 모든 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부서간 회의·직무재설계·교육훈련 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여 동행정 전반의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초 행정, 홍보, 도시안전, 생활건강 등 핵심 분야의 업무 수행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일회성 평가 결과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정 역량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권이 특정 동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일부 동이 지속적으로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은 동행정 품질평가가 전체 동 행정 서비스의 균형적 향상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제 행정역량을 반영하는 만큼, 일부 동의 반복적 부진을 단순한 점수의 문제가 아닌 지속적·구조적 개선 필요 지표로 보아야 하며, 평가제도 상의 후속 조치와 동 단위 역량 강화 정책 마련이 요구됨. 	
74	11.25. (화)	이규선	[노후 청사 누수·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 보수 및 신청사 추진 속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청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 공사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청은 1976년 준공되어 약 50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건물 노후와 부서 분산으로 인한 행정효율 저하와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구에서 신청사를 추진 중인 점은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현 청사의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직원 안전·근무환경·행정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심각한 수준임. ○ 보건소 펌프 노후로 인한 간헐적 단수, 보건소 분소 안전성 문제, 별관 외벽 마감재 탈락 위험이 확인되었으며, 본관 4층 사무실, 본관 6층 서고, 별관 1·2·6층 사무실, 보건소 6층 직원 휴게실(영침이) 등 여러 공간에서 누수가 심각한 상황임. ○ 일부 공간에서는 비가 새어 책상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피하며 근무해야 하는 사례까지 보고되었음.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근무환경 침해·안전 위협·업무 중단 위험이 모두 결합된 중대 문제임. ○ 신청사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사 입주는 2031년으로 약 6년 이상 남아 있어, 그 	<p>조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신청사 추진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 속도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셋째, 신청사 입주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누수·외벽 낙하·전기 위험 등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민 중심의 청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함. ○ 넷째, 청사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함. ○ 이는 직원 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임. ○ 총무과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구민 불편·민원 증가·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기간 동안 직원·구민 모두가 현재의 노후 청사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현재 제시된 대책은 보건소 옥상 방수, 별관 외벽 마감재 교체, 외벽 타일 점검 등 일시적·응급조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함. ○ 이러한 상태가 유지될 경우, 누수로 인한 전기 합선, 외벽 낙하에 따른 안전사고, 사무실 침수로 인한 업무 중단 등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청사 누수 및 외벽 탈락 위험은 단순한 시설관리 문제가 아니라 직원 안전과 구민 안전,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사안임. ○ 신청사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임시 보수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대규모 보수·보강계획이 필요한 실정임. 	
75	11.28. (금)	이규선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실 효적 다회용품 사용환경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취지에 맞게 다회용품 사용률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본청 및 도서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텀블러 자동세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 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함. ○ 그동안 우리 구는 다회용컵 사용 장려, 청사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점검, 다회용컵 협력 카페 운영 및 반납함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제 청사 내에서 다회용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현재 일부 화장실 세면대에 설치된 간이 세척장치는 세척 성능 및 위생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직원 및 이용객들의 실질적 사용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청사 출입구, 다빈도 이동 동선 등에 텀블러 자동 세척기 또는 살균세척기기를 설치하여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1회용컵 감축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 	<p>척기 설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p> <p>○ 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직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이용 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줄 것을 요청함.</p> <p>○ 덧붙여 관계부서에서는 텀블러 세척기기 도입 시 이용률·반납량·1회용컵 사용 감소율 등 정량적 지표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사례로 평가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상시 이용 인원이 많은 본청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는 다회용컵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경우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우리 구도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76	11.28. (금)	이규선	<p>[공유주방·체력단련실 CCTV 설치 예산의 편성·집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자치회관 체력단련실 및 공유주방 CCTV 설치를 위해 1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해당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계상됨. ◦ CCTV 신규 설치는 자산 취득 성격이 강하므로 ‘시설비 및 부대비(401), 시설비(01)’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지 관리 비용은 ‘일반운영비(201), 공공운영비(02)’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함. ◦ CCTV를 렌탈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 자치회관과 공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방·체력단련실 CCTV 설치 예산이 소모품 구입 등 예산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목적·집행 범위·세부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함. ◦ 향후 CCTV 및 안전설비 관련 예산 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비목 편성뿐 아니라 사업 방식의 타당성·비용 대비 효율성까지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함. ◦ 마지막으로 CCTV 렌탈 방식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인지 검토한 자료(경제성 비교, 유지관리 비용, 장기 운영 평가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방은 상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며 CCTV는 고정설비의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구 시설 대부분이 구매 설치 방식임을 감안하면 시설비 편성이 보다 적정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렌탈 방식은 초기 비용은 낮아 보일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동안 총 비용이 구매·설치 방식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유지관리 품질이 업체에 따라 편차가 있어 장기적 안전관리 체계에도 불리할 수 있음. ○ 또한 공유주방 운영 소모품(종량제봉투·반찬통 등) 구입에 CCTV 설치 예산이 사용된 사례는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며, 이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 목적 제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집행임. ○ 결과적으로 CCTV 설치 예산의 비목 선택, 예산 목적 외 집행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 편성 및 집행 과정 전반에서의 적정성·계획성 부족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함.
77	11.28. (금)	이규선	(세입징수 포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조직도 실적 중심 평가가 필요하다 여겨지는 사회적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따라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 4조(지급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일정 지급액이 넘으면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흐름 속에서 현행 지급한도는 징수 실적 향상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완화하여 징수 업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실적 제고를 유도할 수 있길 바람.
78	11.28. (금)	이규선	<p>[영등포구새마을회 보조금 사업의 계획·집행 불일치 및 사업관리 전반의 투명성·책임성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새마을회 보조금 지원 사업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계획 대비 미흡한 이행, 반복적인 사업 변경, 정산 근거 부족, 산출내역의 형식적 작성 관행 등 사업 전반의 관리체계에 다수의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음. 이는 보조금 사업의 핵심 원칙인 투명성·적정성·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임. 먼저 '여의도쉼터 문화공원 가꾸기' 사업은 300명 참여를 계획하고 정화활동·묘목 나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정산자료에서 현장 사진·활동일지 등 기본 증빙자료가 부재하였고, 군집기 구매 외 예산 집행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활동 추진 여부조차 검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사업 계획·집행·정산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활동 사진, 참여자 명단, 배부내역, 사업일지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 체계를 재점검 할 것을 요청함. 사업 미추진 또는 단순 행사성·일회성 사업으로의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변경 승인 기준 명확화, 사업 변경 사유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함. 대규모 행사 미추진 후 성격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 목적·대상·효과의 적정성을 구청에서 직접 검증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부서가 마련한 개선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어려운 상황임. 계획서에 포함된 현수막·청소용품·묘목 관련 지출이 정산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도 사업관리의 불명확성을 보여주는 사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2025년 동협의회 지원 사업은 18개 동을 대상으로 편성되었으나, 여의동·신길7동이 사업을 미추진하고 해당 예산을 영등포본동·당산1동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음. 이는 애초 사업 편성 단계에서 동별 수요 분석 및 전체 동 대상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지점임. ○ 일부 사업의 세부산출내역서와 정산서가 전년도 작성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로 반복 제출된 관행도 확인되었음. 사업별 목적·대상·규모가 각각 다른데도 동일한 산출근거가 반복될 경우, 예산 산출의 실질성이 떨어지며 정산 타당성 검증에도 한계가 발생함. ○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기존 300여 명 규모의 행사였으나, 실제로는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관람(40명)으로 대체 추진되었음. 「2025년 국민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동단체 보조금 지원 안내문」에는 단순 행사성·일회성 사업은 보조금 지원 부적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람활동이 보조금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또한 당초 계획을 변경(관외→관내)한 뒤 재차 일정 중복·기온 등을 이유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사업 취지·대상·효과가 본래 행사와 크게 상이하여 사업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사례임. ○ 한편, 부서에서는 정산서 오류 개선, 교육 강화, 산출근거 정비 등 개선안을 제출하였으나, 대략적 방향에 그친 수준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관리·점검 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종합해 보면, 새마을회의 일부 보조금 사업에서 ① 계획 대비 미흡한 이행, ② 반복되는 사업 변경, ③ 산출근거의 형식적 작성, ④ 증빙자료 부재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관리의 기본 원칙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가 요구됨.	
79	11.28. (금)	이규선	<p>[반장 조직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 분석·평가 체계 마련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의견 전달, 사실조사 협조, 행정 홍보 등 동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영등포구의 반장은 위촉률 47.9% 수준(2025년 11월 기준)에 그쳐 조직 운영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 올해 우리 구는 인센티브 지급 확대를 통해 반장 조직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 재정비를 위한 대규모 해촉으로 인하여 일부 공석 증가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연말까지 위촉률이 회복되지 못한 것은 반장 기능·역할·동기부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함을 시사함. ○ 현재 인센티브는 활동량·기여도·참여도와 무관하게 전체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장 조직의 현황(공석률, 활동 편차, 역할 수행도 등)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및 정량적 분석 체계 마련을 요청함. ○ 반장의 임무 수행도·참여도·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지원 정책에 반영할 것. ○ 인센티브 지급 시 활동량·참여도·기여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 반장 조직 운영이 실질적인 동행정 보조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동별 운영 편차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장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활동 유도 효과도 미흡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국 인센티브 지급 확대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장 활동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분석·평가 체계와 관리·감독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음. ○ 따라서 반장 조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① 반장 활동 실태 조사, ② 정량·정성 평가 기준 마련, ③ 평가 기반의 차등 인센티브 지급, ④ 동별 조직 운영 수준 반영 등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0	11.28. (금)	이규선	<p>[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취미·여가 편중 및 이용 시기 지연에 따른 사업 효과성 저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구민의 평생학습 확대와 교육 격차 완화를 핵심 목표로 연간 3,000명 이상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임. ○ 2024년 사업 결과보고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분야가 취미·여가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직업능력개발·자격취득·디지털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과정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사업 일정과 행정 절차를 재정비하여 바우처 이용 개시 시기를 상반기 내로 앞당길 수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2025년 사업계획을 종합 분석한 결과, 바우처 이용 분야가 취미·여가 중심 과정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편중 현상이 확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115개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제 수강은 난이도가 낮은 여가·취미성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직업 능력개발·자격취득·디지털 역량 강화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함. ○ 이러한 편중은 평생학습의 ‘자기개발·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고, 바우처 사업의 교육적 효과가 제한적으로 발휘되는 결과를 초래함. ○ 또한, 바우처의 실제 이용 개시 시점이 6월 말~7월 초에 집중되어, 사업 기간 대비 실 사용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지고 있음. ○ 이는 수강 기회 축소, 과목 선택의 제약, 잔액 소진 압박 증가 등 실질적 교육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p>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 함.</p> <p>○ 단순 사용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학습 지속도, 교육 만족도, 자격취득 여부, 취업·진로 연계 가능성 등 질적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 바우처 운영 평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 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사용률은 92.5%로 높았으나, 이는 ‘원하는 과목을 만족스럽게 수강한 결과’라기보다는 ‘단기간 내 소진해야 하는 구조에서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성과, 학습 지속도, 진로·취업 연계 등 실질적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률과 단순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설문조사로는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단순 취미활동 지원 수준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경력개발·직업역량 강화라는 본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운영 구조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81	11.28. (금)	이규선	<p>[자료 제출 오류 및 플로터·현수막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미래교육과의 ‘현수막 제작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확인됨. 서로 다른 행사임에도 계첩일을 동일하게 기재했고, ‘손현수막’임에도 143만 원의 비용을 제출하는 등 자료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부실 제출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료 제출 오류에 대한 내부 검증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둘째, 플로터 프린터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실제 소재지·보유현황과 재무과 등록자료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 셋째, 구 전체의 현수막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용 현수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국 재무과 자료에서는 플로터 프린터가 9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서별 제출 자료는 8대이며, 부동산정보과는 2대 보유임에도 3대 등록하는 오류가 존재함. 더 큰 문제는 어느 부서도 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임. ○ 플로터 사용기관 자료 역시 부서 간 일관성이 없음. 미래교육과는 5대 중 1대를 시설관리공단, 4대를 문화재단이 사용한다고 제출했으나, 문화재단 자료에는 2대만 기재되어 있음. 구입일자·취득가액까지 서로 불일치하며, 나머지 장비 2대의 소재 역시 확인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미래교육과는 국민의 세금 2,140만 원으로 구매한 플로터 프린터 3대의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단 또한 장비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 특히, 구민 세금으로 구매한 장비의 구매·등록·보유·사용기관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기본임에도, 현재 관리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태임. ○ 아울러, 우리 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9.5% 감 	<p>막은 전면적으로 플로터 출력물로 전환해야 함. 이를 통해 연간 탄소 저감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p> <p>○ 넷째, 플로터 출력 시 공문 접수 - 대장 기록 - 출력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적 출력이 일절 불가능하도록 해야 함. 행정국 또는 기획재정국이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축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행정은 이에 역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현수막 사용과 일회성 실내 배너 제작이 계속되고 있으며,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2025년 실내·단발성 현수막 제작비만 1,600만 원에 달함. 전 부서를 포함하면 연 수천만 원 수준임. ○ 반면 플로터 출력물은 탄소배출이 현수막 대비 40~50배 적고, 연 2,000만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되는 바, 현수막·배너의 대체 수단으로 충분함에도 활용이 미흡함. ○ 또한, 일부 부서에서 공문 없이 직원 요청만으로 플랜카드를 출력해 준 사례가 확인됨. 	
82	11.26. (수)	임현호	<p>[도보관광'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도보관광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부터 운영 중임에도 신청 인원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며,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가 복잡해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확인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신청 절차 간소화. 현재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 과정이 복잡하므로, 예약 절차를 직관적이고 쉽게 개선하여 주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둘째, 홍보 강화. 지역 단체 및 관내 18개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단체 참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도보관광과 별도로 보건소 생활건강과에서도 유사한 걷기 프로그램('소소한 걷기')을 운영하고 있어, 두 부서가 각각 걷기 프로그램을 중복 운영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두 부서의 주요 코스는 선유도,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안양천 합수부, 문래창작촌 등 대다수가 중복됨. ○ 건강·관광·문화 목적이 뒤섞여 정책 방향이 불명확해졌으며, 참여율 저조·홍보 미흡 문제와 함께 정책 효과 측정조차 어려운 구조가 확인됨. 	<p>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것. 뿐만아니라,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프로그램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것.</p> <p>○ 셋째, 프로그램 목적 명확화. 보건소는 건강 중심, 문화체육과는 관광·문화 중심으로 프로그램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는 코스·해설 내용을 정리하여 예산 비효율을 해소할 것.</p> <p>○ 넷째, 정책 효과 분석 체계 마련. 참여자 통계, 신규 참여자 비율, 관광 활성화 지표 등 지표 기반의 평가체계를 도입할 것.</p> <p>○ 영등포 도보관광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부서 중복 운영 구조에서는 예산 비효율과 성과 저하가 불가피함. 신규 코스 발굴에 앞서 신청 절차 개선, 프로그램 목적의 명확한 구분과 재정비, 홍보 강화를 우선하여, 구민이 보다 쉽게 참여하고, 정책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는 체계로 정비할 것을 요청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3	11.27. (목)	임현호	<p>[야외 체육시설 대관 업무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안양천 유역에 있는 양평 누리 체육공원, 오목교 하부, 신정교 하부에는 족구장, 축구장, 야구장, 육상트랙 등의 야외체육시설이 있어 구청 또는 지역 체육단체의 행사나 대회를 위해 대관을 하기도 함 ○ 그런데 위 시설들은 위치적 특성상 별도의 전기 설비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시설에 CCTV 전력 공급용으로 전기 설비가 설치 · 운영중임 ○ 따라서 부서에서는 전기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행사 등 목적으로 대관 시 전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전력량에 제한이 없는 수준의 전기 사용은 허가하고 일정량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발전기 임차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음 ○ 하지만 전기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행사 등 목적으로 대관 중 전기 사용이 필요하여 안내를 받고자 하였으나 담당자가 휴일이라 부재하여 전기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동일 시설 사용에 있어서 전기 사용 기준과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서는 대관에 따른 전기 사용 허가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관 신청 단계부터 안내하고, 대관 중 이용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업무 체계를 면밀하게 구축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방식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경우 등 업무가 다소 미흡함이 확인되었음	
84	11.27. (목)	임현호	<p>[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월~10월 기준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 직원은 총 45명, 상담횟수는 291회로 집계되는데, 전년도의 경우 3 월~12월 기준 상담인원 51 명, 상담횟수 525회 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임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올해 역시 개선되지 않아 프로그램 활성화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악성 민원 등으로 피로도 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부서에서도 이용률이 낮아 지원체계가 충분히 안내되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성 민원에 상시 노출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절차·지원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을 요청함 ○ 특히 민원 대응 부서 등 스트레스 취약 부서에 대해 정기적인 안내 및 상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과 인사부서 중심의 실질적인 안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담 예약 방식, 시간 조정, 비대면 상담 확대 등 직원의 프로그램 이용이 용이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끝으로 상담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5	11.28. (금)	임현호	<p>[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관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한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나타난 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가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 지속 여부 및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명확히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받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이후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왔음. 지방보조금 총괄 부서인 기획 예산과는 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p>	<p>안내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예산과는 총괄 부서로서 보조금 사업의 성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86	11.28. (금)	임현호	<p>[영등포아트홀 음향설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기획공연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음향이 부족하거나 불만족스럽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객 의견이 지속되어 왔고, 그 때마다 재단에서는 음향장비를 임차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음향설비를 수선·점검하여 왔음 영등포아트홀 무대음향장비 57 개의 목록을 확인해 본 결과 실내 공연장에서 음향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 음향 장치인 음향 반사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에 따르면 음향반사판은 무대 위의 소리가 다른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유효하게 객석 측으로 보내든지 무대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지만 음향반사판 설치에 대한 견적은 재료, 형태,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므로 재단에서는 아트홀의 규모, 설치의 필요성, 문래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등 제반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연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자에게 그 반사음의 일부를 되돌리든지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반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음향 반사판의 설치 여부는 관객의 공연 관람의 질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연주의 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음향문제로 대관이 무산된 사례까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음향반사판이 부재한 아트홀의 음향설비 상태는 좋은 연주자의 아트홀 대관을 주저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평가됨 ◦ 재단에서는 음향반사판 설치에 대해 약 9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화성예술의전당, 약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오산문화예술회관 등을 사례로 들어 아트홀의 경우 약 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문래 영등포예술의전당의 건립까지 고려하면 아트홀 음향반사판 설치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임 	
87	11.28. (금)	임현호	<p>[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의 내부 통제 미흡 및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는 2024년 4월 1일부터 민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인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잦은 인력 공백과 높은 퇴사율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4일간 특정감사가 실시되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결과, 센터 운영 전반에서 조직·인사 관리의 투명성 부족, 업무분장 미비, 근태관리 부실, 운영위원회 구성 지연, 만족도 조사 미실시, 후원금·예산 집행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당 및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되었음. ○ 특히, 센터의 조직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해 잦은 결원이 발생하고 업무분장이 반복 수정되는 등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저하된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2024년 기준 다수 직원이 1년 이내 퇴사하여 인력 안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시설·사무환경 측면에서도 창고 공간 부족, 물품 적치, 업무환경 협소 등 기본적 시설 관리 미흡이 확인되어 사업 추진 효율성과 센터 이용환경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후원금 관리 기준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직원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화하고, 일관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함. ○ 시설 환경 관련하여 사무공간 재배치와 시설 보수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함. ○ 회계·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기본 회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근태관리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의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와 조치를 당부함. ○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여 기존의 제한적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목적 외 사용, 수입·지출 회계 처리 누락 등 회계·재정 집행의 투명성 저해 요소도 다수 확인되어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자원봉사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정된 기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지역 내 위기 가구, 돌봄 취약 계층, 갑작스러운 경제·건강 위험에 놓인 가구 등 새로운 지원 수요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대상자 선정은 이러한 변화된 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공동체 기반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체계 확립, 인력 및 조직 안정성 확보, 시설 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확대와 명확화가 반드시 필요함. 	
88	11.28. (금)	임현호	[동행정 소통 강화 사업 관련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만족도가 높고 사업 성과가 뚜렷한 만큼, 동장들이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지속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행정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자치행정과는 총 48,600천원을 확보함. ○ 본 사업의 목적은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동 환경 조성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음. ○ 한편, 본 계획 수립 초기에는 당초 직능단체 회의 및 행사 진행에는 팀장 또는 담당이 참석하고, 동장 참석은 불필요한 것으로 했지만, 이후 동장이 판단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된 지침이 전달된 바 있음.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 외에 별도의 동장 순찰복 구매가 이루어졌음. ○ 18개 동장에게 2,502,000 원을 들여 순찰용 조끼를 구매하여 지급했으며, 이후 추가 6 벌을 구매 및 나염 인쇄 작업을 진행하여 총 3,259,000 원을 사용함. ○ 동장이 현장 순찰 시에 식별 	<p>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당부함.</p> <p>○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부수적 성격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절차 강화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가 필요함.</p> <p>○ 향후 사업 추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견적 기준 준수, 적정가격 검토, 사전계획 철저화 등 예산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가능한 복장을 착용한다면, 구청 공무원으로 공무 수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추가적인 민원 접수 및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총 24벌의 순찰용 조끼 구매에 3백만원 이상 예산이 사용된 것은 과다한 지출이라고 보여짐. ○ 또한 구매 과정 중 비교견적에 있어,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 견적을 포함한 것은 적정 가격 산정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동행정 소통 강화 사업은 목적과 결과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가 인정되나, 순찰복 구매는 사업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부수적 항목임에도 예산 집행 과정의 계획성 부족과 절차적 적정성 미흡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89	11.28. (금)	임현호	<p>[상생장터 운영에 있어 예산 집행 적정성 및 효과성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선유도원과 함께하는 상생장터'는 총 4,668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반면, 실제 매출은 1,825만원으로 예산 규모 대비 사업 효과가 크지 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업체 기준 약 1,800만 원의 매출 성과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보기 어려운 만큼, 사업 성과 분석을 토대로 사업 구조를 재검토할 것. ○ 본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추진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은 것으로 나타남.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홍보비는 약 20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은 반면, 현장 이벤트·설치물 등 일회성 비용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빼어로 섭외비용, 스트링 라이트 설치비 등 일부 항목은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특정 수의계약 사유에 따라 5천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행정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사업 효과 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p>	<p>된 바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목적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의계약 방식이 예산집행의 타당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행사 추진 시 항목별 적정 단가를 충분히 검토하기 바라며, 홍보·마케팅 등 상권 인지도 제고에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예산을 배분하기 바람.
90	11.28. (금)	임현호	<p>(500명 미만 공연·축제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부서 간 책임성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연법」 제11조에 따르면, 1,000명 이상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재해대처계획(재해대처신고) 제출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안전사고는 소규모 공연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구민 안전을 위해서는 행사 규모가 아니라 위험요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함. ○ 우리 구 역시 「영등포구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500명 미만 공연·행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행사 규모가 아니라 위험요인 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할 것. ○ 둘째, 문화체육과와 도시안전과와의 협업체계를 정비할 것. 협업체계를 정비하여 소규모 공연·축제에 대해서도 사전 안전검토 → 현장확인 →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일원화할 것. ○ 셋째, 타 지자체 사례 검토 후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축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에 따라 500명 이상 옥외행사는 도시안전과에서 안전관리 대상이 되지만, 문제는, 현행 구조에서는 '500명미만 규모 공연·축제'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밀집, 음향·조명 장비, 무대 구조물, 비상대피 동선 등 안전 위험은 규모와 무관하게 존재함에도, 500명 미만 공연의 사전 안전점검·안전계획 검토·사후조치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 문화체육과는 현재 “1,000명 이상만 신고 대상”이라는 법적 기준을 이유로 500명 미만 공연·행사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문화체육과는 지역 축제 총괄 부서이며, 공연·행사의 기획·지원·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단순히 “법적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소규모 공연 안전관리 전체를 방치해서는 안 됨. ○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도시안전과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조차 부적절 	<p>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비중 확대, 소규모 행사 합동점검 등 실효적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넷째, 도시안전과 자료 비공개 사안을 즉시 시정할 것. ○ 의원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 향후 부적절한 법령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공개 기준 및 내부 검토 체계를 전면 정비할 것. ○ 구민 안전은 행사 규모와 무관함. 500명 미만 공연·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영역이며, 타 자체는 이미 소규모 행사까지 안전관리 범위 확대라는 정책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문화체육과는 공연·축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법적 의무의 유무를 떠나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함.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공연·행사 관리체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한 사유로 비공개 처리한 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안전과는 근거 법령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제시했는데, 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 과거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을 통해 민원처리법 제7조는 지방의원의 자료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그럼에도 도시안전과가 이를 비공개 사유로 삼은 것은 법령 이해 부족 또는 책임 회피에 기인한 부적절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음. ◦ 최근, 타 지자체들이 소규모 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문화체육과와 도시안전과 모두 공연·축제 안전 전반에 대한 책임 의식과 사전 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청함.
91	11.28. (금)	임현호	<p>[문화예술단체 충복지원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지역차원에서 이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축제(행사)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에 지역의 기존 문화자원이 아닌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활력있는 다양한 문화자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지는 문화행사를 발굴·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분야를 활성화하고 구민들의 문화적 활력을 제고하며, 구민 간 커뮤니티 화합·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역문화예술축제(행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35개 사업을 공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지역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지 및 지역문화 발전을 제고하고자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및 7개 소속 협회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 전시회 및 공연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런데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다수의 지역예술단체가 신청해 사업 지원을 받고 있어 사실상 단체에 대한 충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례로 영등포서예협회는 올해 지역문화예술축제(행사) 공모에 “궁체나들이”라는 사업이 선정되어 14,5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정기 전시회로 가훈써드리기에 1,800,000원, 서예협회 	원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요건을 보완하고 일반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전에 12,200,000원 총 14,000,000원을 지원받았음. 결국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두배로 지원받는 결과와 마찬가지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연극협회의 경우, 공모에 “병자삼인&울림파티 in 영등포”라는 사업이 선정되어 18,0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제3회 정기공연”에 29,000,000원을 지원받았음 ○ 지역문화예술축제(행사)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는 지역 문화 자원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므로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지역예술단체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정함 	
92	11.28. (금)	임현호	<p>[주민자치사업 추진 시 참여주체 확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운영이 고착화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사업 설계·운영 단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외 지역 단체 및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준 마련 및 절차 개선을 검토할 것. ○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사업 추진 시 사전에 다양한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안내·홍보 및 참여 기회 제공을 확대할 것. ○ 향후 주민자치사업 추진 시 특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주민자치사업에서는 지역 단체나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계·운영 단계에서 이들의 참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주민자치사업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참여 기반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참여주체가 특정 단체로 제한될 경우 다양한 주민 의견의 반영이 어렵고, 사업 효과 또한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지역단체, 청년·학부모 등 다양한 주민 그룹과 자원봉사자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제도적·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정 단체 중심 운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참여 구조를 다양화하여 주민 참여 기반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93	11.26. (수)	최봉희	<p>[관련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체계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운동단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 및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계처리 및 증빙서류 작성에 매번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사례 중심의 강화된 실무 교육 및 개별 컨설팅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 또한 보조금 사용 기준 위반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지원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는 3개 단체에 사업비 144,930천원과 운영비 79,909천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각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운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구정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임. ◦ 그러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불명확한 집행 내역이 매년 반복 확인되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예컨대, 절임배추와 완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계상된 사례,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무용품 구입, 가격 과다 책정 물품 구입 등의 사례가 있었음. ◦ 이는 회계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반복될 경우에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정산 검토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p>및 부적정 정산 사례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차년도 교부결정에 반영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요청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사용 기준 위반 또는 증빙 미비가 지속, 반복될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보조금 삭감, 교부 제한, 반환 등의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 	
94	11.26. (수)	최봉희	<p>[식품점객업소 지도점검의 2인 1조 원칙 미준수 및 현장근무 관리 부실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 내 식품점객업소는 총 9,400여개로 서울시 25 개 자치구 중 상위권에 해당 하며, 민원·지정점검·행정처분 등 업무량이 연중 과중한 실정임. 그러나 식품위생팀은 총 9명 (팀장 포함)이 일 평균 32건, 월 평균 636건의 점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이로 인해 제도상 원칙인 2인 1조 현장 출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단독 점검이 대부분인 상황임. 단독 점검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점검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2인 1조 출장 원칙의 철저한 준수해야. 단독 출장 관행을 즉시 개선하고, 2인 1조 출장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인력·운영체계를 마련할 것. 둘째, 현장근무 통제·관리 강화해야. 점검 지역, 동선, 점검 종료 보고 등 현장근무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현장에서 직원이 실제로 어디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있는지 명확히 관리할 것. 셋째, 현장 안전교육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해야. 악성 민원 대응, 야간 점검, 업소 민원 대처 등 위험상황을 대비한 정기 안전교육·위험 대응 매뉴얼을 강화할 것. 넷째, 점검 인력 확충 또는 권역 재조정해야. 월 636건 수준의 점검을 9명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단속 동선 보고, 위험상황 대응지침, 점검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악성·반복 민원, 야간 점검, 위생 불량 업소 점검 등 현장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단독 점검이 발생하고 있어 ○ 직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음. ○ 최근 정부의 행정처분 경감 지침 시행으로 계도 위주 운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오히려 현장 점검의 전문성·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임에도 현장 근무 통제가 느슨하고, 교육·대응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구민 안전·식품안전·위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필수 안전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행정상 위험 요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이므로, 업무량 대비 적정 인력 산정 및 단계적 인력 보강 또는 권역 조정 및 업무 분산을 검토할 것. ○ 다섯째, 점검 실명제·기록관리 체계 강화해야. 점검자·점검시간·점검구역을 명확히 기록하는 현장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감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업무로, 현장 점검의 기본 원칙(2인 1조)과 안전관리 체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직원 안전·민원 대응·식품위생관리 모두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에 현장근무 관리 전면 재정비, 안전원칙 준수, 인력 보강, 교육강화를 통해 식품위생 지도점검 체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95	11.27. (목)	최봉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금연단속 실효성 저하 및 과도한 단속권역 운영 문제 개선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금연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원 및 보조원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과태료 및 단속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수년간 흡연 위반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연단속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 현재 금연단속원과 보조원의 총 인력은 과거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 결과 전체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임. 단속 인력이 축소되면 단속 중심이 아닌 '민원 대응 중심·계도 중심' 운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음. ○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단속권역은 4개 권역으로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단속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면적과 동별 순찰 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함. 이로 인해 권역 내 상시 점검·순환 단속이 불가능하여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금연구역 위반은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주택가 등 특정 생활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선제적 점검이 아닌 사후 민원 처리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p>야 함. 단속 인력 감축은 금연 정책 전반의 추진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음.</p> <p>○ 둘째,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된 단속권역은 단속원 수 대비 지나치게 넓어, 현실적인 규모로 권역 조정이 필요함. 권역별 단속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분화 및 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함.</p> <p>○ 셋째, 단속이 민원 대응 중심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정기 순환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함.</p> <p>○ 넷째, 흡연과태료 및 금연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대별·생활권별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하고, 데이터 기반 단속 체계를 마련할 것.</p> <p>○ 흡연 단속은 단순한 계도가 아니라 주민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공공 서비스임. 현재의 인력 부족과 과도한 단속권역 구조로는 금연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단속 인력 확충·권역 조정·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금연 정책 전반을 즉시 재</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 감사에서도 단속 인력 축소가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과태료 납부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동일하게 현재에도 우려되는 상황임. 	정비할 것을 요청함.
96	11.28. (금)	최봉희	<p>[민원응대 과정의 친절도 제고 및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일부 부서에서 공무원의 불친절을 지적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음. 이는 단순한 일과성 민원이 아니라 민원인의 신뢰와 행정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음. 물론 실제 민원 현장에서는 과도한 요구, 고압적 태도, 폭언·폭행 등 부당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정서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침착하고 일관된 자세로 응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심리상담 지원, 폭언 민원인 응대 지침 마련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 응대 매뉴얼 외에도 실제 사례 중심 교육, 역할 연기 (Role Play)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 응대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폭언·폭행 민원 대응 매뉴얼의 지속적 정비, 보호조치 요청 절차 간소화, 심리상담·휴식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민원 처리 지연 또는 불친절 오해를 줄이기 위해, 처리 단계별 안내·예정 시한·담당자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민원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불친절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은, 민원인 응대 과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태도 문제, 안내 절차의 설명 부족, 민원 처리과정의 지연 등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행정서비스의 최종 목표가 주민 만족 향상에 있는 만큼, 민원인을 매일 마주하는 지역의 이웃으로 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민원 응대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공무원들이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체계 강화와 조직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97	11.28. (금)	최봉희	<p>[소식지 배포 관련 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소식지 배포와 관련해 배포 장소 및 방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배포 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부서에서는 소식지 배부대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정보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 채널 연계를 통해 온라인 전파를 확대하였으며, 배포 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식지 배부 수요와 장소를 정확히 파악해 잔여 수량이 최소화되도록 합리화하고, 알림톡 구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제안함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파악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현재 관내 83개 아파트에 653개의 소식지 배부대가 설치되어 있고, 알림톡 구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배포 관련 점검을 계획해 시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배포 장소에서는 아직 주민에 의해 소식지가 폐지로 수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98	11.28. (금)	최봉희	<p>[수의계약 몰아주기 지양 및 관내 업체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전체 1,004건 중 관내업체 계약은 285건으로 28%에 불과하며, 수의계약에 참여한 694개 업체 중 관내업체는 152개로 21% 수준에 그침. ○ 또한 지역 내 업체들과의 면담 결과, 관공서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접한 적이 없거나, 참여 방법이 복잡해 절차를 몰라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업체들이 수의계약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참여 방법·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관내 업체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바람. ○ 각 부서에서도 보다 많은 관내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관내 다양한 업체 리스트를 구축하여 각 사업부서에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최근 수의계약에서 관외업체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업체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다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 올해 한 해 동안만 동일 업체에 3건 이상 수의계약을 맺어준 사례가 63개 업체에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이 중 5개 업체는 단일 업체가 올해 총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p>로 검토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법령상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적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특정 업체에게 계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관행을 지양하기 바람.
99	11.28. (금)	최봉희	<p>(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 이후 계속되는 추가 공사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당초 2022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유로 2025년 7월에서야 개관한 장기 지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직후부터 다수의 추가 공사와 보완 공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창고 공간 조성, CCTV 추가 설치, 전기공사, 대체육관 안전시설 보강, 핸드레일 보완, 수영장 자동문 공사 등 총 여러 건의 공사가 추가로 실시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책마루문화센터 사례와 같이 준공 직후 다수의 추가 공사가 반복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실사용 부서·운영기관·현장 실무자 간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실제 이용 환경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공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청함. ○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항목이 준공 후 보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설계검토·준공검사 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 본 사업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추가 공사 원인을 체계적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준공 전 설계 단계에서 실사용 부서의 의견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제 운영 동선·이용자 특성·안전 수요 등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채 시설 조성이 이뤄졌음을 시사함. - 준공 이후 여러 차례 보완 공사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비 외의 예산 집행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운영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음. - 운영 초기부터 보완 공사가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현상은, 향후 동일하게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계·공사 단계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 보완이 필요함. <p>○ 한편, 인근 아파트 주민의 생활 침해 민원에 따라 블라인드 설치를 추진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이용자 안전·편의를 위한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p>	으로 분석하여, 향후 유사 시설 신축 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

[행정위원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1	11.28. (금)	양송이	<p>[선유도서관 청소년 특화공간 '사이로' 조성 및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p> <p>○ 선유도서관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음에도 청소년 이용률이 낮았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트윈 세대(12~16세) 전용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10억 원의 민간재원을 확보하고, 2024년 2월 청소년 특화공간 '사이로'를 조성함.</p> <p>○ '사이로'는 다양한 창작·체험 중심 공간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도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관심사 기반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하였음.</p> <p>○ 아울러 노후시설을 개방형 구조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세대 간 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복합문화·창작 기반의 미래형 공공도서관 모델을 제시하였음.</p> <p>○ 공간 조성 이후 청소년 이용은 크게 증가하였음. 청소년 신규회원은 616% 증가(80→573명), 프로그램 참여자는 1,159% 증가(374→4,711명), 도서 대출은 125% 증가(4,675→10,542권)하는 등 정량적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남.</p> <p>○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동아리, 또래 작가 프로그램, 진로 탐색 활동 등 청소년 주도적 문화활동으로 이어져 지역 내 청소년 문화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함.</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성과는 2025년 전국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통령상 수상으로도 이어짐. ○ 또한 선유도서관은 지난 15년간 선유고·공항중 특수학급과 연계하여 연극·드로잉·독서·사진 등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으며, 이는 포용성 강화 및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모범사례로 평가됨. ○ 이러한 관련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국립장애인도서관장상(장려상)을 수상함. ○ 종합적으로 선유도서관은 △민간재원 유치 기반의 청소년 특화공간 조성 △청소년 이용 활성화 및 주도적 활동 기반 강화 △지속적 장애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래형 공공도서관 운영 모델 제시 등의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장과 혁신적 운영의 대표적 우수사례라고 판단됨. 	
2	11.28. (금)	박현우	<p>[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및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신길1동 샛강두리골목형상점가 등 2개소, 2025년 신길3동 별빛뉴타운골목형상점가 등 5개소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정책지원 대상에 편임함. 이에따라 중기부·서울시 주관 공모사업 등 신청 및 선정,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하고, 아울러 구의회 주최 (골목상권)소상공인 대상 간담회에서 사업 소개 및 의견청취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함 ○ 온라인 쇼핑몰 및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소비가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여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수행함</p> <p>○‘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신청 절차 완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집기준 2천제곱미터 이내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 및 영업중인 상인동의 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 <p>○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사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5개소 신규 지정(신길3동, 대림2동, 양평1동, 영등포동, 당산1동) ·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 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 협업으로 공동마케팅 행사 및 온라인 입점 지원(신길3동, 양평1동) · 선유도역·샛강두리 골목형상점가에 명절이벤트(서울시 공모)를 지원하여 소비 진작 유도 ·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에 첫걸음기반조성사업(중기부 공모)을 지원하여 상점가 고객신뢰 확보, 역량강화, 마케팅 등 지원 <p>○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회 주최‘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촉진 지원 간담회’에 참석하여 사업 등을 소개하고 신청 및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3	11.28. (금)	김지연	<p>[양평2동 민관 협력 유치의 적극행정 사례]</p> <p>○양평2동은 지역 축제인 ‘시월의 선유 축제’를 토대로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선유도원 축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가 지역 문화 성장</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아울러 '선유로운 골목 상권' 활성화를 통해 예술과 상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특유의 지역 문화를 형성해 왔음.</p> <p>○ 양평2동 동 행정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선유도역 아트 스티커 작업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전시된 인근 문화유적 소개 콘텐츠가 양평2동에 소재한 기업의 후원으로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음.</p> <p>○ 아울러 양평2동은 적극적인 동 행정 업무 추진을 통해, 본사가 지역에 위치한 롯데홈쇼핑, 신일전자 등 기업을 대상으로 동의 주요 사업을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에 대한 후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제안 프리젠테이션과 양평2동의 지역 현황 및 비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전달을 통해,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업 성과와 가시적인 결과물로 구현하였음. 또한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에 기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음.</p> <p>○ 일반적으로 동 단위 사업은 주민 참여와 공공의 재정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양평2동의 이러한 기업 참여 사례는 단순한 추가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일회성 후원자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의 한 축으로서 협업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이는 동 행정 차원의 민관협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한 모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p> <p>○ 강남구의 경우, 별도의 ESG 공모 사업을 통해 기</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업이 자치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적 참여 경로를 마련하고 있음. 영등포구 역시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임. 이에 지역의 중요한 자원인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참여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아울러 이러한 공식 채널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기업의 후원과 참여를 이끌어낸 우수 사례를 관내에 널리 공유할 것을 제안함. 이를 통해 각 동 및 부서가 해당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기업 참여형 행정과 민관협력 모델이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p>	
4	12. 1. (월)	김지연	<p>[전 부서 협력으로 강화된 마음건강 사업 우수사례]</p> <p>○우리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부서 협력을 통해 마음건강 사업과 생명지킴이 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 고위험군 조기발견, 지역 기반 보호 체계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p> <p>○특히 마음안심버스는 주민센터와 협업하여, 정신건강 관리의 소외 주민을 찾아가는 진단을 하여 주민의 마음건강 관리 인식을 높이는 등 적극적 운영을 함. 아울러 학교·기관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상담 접근성을 크게 높인 우수 사례로 평가됨. 기존 정기 프로그램 외에도 구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마음건강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p> <p>○생명지킴이 사업 또한 통·반장, 학교, 복지기관 등</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지역 기반의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적극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우울·자살위험 의심 대상자 발굴과 초기 연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p> <p>○ 심리적 고위험, 자살의 직접적 원인 중 '경제적 이유'가 상위권인 점을 감안하여, 정수과와 협업하여 심리상담서비스 등 리플렛 배포, 고액체납자 대상 마음건강서비스 적극 홍보 등을 진행함</p> <p>○ 이러한 일련의 노력 덕분에 영등포구는 최근 서울시 자살률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함.</p> <p>○ 다만 생명지킴이활동가가 초기 신청 인원에서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데에 많은 탈락율이 존재하므로, 생명지킴이 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 참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p> <p>○ 정기 안내, 참여 동기 부여, 활동 목표 공유,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 완화 교육 등을 통해 수료자가 실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더욱 촘촘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게이트키퍼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함</p>	
5	11.28. (금)	우경란	<p>[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한 응급대응 역량 강화 및 조례 기반 생명안전체계 확립]</p> <p>○ 심정지 환자 증가로 초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23년 본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교육장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CPR 교육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구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음.</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에 따라 연중 상설교육장 운영, 찾아가는 CPR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은 심폐소생술 이론·실습, AED 사용법, 기도폐쇄 대응 등 실제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구성됨. ○'25년 11월 기준 총 405회, 10,496명이 CPR 교육을 이수하였고, 상설교육장 1,302명, 찾아가는 교육 7,502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성을 확대하여 조례 취지인 “구민 누구나 적기 교육 제공”이 실질적으로 구현됨. ○참여자의 99%가 “유익했다”, “대처 자신감이 생겼다”고 응답해 서울시 공공서비스 후기·만족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임. ○또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우선 교육대상뿐 아니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집배원 등 현장 근로자까지 범위를 넓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 ○향후에는 심정지 고위험군 중심 교육 확대, 교육장 운영 기준 준수 여부 점검, 구민 인지도 제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생명안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임. ○조례 기반과 행정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응급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됨. 	
6	11.27. (목)	임현호	<p>공영주차장 정기권 순환배정 도입 및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공영주차장 정기권 무작위 순환배정 도입은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담당관에서 장기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공정한 행정 구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기순번제 방식은 신규 이용자의 진입 기회를 제한하고 장기간 대기로 인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된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감사담당관이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기반 순환배정 방식을 마련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임. ○ 개선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정기권 배정은 2025년 10월부터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한 순환 배정 방식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민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 약자를 우선 배정하는 기반이 마련됨. ○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3일과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역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됨. ○ 기존에는 우수공무원 11명에게 특별휴가 1일 및 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이었으나, 개편된 제도에서는 최우수 1명·우수 10명에게 차등 보상 방식으로 강화된 인센티브가 적용됨. ○ 이는 공적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개선된 것임. ○ 두 제도는 모두 공정한 행정·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사례로, 이를 위해 노력한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7	11.27. (목)	임현호	<p>[「시월의 선유」 사업 개선 적정]</p> <p>○ 「시월의 선유」는 양평2동 선유도역 ‘걷고싶은 거리’를 활용하여 주민, 지역예술인, 학교, 기업체 등이 화합하고 문화와 나눔이 공존하는 주민친화적 마을축제로서 올해로 9회째를 맞아 10. 24.~26. 개최되었음</p> <p>○ 이번 축제에서는 ▲재즈 트리오, K-POP 댄스 등의 공연 ▲119이동안전체험, 드론 비행 등의 체험 ▲신일전자, 롯데홈쇼핑, 롯데웰푸드 등 지역 기업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 바자회 ▲그 밖에 영화제, 퍼레이드,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이 펼쳐졌음</p> <p>○ 올해 방문객은 54,000여명으로 작년 49,000명 대비 10.2% 증가했고 수익성 매대의 판매수익금 총액은 작년 1,200여만원에서 올해 4,06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작년 대비 축제의 외형과 규모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p> <p>○ 또한 축제 참가자 모집을 공식적인 공개 공모 절차로 제도화하여 절차적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축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p> <p>○ 특히 올해 축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축제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는 지역상권을 배려하여 해당 업소가 축제 무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임</p> <p>○ 본 축제가 지역을 둘러싼 모두의 화합과 소통을 기치로 내걸고 개최되는 만큼, 평소에 선유도역 ‘걷고싶은 거리’를 지켜온 지역상권이 오히려 축제를 이유로 소외되거나 피해입지 않도록 존중받았다는 점에서 축제의 가치를 잘 실현한 면밀하고 적정한 행정으로 평가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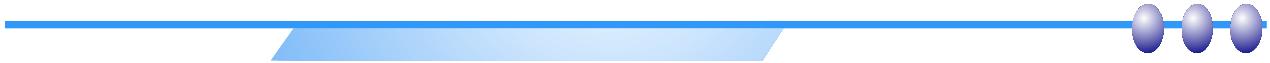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8	11.26. (수)	최봉희	<p>[양화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통한 반려견 생활환경 개선]</p> <p>○ 우리 구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민원 및 갈등이 확대되고 있어, 주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전용공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p> <p>○ 이에 구 최초의 반려견 전용 복합공간을 '25년 6월 조성(총 643평)하였으며, 보호자 휴게공간을 포함한 대·중소형견 분리 놀이터를 마련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함.</p> <p>○ 더불어 정식 개장 이전부터 주민 참여 기반 사전 운영 준비를 추진함('25.7~9월).</p> <p>○ 명칭 공모·투표에 총 300명이 참여하여 “양화반려견놀이터”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사전 체험단(60명)을 통해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매우만족’ 응답이 84%에 달하는 등 긍정 평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함.</p> <p>○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그늘막 6개, 안내시설 6개 등을 추가 설치하고, 반려동물 출입 인증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반영함.</p> <p>○ 이어 '25.9.21. 개장식과 겉기대회를 개최하여 총 226명이 참여하고, 겉기대회 참가 61팀 중 84%가 '매우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구민 호응도가 매우 높았음.</p> <p>○ 개장 이후(9.21.~10.31.) 누적 이용자는 898명에 이르며, 주말 기준 일일 최대 90명 방문에도</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불만 민원이 'ZERO'인 점은 주민 수요 충족과 갈등 완화 효과를 보여주는 성과라 판단됨.</p> <p>○ 향후 24시간 상시 개방을 유지하며 지속 운영·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26년 1월에는 출입 인증 시스템 및 자동개폐장치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계획임.</p> <p>○ 반려·비반려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됨.</p>	
9	11.28. (금)	최봉희	<p>[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한 생활권 방역 사각지대 해소 및 감염병 예방]</p> <p>○ 여름철 기온 상승과 주거환경 다양화로 모기 등 매개체 감염병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 생활권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자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음. 주민 참여 기반의 자율방역을 통해 동별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p> <p>○ '25년에는 방역 기간을 전년 대비 2개월 확대 (4~11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함.</p> <p>○ 새마을 동 자율방역단 78명(동별 4명)이 골목길, 하수구, 정화조 등 모기 발생지역을 주 2회 집중 소독하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공가 등 위생환경 취약지에는 추가 투입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함. 특히 주거취약지역인 쪽방촌은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였음</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 활동 실적은 총 1,152회로, 공가·재활용수 거장·하수구 등 취약지역에서 주민 불편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함. ○쪽방촌 대상 방역은 연 8회 실시하여 주거취약계 층의 건강 보호에 기여했으며, 보건소 방역단과 동 자율방역단이 협력한 민·관 합동 방역의 날도 3회 운영(당산1동, 영등포본동, 쪽방촌)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 방역체계를 구축함. ○방역단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방역 모델을 정착시켰으며, 취약지역 중심의 세밀한 활동으로 감염병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었음. ○행정·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권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감염병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위생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 12.



사회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의안 번호	676
----------	-----

제안년월일: 2025년 12월 8일
제안자: 사회건설위원장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8일(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2025. 11. 24.(월) ~ 12. 1.(월)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동주민센터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 의사팀 • 정책지원관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구 분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 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동주민센터 (영등포동, 대림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감사항 정리 - 공개질의 및 답변 - 강평 	
6일차	오전 오후		

※ 토요일 ~ 일요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 등

6. 감사방법

-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실시
- 현황보고 및 청취
-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 답변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시정 및 지적사항

- 붙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붙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1.24. (월)	차인영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수립 지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9의2조(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기금총괄관리관(기획예산과)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8월31일 까지 기금운용관(각 부서)에게 통보하고, 기금운용관(각 부서)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기획예산과)에게 제출(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 시기와 동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부서 기금운용관(보육지원과)은 2024~2025년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9월 10일 전까지 제출하였으나,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총괄관리관(기획예산과)에게 9.25. 지연 제출함. ○ 양성평등 기금 심의 및 안건 제출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람.
2	11.25. (화)	차인영	[어린이집 사고 관리 및 재발방지 철저]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기관 신뢰, 교직원 책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사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학부모 불신 증가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730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유형별로는 끼임 20건, 넘어짐 150건, 떨어짐 24건, 부딪힘 299건, 이물질삽입 15건, 화상 5건, 기타 217건이며, 사고원인으로는 종사자과실 31건, 유아부주의 591건, 아동간다툼 51건, 시설물하자 3건, 기타 54건으로 나타났음. 어린이집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재발방지를 목표로 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수적임. 사고 DB를 연령별·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장소별·유형별로 분석하여 반복되는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어린이집의 월례회의에서 고위험 구역 및 취약패턴을 집중관리 지정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용중인 보육통합시스템 내 사고보고서 표준안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구체성이 떨어져 사고상황, 원인, 대응조치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아동의 생명·건강보호·기관신뢰 그리고 교직원 책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 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학부모 불신 증가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소관부서는 이러한 구조적 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람.
3	11.26. (수)	차인영	<p>[수어통역센테 운영 관련 지속적 관심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언론 보도(JTBC, 2025.11.19)에 따르면 한국 농아인협회 일부 간부가 수어 통역센터장 임용 과정에서 성상납을 요구한 성폭력·권력형 부패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이는 농아인 당사자의 취업 기회를 빌미로 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어통역센터 1개소를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가 한국농아인협회의 간접적인 영향(행사 동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종사자 6명 중 3명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부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공공기관의 위탁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임.	점검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4	11.26. (수)	차인영	<p>[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가 실시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해명보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9월 언론보도에서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의 500억 원대 배임·횡령 및 조합과 구청 간 유착 의혹이 보도됨. 또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함. ○ 이에 구청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와 구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과정의 신뢰회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주민불신, 구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 추락 등이 제기되었음. - 향후 실시 될 추가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철저히 규명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함. ○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공식 해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공동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등을 검토하여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회복해야 함.
5	11.26. (수)	차인영	<p>[활주로형 횡단보도 신규 설치 검토 및 유지보수 예산 편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현재 총 5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임. ○ 최근 제2스포츠센터 앞 설치 요청 등 주민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별도 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 당산2동 당산로42길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3동 원지공원 일대 4개소 및 대길초등학교 후문 1개소 활주로형 횡단보도 시설은 포장공사 시행으로 작동 불능 상태에 있음. ○ 이처럼 주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특성상 소규모 굴착공사에도 파손이 잦아 정비 또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만큼 유지보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의 실효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예산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를 일부 활용해 설치한 바 있음.</p> <p>○ 신길7동 삼환아파트 활주로형 횡단보도 파손 등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소요도 꽤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비용도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정비도 어려운 실정임.</p>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요청함.
6	11.27. (목)	차인영	<p>[아동복지시설 아동약물관리 실태 재점검 및 합동조사 촉구]</p> <p>○ 충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00000이 운영하는 아동양육 시설은 종사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취학 1명, 초등 30명, 중학생 1명 등 총 3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음.</p> <p>시설에는 시비 100%로 운영비 2,256,648천원, 생활아동지원 135,440천원, 생계비 132,302천원 등이 집행됨.</p> <p>현재 ADHD 약물을 복용 중인 아동은 12명으로 파악됨.</p> <p>○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아동양육시설 ADHD 약물복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ADHD 약물 복용률은 17.2%이며 2024년에는 23.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시설의 ADHD 약물 복용률(약 37.5%)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이는</p>	<p>○ 해당 시설의 약물관리 및 아동 건강관리 점검이 공무원 단독 방문으로 이뤄져 의료적 검증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과는 2025년이 지나기 전에 보건소 의료진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의 약품 관리, 복약상태, 약물 부작용 여부 등 전문적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p> <p>특히 ADHD 약물 복용 아동 12명에 대한 정기적 의료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요인 사전 점검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람.</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아동 약물 처방 및 관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함.</p> <p>○ 또한 최근 중앙정부는 아동복지 시설의 약물관리 실태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과 건강한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음.</p>	
7	11.27. (목)	차인영	<p>[자동경고발신시스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중복성 문제]</p> <p>○ 2025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법적 근거 부족 및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미운영 되고 있음.</p> <p>○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사용 요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함.</p> <p>○ 하지만 이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2022 ~ 2024년 사업을 시행할 때는 법적 근거 없이 강행한 것이며, 2017년 서울시에서 개발한 '대포킬러'를 사용하는 대신 따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판단해볼 수도 있는 사안임.</p> <p>○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을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이미 '대포킬러'라는</p>	<p>○ 사업 추진 후 법적 근거 부족, 실효성 부족 등 사유를 분석하여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한 것은 긍정적임.</p> <p>○ 하지만 향후 사업 추진 시 근거·필요성·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p> <p>○ 특히 타 기관에서 이미 운용 중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필요성과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시스템을 운용 중인데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임.	
8	11.28. (금)	차인영	<p>[영등포 1-2구역 조합운영 실태부실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총 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됨. 이 중 수사의뢰 5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11건이 포함되는 등 조합운영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됨. ○ 수사의뢰된 주요 위반 사례는 법무법인 계약 관련, 일반경쟁 입찰 위반, 결산보고 작성 및 의결미비, 연간 자금운용계획 보고 미공개, 정보공개 지연에 관한 사항임. ○ 조합원 일부가 관련 의혹을 사업부서에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나, 실제 실태점검은 2025년 5월 착수되었음. ○ 구청도 조합에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그에 비해 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감독체계의 부재 가능성이 큰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인 위반과 민원에도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기점검 주기 단축 또는 시점검체계 도입 등 감독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표준화하여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	11.28. (금)	차인영	<p>[공동주택 실태조사 대상 확대 필요]</p> <p>○ 관내의 196개 공동주택 단지 중에서 최근 10년간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단지는 76개 단지이며, 실태조사 실시 건수도 23년 9건, 24년 6개, 올해는 4개 단지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p> <p>○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체 감사보고서 공개 미흡, 유형자산 관리 미비, 수의계약 낙찰자 현황 공개기한 미준수, 선관위원 결격사유 확인 미흡 등 유사한 위반 사항 발생이 많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간 76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실태조사가 미실시되었음.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공동주택 실태조사의 대상 단지 수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실태 조사 업무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또한, 단지 별로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11.25. (화)	이예찬	<p>[신길·대림 보건지소 설립 지역 관련 지역사회보장계획 대책 마련]</p> <p>○ 대림동은 사회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보건서비스 이용률 또한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보건 접근성 개선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여 동 단위의 실질적 수요가 계획에 반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p> <p>○ 신길·대림 지역 보건지소 설치 사업은 당초 지역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균형적 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2024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신길·대림 지역의 보건 인프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요청함. ○ 또한, 향후 보건·복지 통합계획을 추진할 때 대림·신길 지역의 인구구조·수요 분석, 보건취약 지표, 이용률 등을 기반으로 한 근거 기반 계획 수립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1	11.25. (화)	이예찬	<p>[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탈수급을 목표로 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영등포구 지역자활센터와 13개 자활근로 사업단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핵심 전달체계로 기능하며, 근로 기반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장기적인 취업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3년간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탈수급 사례 대부분이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기초급여 탈락'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취업이나 민간 일자리 전환을 통한 실질적 자립 성공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현행 자활근로사업이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하는 '전환사업'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조건부 수급자가 일정 기간 참여 후 복지체계로 다시 회귀하는 '순환 구조'에 머물 위험이 있음을 시사함.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 탈수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 중심 구조를 넘어 민간일자리 전환 경로 설계가 필수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및 13개 자활근로사업단과 협력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내 민간기업·사회적기업·지역기반 산업과의 연계 강화, ② 직무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③ 공공근로에서 민간근로로 이어지는 자활전환 체계 마련 등 실질적 탈수급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요청함. ○ 특히, 단순 근로 제공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활-취업-자립'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성과 지표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2	11.25. (화)	이예찬	<p>[부가급여 압류방지통장 입금 시스템 구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도가 낮아 일반계좌 사용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정 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부가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입금이 불가하여, 수급자 및 행정 모두에게 지속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명절위문금, 월동대책비, 중·고생 교통비 등 부가급여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① 수급자의 업무시간 내 방문 부담, ② 미수령 시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반납 처리 및 민원 발생, ③ 주민센터의 현금 인출·보관·배분·대장 작성 및 미수령자 반복 연락 등 행정력 과다 소모가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내 10개 자치구는 이미 부가급여의 압류방지통장 입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영등포구는 2024년 설 명절위문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시스템 오류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어,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 재도입 필요성이 자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히 재개하여 부가급여의 압류방지통장 입금 시스템 재도입을 위한 실무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타 자치구 운영 사례를 참고해 기술적 오류 방지 대책, 정산 절차, 보안 검증 체계 등을 조속히 정비해 추진해 주기 바람. ○ 아울러 현재 냉·난방비가 재난 기금 운용으로 인해 일부 자치구에서 압류방지통장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서울시·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냉·난방비 또한 압류방지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검토·추진해 주기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	11.25. (화)	이예찬	<p>[장애인복지증진 기금 신설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장애인 복지계정)을 약 96억 원 규모 (2025년 기준)로 편성하여 장애인단체 지원, 전세주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노원구(2026년 예정)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복지사업, 단체 지원,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기금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는 향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장애인복지증진 기금 신설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재원 규모·적용 사업 범위·타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구청 업무 중 발생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자체 재원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람.
14	11.25. (화)	이예찬	<p>[경로당 양곡비 차등 지급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양곡비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정기/추가 양곡비 지원과, 구비로 운영되는 특별 양곡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가지 형태로 지급되고 있음. 현재는 경로당 규모나 회원 수와 무관하게 금액이 지원되는 구조임. ○ 실제 현장에서는 경로당별 중식 이용 인원, 등록 회원 수, 식사량 차이가 매우 큰데, 현행 방식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소규모 경로당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별 등록 회원 수, 중식 이용률, 실제 식재료 소요량 등을 고려한 규모·수요 기반의 차등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특히 구비로 편성되는 특별 양곡비의 경우 경로당 간 형평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조정이 필요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잉여가 발생하고, 대규모 경로당은 양이 항상 부족한 형평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15	11.26. (수)	이예찬	<p>[디지털 옥외광고물로 인한 빛공해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도 금호리첸시아 인근 올림픽대로변에 설치된 대형 LED 디지털 옥외광고물이 기존 아날로그 광고판 대비 6개소·12면으로 확대됨. 야간 강광·깜빡임 현상에 따른 수면 방해, 학습 집중 저해 등 주민 생활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위기관 주도 사업이라는 이유로 영등포구가 주민 보호 관점의 검토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미비점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서는 관계기관(행정안전부·서울시·한국옥외광고센터·광고물 운영사 등)과의 협의 구조를 공식적으로 구축하여, 광원 조도 조정·점멸 패턴 개선·차광시설 설치 등 빛공해 저감 조치의 실효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의견수렴 절차 등을 보완하고, 광고물 설치·변경 시 구청이 주민생활권 관점에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확립해야 함. 	
16	11.26. (수)	이예찬	[종이팩 재활용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종이팩 수거사업은 쓰다 점빵(70개소) 및 동주민센터(18개소)를 거점으로 운영 중이며, 종이팩을 일정량 모아오면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 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쓰다점빵을 통한 종이팩 수거량은 2023년 7,499kg, 2024년 6,066kg, 2025년 7,243kg으로 일정 수준의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서는 2027년 의무재활용 지정에 대비하여, 쓰다점빵 등 기존 거점 중심의 수거 방식에서 공동주택 전용수거함 설치 확대 등 보편적 수거체계로 전환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람. ○ 공동주택 유형별(500가구 이상 단지 등)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노원구·서초구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설치비·운영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과를 내고 있으나, 이는 판내 전체 배출량 대비 일부에 불과한 실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기준 종이팩 재활용률은 13%, 멀균팩은 2%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서울환경연합 설문조사에서도 시민의 다수가 종이팩 배출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종이류’로 배출한다는 응답 47%, ‘종량제 봉투’ 응답 25%). 이는 전용수거 체계 인지도 자체가 낮음을 의미함. ○ 환경부는 2027년부터 종이팩을 플라스틱·비닐과 동일하게 의무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전용 수거·회수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서울시 일부 자치구(노원구, 서초구)는 이미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를 시범 운영 중이며, 이는 재활용률 향상뿐 아니라 주민들의 배출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음. 	<p>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는 종이팩 분리배출 인식개선 캠페인, 멀균팩 별도 수거, 회수량·재활용률 모니터링 강화 등 종합적 재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의 전체 배출량 대비 실질적인 재활용률 향상을 도모해 주기 바람.
17	11.26. (수)	이예찬	<p>[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사업 효과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 사업은 전기 사용량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를 주요 목표로 예산이 투입되었음. 그러나 지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같은 유형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사전 실증 데이터 확보, 시범사업, 효과 검증, 본예산 편성 순으로 정교화가 필요함. ○ 실제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요금 절감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양막 설치로 인한 전기 사용량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p> <p>○ 2025년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차양막을 설치한 가구 중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 가구는 50가구(총 증가량 +3,608kWh), 감소한 가구는 50가구(총 감소량 - 5,042kWh)로 나타났음. 증가·감소 가구 수가 같아 유의미한 전기 사용량 혹은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수준임.</p>	<p>'효과'를 활용한 홍보는 부적절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18	11.26. (수)	이예찬	<p>[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감소에 따른 관리 강화 필요]</p> <p>○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2023년 대비 2025년에 8만 6,844건 감소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또한 약 18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p> <p>○ 이러한 변화는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의 활성화, 단속 완화 및 유예 정책 기조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나, 단속 실적 감소가 양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p>	<p>○ 향후 단속 실적 감소 추세를 고려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람.</p> <p>○ 유예 및 완화 중심 운영 기조 속에서도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흐름 유지에 필요한 단속 기준과 사안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해주기 바람.</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9	11.28. (금)	이예찬	<p>[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대응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업무대행비·분양대행비 중복 지출, 조합장 가족기업 특혜 제공, 수백억 원 규모의 부적정 자금집행 등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 서울시 공공 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실태 조사단 역시 최소 500억 원 규모의 횡령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조합 운영의 심각성이 외부 전문가에 의해 확인된 상황임. ○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 구청의 후속 행정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실태조사 이후 불법 의혹에 대한 즉각적·일관된 행정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못 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주택 조합 관련 실태조사 후속조치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조사 결과 공유·법률 검토·고발 및 행정조치 여부 판단·주민 대상 안내 과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20	11.28. (금)	이예찬	<p>[남부도로사업소 부지 활용 관련 지속적 관리와 주민 소통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도로사업소 부지는 지역 내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은 사안임. ○ 해당 부지는 현재 서울시 소관으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기관 주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구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굴하고, 정기적인 현황 파악, 지속적 협의 및 의견 전달, 주민 요청사항의 공식적 전달 및 회신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상황을 꾸준히 챙기기 바람. ○ 아울러, 구청 주도 단계가 아니더라도 업무보고·구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소한의 공공 정보 제공 체계를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는 이유로, 최근 2년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남부도로사업소 활용 계획은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된 현안임에도, 최신 추진 동향이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음.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이 방치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길 바람.
21	11.28. (금)	이예찬	<p>[법률 개정 후 불요 예산 미조정에 따른 신문광고료 불용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팀은 지구단위계획 추진 시 공고 절차를 위해 매년 신문광고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2025년도에도 동일 항목의 예산을 요구·반영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2024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고는 신문 게재 없이 '관보 고시'로 대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실제 집행 수요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은 감액 조정 없이 편성됨. ○ 특히, 연말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별도 설명이나 감액 제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함. ○ 비록 금액 자체는 소규모이나, 법령·지침 변경 후 예산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서는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화로 인해 집행 수요가 소멸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확정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조정·감액안을 제시하여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 아울러 향후 의회 예산 심의 시, 집행 불가 또는 필요성 소멸이 예상되는 항목은 명확히 설명하고 감액 조정안을 제시하여 예산 공백을 예방할 것을 요청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2	11.28. (금)	이예찬	<p>[건축안전특별회계의 구조적 불용 문제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0조제2항 및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화재 안전성능보강·빈집정비 등 법령이 정한 항목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성·집행되는 회계임. ○ 그러나 최근 2~3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법이 허용한 대부분의 사업을 최대한 집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불용 예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올해 제3종 시설물 안전 관리 예산의 집행률은 6.5%에 불과하여, 실질적 수요 대비 과다 편성 또는 구조적 집행 한계가 존재함이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불용되는 사업 항목에 대한 원인분석,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실질 수요보다 과도하게 적립되는 구조인지 여부, 건축 이행강제금의 특별회계 전입 비율(현 30%)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 방안, 법령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발굴 가능한 안전관리·화재예방 관련 신규 사업 검토 등을 포함한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특히, 향후 결산에서도 반복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특별회계의 목적과 실효성을 재점검하여 재원 배분의 적정성·투명성을 높이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
23	11.25. (화)	남완현	<p>[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 방식 전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라 영등포구는 매년 3개월간 모금 목표를 세우고 기부금(성금 및 상품)을 모집하고 있음. ○ 23년(목표액: 19억) 약 22억 8천만원, 24년(목표액: 2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그동안의 추진계획 중 실적우수동 평가 및 포상금 지급이라는 명목하에 동별로 벌어지는 과도한 모금액 경쟁으로 각 주민센터의 공무원들과 직능단체 및 통·반장들에게는 적지 않은 압박이 주어진 것도 사실임. ○ 소관부서는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적우수동 평가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6억 3천만원, 25년(목표액:21억) 28억 7천만원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로 매년 목표액 대비 많은 금액을 모금 받고 있음.	및 포상금 지급 방식의 존폐 여부를 재검토해 주기 바라며,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모금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모금 방식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여 자율적인 모금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기 바람.
24	11.26. (수)	남완현	<p>[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한 사전 주민안내 실시 및 소통 강화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래동 3가에 데이터센터가 2022년 11월 11일 건축허가 되고, 2025년 11월 10일 착공승인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소음, 진동 등 의 피해 우려로 반대함에 따라 지역 사회의 갈등이 표출됨. ○ 현재 우리 구에는 데이터센터 1개가 운영 중이며, 2개 착공승인, 1개 건축허가 승인, 1개 건축허가 접수 상태로 데이터센터 건축으로 인한 주민 반대 민원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센터와 같이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이 건립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서,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 ○ 주민피해 발생 우려 등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시에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갈등 유발시설 사전예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5	11.26. (수)	남완현	<p>[정원도시과 용역·공사 관련 사전 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설계변경 최소화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정원도시과의 용역 및 공사 설계변경은 총 38건으로 다른 부서와 비교해도 많은 편에 속함. ○ 공원 시설물은 주민 이용이 많은 특성상 민원 대응이 잦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수립 전에 현장 여건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현장 의견 수집·온라인 의견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의 사전 의견반영 절차를 강화하여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사전 절차 미비로 인한 극단적 사례가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현장여건에 따른 변수가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임.</p> <p>○ 다만 설계변경 건수가 비교적 많은 편임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현장 특성·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p>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추진계획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음.</p> <p>○ 현실적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길 요청함.</p>
26	11.26. (수)	남완현	<p>[설계변경을 통한 과도한 증액지양]</p> <p>○ 2025년 치수과 단가계약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비 대비 2배에서 최대 3배 가까이 증가한 사례들이 있음. 하수관로 준설 공사는 약 9억 원에서 26억 원대로 약 17억 원(약 191%)이 증액되었고, 빗물받이 준설공사도 4억 원대에서 10억 원대로 약 6억 원(약 130%) 증가하여 두 배 이상 확대되었음. 또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7억 원대에서 15억 원대로 약 8억 원(약 1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p>	<p>○ 수치상으로 보면 최초 계획 대비 변경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 타 부서에서도 보조 재원 등을 활용한 공사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에도 유독 치수과에서만 증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p> <p>○ 타 부서와의 비교를 통해 치수과 사업에서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폭이 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함.</p>
27	11.27. (목)	남완현	<p>[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p> <p>○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평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야 함.</p>	<p>○ 조형벤치는 세출예산 성질로 볼 때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산 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p> <p>○ 해당부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향후 예산 수립을</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0000어린이집 사무 관리비 집행 내역 중 자산취득 비라는 명목으로 약 800여만 원의 캐릭터 조형벤치를 구매 하였음. 또한 2024년도 세출 예산 사업별설명서 중 산출내역에는 조형벤치를 구매한다는 산출내역 또한 없음. 	적법하게 실시하고 예산집행 또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기 바랍니다.
28	11.25. (화)	이성수	<p>(기초연금 환수금 독촉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같은법 제20조(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하고,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역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변동, 사실이혼, 장기 해외체류, 사망 등의 환수이유로 총 66명의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였지만 환수금을 내지 않아 징수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건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사망한 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에 대해 상속자 등에게 독촉 후 환수 및 징수절차에 대해서 「기초연금법」에 따라 철저하게 안내하기 바라며 해당부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9	11.26. (수)	이성수	<p>(소방의 날에도 의용소방대원 표창 수여를 통한 사기 진작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12월 제정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는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날'은 모든 소방 관련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날이므로, 소방공무원과 함께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도 표창하는 것이 사기 진작과 화합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함. ○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지자체장이 두 기념일에 걸쳐 표장을 수여함으로써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는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이하여 17일 기념행사를 열고 4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으나, 소방의 날인 11월 9일에는 표창이 수여되지 않았음. 	널리 알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인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0	11.26. (수)	이성수	<p>[노인복지기금 운영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확대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은 관내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및 전통문화 선양 등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임. ○ 영등포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을 2,100,000천원을 출연하여 조성하였으나 지난 13년동안 기금액은 동결인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전체 인구 371,87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70,936명으로 19%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자치구임.(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2년 45,417명에서 2025년 70,936명으로 56% 증가함) ○ 향후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바, 현재의 기금 유지가 아닌, 적극적인 출연을 통해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도출된 바 해당부서는 방안을 검토 및 모색할 것을 건의함.
31	11.26. (수)	이성수	<p>[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준상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삶의 의욕이 높은 이른바 '영시니어'세대가 증가하고 있음. 이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비교적 활동성이 높고, 기존의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낡고 소극적이며 단순 쉼터 중심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은 더 이상 고령층만을 위한 전통적 쉼터의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됨. 경로당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공간의 정체성과 기능 자체를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정적이고 폐쇄적인 경로당 운영 형태에서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라는 인식에 대해 거부감이나 괴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p> <p>○ 이에 따라 경로당이 단순한 취미·여가 공간에서 벗어나, 세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노인복지 거점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p>	<p>벗어나, 주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작은도서관형 개방형 경로당' 모델을 구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복합공간으로 발전하는 중장기 전략을 고민해 주길 바람.</p>
32	11.26. (수)	이성수	<p>[노후 어린이공원 정비 요청]</p> <p>○ 대림3동 두암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최근 수년간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나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p>○ 또한,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외국인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사례가 지속되어 어린이 이용 환경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p>	<p>○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또는 구비 예산 반영 등 필요 재원을 마련하여 대대적인 리모델링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함.</p> <p>○ 외국인에 대한 물리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되, 장기 체류를 유도하지 않는 공간 구조 재구성, 놀이시설 확충, 동선 개선 등 이용환경 중심의 정비를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함.</p>
33	11.26. (수)	이성수	<p>[적극행정을 통한 도림천 환경개선 요청]</p> <p>○ 하절기 장마철 범람으로 인해 쓰레기가 강변에 쌓이고, 폭우 시 땅이 파여 고인 물이 썩는 등의 문제로 도림천 강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p> <p>○ 도림천 일대는 영등포구와 구로구 경계 지역으로 책임구역이 불규칙하게 설정되어 있어 영등포구 관할이 아니라는 이</p>	<p>○ 인접 자치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간담회·실무협의·공문 협조요청 등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정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함.</p> <p>○ 도림천 인근 범람으로 인한 쓰레기 퇴적, 지반 파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경계 구역이 모호한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 영등포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유 또는 관련 예산 미편성 등 을 근거로 신속한 정비가 이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p> <p>○ 그러나 도림천 악취 및 쓰레기 퇴적 등 실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은 대부분 영등포구 민인 만큼 소극적 대응을 지양 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p>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함.
34	11.27. (목)	이성수	<p>[대림동 다문화경로당 내실있는 개관 준비 요청]</p> <p>○ 우리구는 2026년 예산에 경로 당 임차 보증금 2억 원을 편성 하여 대림동 지역 내 다문화경 로당을 신규 개관할 계획임. 해당 시설은 대림동 지역 특성 을 반영하여 귀화한 외국인 어 르신 중심의 이용이 예상되는 경로당으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령 인구 를 위한 맞춤형 복지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p>	<p>○ 대림동 다문화경로당의 임차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행복경로당과 과도 하게 인접한 지역에 임차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기 바람. 동 일 권역 내 경로당이 밀집할 경우 이용자 분산, 운영 효율 성 저하, 프로그램 충복 등 여 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권역별 수요와 지역 분 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 있 는 입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p> <p>○ 아울러 다문화경로당 개관 후 운영진 구성 과정에서도 회장 및 총무 직책이 내국인 또는 귀화한 외국인 중 한쪽으로만 편중되거나 독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인구 특성과 다양한 이용자 구성을 고려하여, 운영진을 균형적으 로 구성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 의 세심한 지도·관리를 요청함.</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5	11.28. (금)	이성수	<p>[대림1·2동, 신길6동 등 주차문제 해결책 마련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동 및 인접 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과거와 비교해 주민 차량 보유 대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기존 생활권 내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상습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향후 주차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비사업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주차장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민 생활 불편이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 이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확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주차수급 현황(총면수, 가용 주차시설, 시간대별 수요 등)을 종합 조사하고, 향후 수요예측을 반영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함. ○ 공영주차장 확충, 유휴부지 활용, 공유주차제 확대, 학교·공공시설 야간개방, 기계식 주차장 건립 등 현실적이고 즉시 가능한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줄 것을 요구함.
36	11.28. (금)	이성수	<p>[대림2동 청사의 다목적회의실 확대 및 대림3동 청사 4층의 주방용도 우선 사용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2동 청사는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2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될 예정임. 2026년에는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및 구의회 의결, 임시 청사 이전, 공사 착공(12월)이 계획되어 있음. ○ 대림3동 청사 4층에는 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2동 동청사 건립계획 중 다목적회의실은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여, 사업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 할 것임. ○ 대림3동 동청사의 4층 주방은 직능단체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명칭 사용이 필요하며, 협소한 주방 공간의 해결을 위해 다목적회의실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주방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 주방과 연결된 다목적회의실 (43.55m ²)도 폴딩도어 개방 시 주방으로 사용 가능하만, 실질적인 주방 면적은 15.08 m ² 에 불과하여 협소한 상태임.	공간도 주방 용도로 우선 사용 해야 할 것임.
37	11.24. (월)	이순우	<p>[수어통역센터 인력증원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가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의 직원으로 운영중에 있음. ○ 현재 영등포구 청각·언어 장애 인수는 2023년도 2,822명에서 2025년 3,297명으로 16%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어통역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의료·행정·복지·장애인단체가 밀집한 지역으로, 서울시 내 수어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수준임. ○ 특히 종합병원 7개, 전문병원·의원·건강검진기관 등이 집중되어 병원 통역은 건당 평균 2시간 이상 소요됨. ○ 국회 앞 이룸센터의 다수 장애인단체, 정책토론회, 상담 등 의 상시 수요뿐 아니라 구청·고용센터·세무서 등 공공기관 이용 증가로 생활·행정 통역 수요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 통역사가 3명뿐이며, 2020~2024년 동안 타 6개 자치구에서는 1명씩 추가 배치가 이뤄진 반면 우리구는 인력 충원 계획도 없는 상황임. ○ 소관부서는 매년 약 6천건의 수어통역과 상담을 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의 실태를 조사하여 인력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8	11.25. (화)	이순우	<p>[경로당 중식도우미 운영 및 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구는 전체 169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이 중 152개소에 중식도우미를 배치하고 있음. ○ 하지만 모든 경로당이 중식 5 일제를 실시하는 정부방침과는 다르게 경로당은 상황에 따라 주 2일~5일까지 다르게 중식을 운영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경로당 중식도우미 운영은 공무원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행정 지원체계가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의 실제 요구와 행정이 파악하는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경로당 방문·실태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식 이용 어르신 증가와 주 5회 운영 확대에 따라 도우미 인력이 크게 늘었음에도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인력 배치 문제가 드러나고, 결과적으로 예산 증가 대비 운영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소관부서는 「경로당 중식도우미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원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9	11.25. (화)	이순우	<p>[공공공지 도시텃밭 대상자 선정 공정성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래동 공공공지 도시텃밭은 매년 2,000가구 이상이 신청하는 인기 사업으로, 최근 3개년 신청 현황은 2023년 2,812가구(경쟁률 7.4:1), 2024년 2,148가구(경쟁률 6.3:1), 2025년 2,565가구(경쟁률 7.6:1)로 높은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등본 제출 등을 통해 세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당첨자는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 재참여를 허용하는 등 반복·연속 당첨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당첨 이력 관리, 세대원 중복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률이 이어지고 있음.</p> <p>○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반복 당첨 사례 등으로 인해 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신청 단계부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p>	<p>신청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선정 과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p> <p>○ 공정한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함.</p>
40	11.25. (화)	이순우	<p>[정당현수막 등 관리 철저 요청]</p> <p>○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표시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구청에 현수막 설치일 관리 대장 제출을 요청했으나 미회신한 상황임. 이는 관련 현수막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음.</p>	<p>○ 적용 배제 대상 현수막의 설치 일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법정 기한 초과 게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p> <p>○ 설치 일자 관리대장을 명확히 작성·보관하여 관련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수막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조치를 마련해 안정적인 현수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p>
41	11.26. (수)	이순우	<p>[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부실한 작성과 뒤늦은 고시에 대한 개선 필요]</p> <p>○ P.37에는 수고 10m 기준 가지치기 실시로 표기되어 있으나, P.35에는 목표 수고가</p>	<p>○ 사업 근거와 사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가로수 계획의 충실한 작성과 심의가 필요함. 특히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이 중요하므로, 현재 2페이지에 그친 생육환경 개선 항목을 보완해야 함.</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20m로 기재됨. 또한 가지치기 대상 양버즘나무 수고가 15m로 동일하게 입력되는 등 문서의 부실한 작성이 확인됨.</p> <p>○ 가로수 계획이 홈페이지에 확정·공표된 시점은 4월 7일이며, 최종 공표는 9월 2일임. 그러나 바꿔심기·가지치기·병해충 예찰 등은 3월 시작으로 사업 시행이 계획 공표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p>	<p>○ 가로수 캠페인, 정책 협의체 구성,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조성에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 할 필요가 있음.</p>
42	11.26. (수)	이순우	<p>[예산성과지표에 대한 질적 개선 요구]</p> <p>○ 현재 성과지표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집행 건수나 집행률 중심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사업 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p> <p>○ 집행 건수처럼 예측 가능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수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함.</p>	<p>○ 성과지표를 효율성과 효과성이 파악되는 비율 중심 지표로 아래와 같이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임.</p> <p>○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시지시 조사결정률 (%) : (조사대상 필지 /총 대상 필지)*10 -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진척도(%) : (위반중개업소 지도점검실적*0.5 + 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정비실적*0.2 + 중개업자교육 및 구정홍보 실적*0.3) - 도로명주소시설물 유지관리 진척도(%) : (도로명주소시설물 정비실적/도로명주소시설물 총 정비계획대상수)*100
43	11.26. (수)	이순우	<p>[유의미한 예산성과지표 설정 필요]</p> <p>○ 현재 6개 성과지표는 모두 예산이 투입된 세부 사업의 운영 횟수(3개)와 점검 횟수(3개)로만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지표로는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사업 효과 측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p>	<p>○ 성과지표를 효율성과 효과성이 파악되는 비율 중심의 지표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개선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임.</p> <p>○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건축물 정비율(%): (정비건수/적발건수)*100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징수건수/부과건수)*100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횟수와 점검횟수와 같은 단순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수행의 성과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 설정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정비 추진 실적(%): $(예산 집행액/예산액) * 100$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위반 조치율(%): $(조치건수/위반건수) * 100$
44	11.26. (수)	이순우	<p>[조례에 따른 기금운용 전문가 미위촉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야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에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2022년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기금운용전문가 미위촉이 반복 지적되었음에도, 사업부서는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조성된다는 부적절한 답변 후 지적사항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위촉된 10명의 위원은 복지, 법률,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로, 기금운용 분야 민간전문가는 1명도 없는 상황임. 조례 제30조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문가를 조속히 위촉해야 함. ○ 조례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완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개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임.
45	11.27. (목)	이순우	<p>[고독사 등 사망현장 목격 공무원에 대한 지원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도 행감 보고서에서 고독사 목격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올해는 목격 공무원 수 파악 불가로 프로그램 참여인원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다르게 답변함. ○ 고독사 목격 공무원에 대한 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기계적이고 관행적인 작성으로 작년과 올해의 답변이 상반되게 나타났음. 추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은 신중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서 충실히 작성해야 할 것임. ○ 고독사 등 사망현장 목격 공무원에 대한 상호지지 체계 구축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 특별휴가 부여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별휴가 부여는 총무과와 협의 하겠다고 행감 결과보고서에 답변하였으나, 아직 고독사 목적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는 부여되지 않고 있음.	등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46	11.27. (목)	이순우	<p>[양평1동 공공복합청사의 조속한 건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1동 공공복합청사는 2021년 11월 건립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중앙투자심사 를 통과하였으나, 2023년 4 월 기준 신축 방식에서 양평 13구역 기부채납시설을 활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 2023년 8월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한 공공복합청사 조성계획 이 수립되었으며, 시설 수요 조사, 설계를 거쳐서 2028~2031년까지 공사 진행으로 총 사업기간이 10년의 장기 사업이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복합청사 개발 후보지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당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부지를 선택했다면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의를 높일 수 있었을 것임. ○ 공공복합청사 내 시설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 요구가 반영된 시설을 포함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에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47	11.27. (목)	이순우	<p>[목동선 경전철사업 재추진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2020년 11월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 추진되었으나, 2024년 7 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낮은 경제성 평가로 탈락하여 사업이 무산됨. ○ 목동선 경전철 사업을 재추진 하고, '선유고사거리'역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 2024년에 2차례 목동선 재추진 방안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교통기획관을 면담하였으나, 조속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 서울시의 노선 재구조화 검토 등을 통한 사업재추진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정부와 국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경전철 사업 특별법 제정을 건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하여 양평동·당산동 지역과 목동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임.
48	11.27. (목)	이순우	<p>[양평동6가 11번지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8월 11일, 양평동 6가 11번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데이터센터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근 주민들로부터 허가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됨. ○ 9월 29일 건축주와 구청 관계자 면담, 10월 21일 동양아파트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은 전자파·소음·진동·열섬 등 피해 우려로 허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기관은 기속행위이므로 기한 내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건축주와 주민 사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데이터센터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크므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9	11.24. (월)	전승관	<p>[관내 맨발길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맨발길은 조성 예정지를 포함해 총 27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민원 사례를 보면 통행 불편, 황토 유실, 미끄럼 사고, 반려견 배변 문제 등 관리 소홀로 인한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신규 조성보다는 기존 맨발길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점검체계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유지관리 인력 확충과 협력 체계 마련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배수 개선, 위험 요소 제거, 반려견 출입 제한 등 시설별 특성에 맞춘 유지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신규 조성보다는 안전·유지관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시설 품질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	
50	11.24. (월)	전승관	<p>[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주민 소통 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래근린공원은 주민 휴식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리노베이션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주민 의견과 다양한 이용자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정보 부족과 의견 수렴 미흡으로 주민 참여 기회가 제한되었고, 공사로 가림막이 설치된 이후에야 주민들이 사업을 인지하며 거센 민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 안내와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의견 수렴 방식 전반을 개선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정보 전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사전 안내 강화, 대체 시설 안내 등 세심한 소통과 주민 의견 기반 설계·시설 개선 우선순위 마련, 지속적인 사후 점검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길 바람.
51	11.24. (월)	전승관	<p>[왕벚나무 고사 방지 및 관리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의서로와 여의동로에서 2023년 42그루, 2024년 56그루, 2025년 50그루의 왕벚나무가 고사하였으며, 여의도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경관 자원으로서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높음. ○ 전문가에 따르면 벚나무사향하늘소 등 해충 피해가 주요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 원인과 방제 효과를 평가하여 관리 방식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고사율을 낮출 수 있는 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 수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왕벚나무로 단계적 교체를 추진하여 토종 수종 보전과 안정적 경관 유지가 가능하도록 교체 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사원인으로 지적되며, 특히 오래된 수목일수록 취약성이 높아 정기점검과 체계적 방제 관리가 필수적임.	
52	11.25. (화)	전승관	<p>[보행불편 유발 전신주, 통신주 대책 마련(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으로 접수된 전신주 이설 요청 사례는 한국전력공사 관리 설비이며, 해당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관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됨. ○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 확인 후 절차 안내와 이설비용 납부 의무, 인근 주거지역 단전 가능성 등을 민원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파악되나,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차원에서 전신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 ○ 이설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나 민원이 집중된 지점부터 우선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와 절차를 추진해주기 바람.
53	11.25. (화)	전승관	<p>[공공질서 훼손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범죄 조장,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사행성 조장, 인권 침해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현수막 등 혐오 현수막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 관내에도 혐오·비방·가짜뉴스 현수막이 난립하며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과 환경에 도 위협이 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지침에 따라 관내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금지광고물에 대해 적절한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주기 바람. ○ 공공의 미풍양속과 인권 보호를 고려한 광고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옥외광고물위원회를 통한 운영 기준 재정비 및 절차 개선 등 종합적 대응 계획 수립을 검토해주기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4	11.25. (화)	전승관	<p>[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대비 철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연간 약 4만5천 톤 규모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직매립 금지 시행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과 행정 혼란이 있어, 폐기물 처리 체계 개편과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등 근본적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는 관내 폐기물 처리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관계 기관 협의를 지속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 ○ 다량 배출자 자체 처리 및 배출 계도 강화, 재활용 사업 확대 및 신규 자원순환 사업 발굴 등 종합적 감량 정책을 마련하고,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주기 바람.
55	11.25. (화)	전승관	<p>[영등포 자원순환센터 화재 예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재활용선별장 화재로 외벽·방음벽 등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2023년에는 음식물 적환장 내 휴게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음. ○ 올해 자원순환센터 내 컨테이너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컨테이너 2개 동이 철거되는 피해가 발생함. 화재 발생이 반복되는 상황인 만큼 지속 적이고 강화된 관리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는 화재 취약 구간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화재 감지·진압 장비 보강·위험물 관리 강화, 정기 안전 점검 등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 자원순환센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직원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6	11.25. (화)	전승관	<p>[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실시하지 않아 적발된 기계식 주차장은 2023년 112개소, 2024년 83개소이며, 관리인 미배치로 적발된 경우도 두 해 모두 3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관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정지센서 신호 이상으로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함. ○ 기계식 주차장 점검은 2023년 818개소, 2024년 846개소를 시행했으며, 2025년 점검 대상이 191개소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미실시는 사고로 직결되는 핵심 원인으로, 정밀안전검사 관리 강화와 지도·감독 철저가 반드시 필요함. ○ 특히 관리인을 배치해야 함에도 관리인 부재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관리인은 긴급 상황에서 초동대응을 맡는 만큼 더 엄정한 관리가 요구됨. ○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지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철저히 하길 바람.
57	11.25. (화)	전승관	<p>[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최저, 중장기 대책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85%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며, 차량 1대당 1면의 주차구역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부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도심 구조상 신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시적 주차난이 고착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체계적 주차공간 확충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파악하여 공영주차장 확충,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공공·민간 유휴부지 활용 등 실효성 있는 주차 인프라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추진해주기 바람. ○ 주차 공유 서비스 활성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정책을 병행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주기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8	11.25. (화)	전승관	<p>[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확대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은 사후 의사를 확인하여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존엄을 보장하는 제도로, 장례 의향·장례주관자·부고를 알릴 가족 및 지인 정보 등을 관리함. ○ 현재 사업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로 한정되어 있는데, 가족관계가 단절된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 계층은 제도 이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 취지와 절차,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세심한 안내를 해주기 바람. ○ 가족관계가 단절된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도 생애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장례주관 의향 관리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
59	11.26. (수)	전승관	<p>(1인 가구 지원사업 통합 행정 체계와 원스톱 지원 인프라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복지·주거·고립 예방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1인가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접근과 지원 방식이 필요하며, 현재 분산된 사업을 일원화하고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령대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1인가구 지원 통합추진단 구성을 통해 부서 간 칸막이 해소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야 함. ○ 아울러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고 중복사업을 점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0	11.26. (수)	전승관	<p>[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구매율은 0.25%에 불과하며, 2025년부터 공공기관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1%로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모든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함. ○ 구매 담당자 교육, 구매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선구매 제도 반영 등 실질적 독려 방안을 마련하여 우선구매율을 목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주길 바람.
61	11.26. (수)	전승관	<p>(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스토킹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교제폭력 범죄는 2022년 558건에서 2024년 785건으로 증가했으며, 스토킹 범죄도 매년 100여 건이상 발생하고 있음. ○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렵고, 피해 발생 시 심리적·경제적 피해가 크게 나타나므로, 예방적 안전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CCTV, 비상벨, 스마트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범죄 취약 가구를 우선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함. ○ 소관부서는 경찰·주민센터 등과 협력하여 범죄 예방 교육, 신속 신고 체계 구축,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길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2	11.26. (수)	전승관	<p>[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지하안전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크홀로 불리는 지반침하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관내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총 11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해, 지난해 대비 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7월에는 지반침하로 인해 승용차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있었고, 9월에는 국토부 보고대상인 면적 1m² 또는 깊이 1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예방 투자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임. ○ 아울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확대, 위험 구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원인별 데이터 축적 및 분석체계 정비를 적극 추진해주길 바람. ○ 지반침하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치 매뉴얼 구체화 등을 통해 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63	11.26. (수)	전승관	<p>[구청 신청사 건립 다각적인 검토 선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신청사는 2027년 5월 착공,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 청사와 당산근린공원 부지를 맞교환하는 순환개발 방식으로 총 사업비가 약 3,128억 원임. ○ 사업비 규모와 기금 적립 등 추진 방식이 구 재정건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리적·객관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당산근린공원이 장기간 이용 불가해지는 과정에 대한 주민 목소리도 수렴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재정건정성 등 기초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종합적인 재정확보 전략이 필요함. ○ 또한 현 청사 부지 공원 재조성까지 약 7~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임. ○ 신청사 건립은 도심 녹지, 재정 구조, 행정 수요, 주민 편익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장기 과제인 만큼 충분한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은 물론 지속적인 주민 소통이 필수임.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4	11.26. (수)	진승관	<p>[데이터센터 관련 선제적 소통 행정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전자파·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주민 면담 요청에 대한 미흡한 대응, 주민 참여가 어려운 낮 시간대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 소음, 진동 등 영향 관련 자료와 인허가 진행 현황 등을 주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도 철저히 해야 함. ○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소극적 대응이 아닌 주민 간담회·설명회·현장 브리핑 등 상시적 소통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행정이 요구됨.
65	11.26. (수)	진승관	<p>[문래 예술의 전당 사업 타당성 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래 예술의 전당은 당초 제2 세종문화회관의 입지가 문래동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변경된 이후 대체 사업 성격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투자타당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은 B/C(비용대비편익) 0.24, 운영수지 비율 0.51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연간 73.37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 여론이 크므로, 충분한 주민 소통이 선행돼야 하며, 재정 여력·지역 수요·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함. ○ 약 1,82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약 3,128억원)도 추진 중인 바, 양 사업이 중첩될 경우 구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적 재정영향 분석을 토대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6	11.26. (수)	전승관	<p>[영등포 도심역세권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도심역세권 재개발사업은 2021년 6월 정비 구역 지정, 2023년 7월 조합 설립 인가 후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장 유고 및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 정비계획 변경 협의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음. ○ 2026년 상반기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 변경 입안,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서울시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 등의 주요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딘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점검, 실태조사, 갈등 조정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정비사업 구역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대한 주민 기대가 매우 높은 지역인 만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
67	11.26. (수)	전승관	<p>[도림보도육교의 조속한 재설치 및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1월 도림보도육교 붕괴 이후 임시 징검다리를 설치하였으나, 기상 상황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고, 어르신·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용이 어렵고, 주민 불편도 커 재설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지난 10월 서울시 제6차 투자 심사 결과, 도림보도육교 재설치 총사업비 61억4천만 원을 구 재원으로 충당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국비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함. ○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도림보도육교 재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신청 협조 공문을 몇 차례 발송한 만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재설치를 추진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68	11.26. (수)	전승관	<p>[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 실효적 운영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는 회원 확대를 위해 여러 이벤트와 상품권 제공 등을 진행해 왔으며, 신규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회원 수가 약 5,500여 명으로 집계됨. ○ 회원 수 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게시판 게시물임에도 평균 조회수는 약 50회 수준으로 회원 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제는 단순 회원 수 확대보다 청년 정책 정보 전달과 참여 유도가 중심이 되는 운영이 필요하며, 카페 본래 목적에 맞는 청년 소통 및 정보 공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책, 교육·행사·참여 프로그램 등 핵심 정보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소관부서는 운영진과 협력하여 카페 콘텐츠 품질 관리, 참여 유도 전략 등을 강화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점검함으로써 회원 수 증가 노력과 실질적 참여·소통을 균형있게 달성하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69	11.26. (수)	전승관	<p>[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 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의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은 49.5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이 열려 보행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량 많은 지역, 상습 침수 지역 등 위험도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라며, 전반적인 맨홀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주기 바람. ○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0	11.26. (수)	전승관	<p>[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형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행자 충돌, 인도 주행, 무단 방치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주민 민원은 2023년 129건, 2024년 848건, 2025년 11월 기준 1,031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관리·단속 체계 강화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밀집 지역(유동 인구·청소년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등 PM 통행 제한 구역·시간대 지정 검토도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경찰청과의 협의 체계 구축도 필요함. ○ 무단 방치·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 즉시 견인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PM 업체와의 협력 기반도 강화해주기 바람. ○ 안전모 착용, 보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71	11.26. (수)	전승관	<p>[바닥형 신호등 유지관리 철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형 신호등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등기구 소등, 신호 불일치 등 고장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4년 150건, 2025년 11월 기준 80건의 고장이 발생해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임. ○ 일부 구간은 고장 발생 후 최대 132일간 방치된 사례도 확인되었으며,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은 바닥형 신호 등 의존도가 높아 시설 고장은 사고 위험으로 직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구간에 대한 정기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고장·파손 발생 시 즉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 대응 프로세스를 강화해주기 바람. ○ 방열, 방습 등 내구성 점검 및 시설 보강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해주기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2	11.26. (수)	전승관	<p>[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 실적 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의 집행률이 2024년 68%, 2025년 5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지도, 통학길 교통안전 확보 등 사업 효과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해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대상 학교 확대, 운영 시간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학교·학부모와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률을 제고해주기 바람.
73	11.27. (목)	전승관	<p>[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사업 지연·재정 불안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 조합원 피해 우려 등 관련 민원이 매년 제기되고 있음. ○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조합 설립 이후의 운영 비리, 사업 지연, 자금 운용 불투명 등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도·감독이 반드시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택조합 모집·설립·운영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도 요구됨. ○ 부실 조합 예방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상담·정보 제공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나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고발 및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4	11.27. (목)	전승관	<p>[관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청의 '소방차 진입 불가 및 곤란 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총 15개 구간이 진입 곤란 지역으로 분류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좁은 도로 폭, 상습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화재·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아, 지자체 차원의 실효적이고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협소 도로 확충, 골목길 노면 정비, 소방차 이동 동선 확보 등 현장 여건에 맞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상시 주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즉각 견인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가 필요함. ○ 도로 확폭이 단기간에 어려운 지역은 보행·차량 동선 재정비, 대피 공간 확보, 진입로 개선 등 종합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화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75	11.27. (목)	전승관	<p>[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촘촘한 예방·대응 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2023년 197건, 2024년 236건, 2025년 26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도 2023년 49건, 2024년 86건, 2025년 9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회복 지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조기 발견·개입 및 사후 지원 체계가 일부 미흡하여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아동학대 신고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재학대 예방까지 포함한 두텁고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아동학대 대응 전문 인력을 확충도 필요함. ○ 학대 위험 가정의 초기 개입 강화, 관계기관 공조 확대, 고위험군 모니터링 체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응 정책강화가 요구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6	11.27. (목)	전승관	<p>[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됐으며, 점검대상 공중이용시설 22개소 중 어린이집은 21개소임. ○ 점검 결과, 총 22건 중 양호 8건, 보수·보강 3건, 주의·관찰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시설에서 안전 관리 소홀, 시설물 노후 등 지적 사항이 발견됨. ○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는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각적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함. ○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안전관리 미비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위험요인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람.
77	11.27. (목)	전승관	<p>[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해체, 폭력,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이유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며, 생활·교육·심리·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임. ○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와 종합적 지원 현황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수요파악과 맞춤형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 연령, 생활·교육 등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설계해야 함. ○ 교육, 주거, 심리 상담, 취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 조사와 지원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8	11.28. (금)	전승관	<p>[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전세사기 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불안과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관내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으며, 보증금 미반환, 허위·불법 임대계약, 관리 부실 등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효적 예방 대책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 사전 안내 강화, 불법 중개행위 예방 점검 등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법률·행정 지원 연계, 긴급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소송경비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
79	11.28. (금)	전승관	<p>[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개발을 위한 대규모 굴착 공사의 경우 지하수 흐름 변화로 공동이 발생하거나, 지하수가 버티던 지반의 하중을 공동이 견디지 못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내의 지하개발사업장은 총 38곳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큰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공동 형성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함. ○ 현재 38곳의 지하개발사업장 뿐만 아니라 향후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도 많은 만큼 사전 관리 강화와 예방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개발사업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체계화, 정기·수시 점검 확대, 전문 인력 및 안전 예산 확보 등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0	11.28. (금)	전승관	<p>[공개 공지의 관리·감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된 공공 이용 공간이지만, 일부 공개 공지에서 주민 이용 불편, 안전사고 위험,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23~2025년 공개 공지 위반 사항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불법 시설물 설치, 펜스 설치, 안내판 미부착 및 훼손, 흡연 시설과 테라스 설치, 출입 차단 등 총 3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 공지의 공공성·개방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대응이 요구됨. ○ 관내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무단 점유·불법 시설물 설치·이용 제한 등 위반 행위 발생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공개공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치해야 함.
81	11.28. (금)	전승관	<p>[장기간 공동주택 실태조사 미실시 단지 76곳에 대한 점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관리 규약 준수 여부, 관리비 운영 실태, 회계 서류의 적정성, 시설물 관리 등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결된 사항을 점검하는 절차임. ○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관내 공동주택 196 곳 중 76곳(약 39%)이 최근 10년간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을 우선 대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비 운영, 안전 취약 요인,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등 점검 항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단지 규모, 준공 시기,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별 조사 일정 수립이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조치를 적극 이행해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2	11.28. (금)	전승관	<p>[구청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응 만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구청 시스템 서버에 대한 해킹시도는 총 3,149,355건으로 침입시도 경로 별로는 웹방화벽(2,655,786), 침입방지시스템(444,556), DDos방어시스템(49,013) 건으로 나타남. ○ 사이버 공격은 지자체 행정 서비스 중단, 개인 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고도화된 해킹 위협에 대비해 사고 대응 매뉴얼 보완, 중요 데이터의 이중 백업, 정기적인 보안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전문 인력 확충과 대응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비상 대응 매뉴얼 및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83	11.28. (금)	전승관	<p>[공사 중 주민 불편 감소 대책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공사 중 주민불편 신고는 총 833건으로 안전관리·시설 관련 419건, 통행 불편 288건, 소음·진동피해 116건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축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은 주거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주민의 일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는 정비 계획도 많은 지역인 만큼,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공사장별 민원 발생 유형을 분석해 사전 안내 강화, 공사 시간 조정, 소음·분진 저감장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공사 시행사·감독부서·주민 간의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 확대와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4	11.28. (금)	전승관	<p>[장기방치 건축물 조속한 정비로 주민 안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총 23곳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 불법 침입 및 범죄 우려, 주변 경관 훼손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공사 중단 또는 소유권 문제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안전과 미관을 저해하고, 다양한 사회·환경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구조 안전성·관리 실태·위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비 명령·안전펜스 설치 등 행정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함. ○ 장기 방치 사유가 소유권 문제나 사업 지연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법률적 안내 및 조정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85	11.28. (금)	전승관	<p>[관내 노후 하수관 정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하수관 노후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이 63.6%이고, 50년 이상 노후 하수관도 45.7%에 달해 전반적인 교체정비 필요성이 큼. ○ 노후 하수관은 균열·누수 발생으로 지하수 유입, 오염수 유출, 지반침하 위험을 높이고, 배수 능력 저하로 인한 침수 위험까지 가중시키는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 ○ 서울시 2024년 자치구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영등포구는 25개 자치구 중 21위로 낮은 평가를 받으며, 하수관 관리 체계 전반의 보완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단계별 교체·보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주기 바람. ○ 집중호우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한 배수 능력 향상 대책을 병행하고, 국·시비 확보 등 재원 마련을 적극추진하여 개선 속도를 높여주기 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6	11.28. (금)	전승관	<p>[도시숲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도시숲 면적 비율은 5.8%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남. ○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 완화, 열섬 현상 완화, 주민 휴식·여가 공간 제공 등 생활환경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서, 녹지 부족 문제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 확충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지·유휴부지·자투리 공간 등 생활권 내 소규모 녹지 확보 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숲 확대전략을 마련해야 함. ○ 국·시비 지원사업 및 환경·녹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해 재원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기존 공원이나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숲의 가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민전을 기하기 바람.
87	11.24. (월)	최인순	<p>[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다각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6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는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자립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자 발의 및 의결되었음. ○ 현재 영등포구는 12가지 자립 준비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비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전무한 상황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일부 타 자치구에서는 전액 구비를 들여 자립지원수당(매월 20만원 / 3년간), 단체상해 보험료(매월 1만원 / 3년간), 명절위문금 등 전액 구비를 편성하여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 해당부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88	11.27. (목)	최인순	<p>[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구성 및 운영 내실화 철저]</p> <p>○ 「청소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에 따라 우리구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비와 건전한 청소년 생활 지도를 목표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p>	<p>○ 그러나 현재 일부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강서구, 서초구, 양천구, 경기도 양주시 등 관외 지역 거주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어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본래 취지 부합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외 구성원에 대한 정비를 통해 협의회의 지역 중심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함.</p> <p>○ 또한 18개 협의회 중 운영 회칙을 보유한 곳이 6개 동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협의회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 회칙(안)을 마련하여 각 동에 배포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표준 회칙에는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사업체 운영자·종사자 등 지역 기반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회원 자격 기준을 규정하여 구성원 선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함.</p>
89	11.27. (목)	최인순	<p>[장애인아동 지원 사업 관리 철저]</p> <p>○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지원 통합보육 개편으로 협약 대상이 장애통합어린이집 중심으로 재구조화됨에 따라, 2024년 협약시설 24개소에서 2025년 11개소로 축소됨. 이로 인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참여 감소와 장애아동 지원 기회 축소 현상이 발생됨.</p>	<p>○ 장애통합어린이집 중심의 협약 편중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참여 제약에 대한 지원체계 재확대 필요성, 거주지 기반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민간 구분 없는 순회지원 확대 및 지역 균형 통합보육체계 구축 필요성, 민간어린이집 장애 통합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교사교육·환</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또한 2024년 교사지원 1,001명, 특수체육 222회 등 지원 규모가 충분했으나, 2025년에는 교사지원 206명, 특수체육 66회로 전반적 지원 축소 양상이 나타났음.</p> <p>○ 아울러 당산동·문래동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내 장애아반 부재로 인해 장애아동의 관내 보육 이용이 어려워 관외 전출 사례가 지속되는 등 지역 내 장애 보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확인됨.</p>	<p>경개선 등 실질적 지원 강화 필요성, 지원 규모 축소에 따른 영향 분석 및 교사지원·특수체육 보완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당산동·문래동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반 부재로 인한 지속적 관외 전출 문제 해소를 위해 2026년 어린이집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 장애아반 설치에 관하여 적극 검토 바람.</p>
90	11.27. (목)	최인순	<p>[어린이집 유아반 활성화 방안 강구 촉구]</p> <p>○ 영등포구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영아반만 개설되고 유아반은 설치되지 않아, 3~5세 유아들은 기존 어린이집을 떠나 다른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전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집 이용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부모의 통학 부담 및 지역 내 유아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야기함. 일반적으로 유아반 미설치의 원인은 시설 공간 부족, 교사 및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운영 비용 증가, 정원 배치 문제 등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어린이집 내 유아 시기 사회성·언어·놀이 발달 지원이 제한되고, 지역 내 유아반 부족으로 인한 관외 전출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p>	<p>○ 국공립어린이집 내 유아반을 조속히 설치하여 3~5세 아동이 동일 시설에서 연속적으로 보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이를 위해 시설 공간 확보, 교사 및 전문 인력 배치, 운영 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아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유아가 근거리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아울러 부모와 아동의 이동·전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연계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1	11.28. (금)	최인순	<p>[비접촉형 수경시설 수질 관리 검토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접촉형 수경시설은 수질 검사와 기준 충족 관련 법령 규정이 없음. ○ 문래근린공원 및 자매공원 수경시설은 접촉형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판내 비접촉형 수경시설은 수질 정화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으며, 수질검사 또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활용 용수로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재순환해서 사용하는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큼. ○ 산책로, 체육 시설 등 공원 시설과 밀접하게 조성된 바닥 분수, 일반 분수, 실개천 유형은 울타리, 표지판 설치, 관리인 배치 등 안전 관리 조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접촉이나 흡입 가능성이 매우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접촉형 수경시설은 법적 관리의무가 부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구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질 관리 및 점검·검사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어린이 등 행인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공원 내 비접촉형 수경시설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정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 수 사례	비 고
1	11.26. (수)	차인영	<p>[영등포(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임시이주시설 이주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 쪽방촌'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인권·화재·위생 면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어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지구 인접 임시이주 공간 필요 ○ 임시이주시설 개요 ※ 51명/96호(53%) 이주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영등포동 411-28 일원(고가하부) ○ 규 모: 96호실(실당 12m², 1동 38호실, 2동 36호실, 3동 22호실) ○ 운영관리: SH(임대차 계약 및 시설관리 등), 서울시(입주자 선정 및 돌봄 등) ○ 운영기간: 2025. 7.~2029. 12.(임대주택 입주 시) ※ '25. 6월 준공 ○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기간 지속 협업 및 각종 인허가 신속처리로 기존 거주지 인근 영등포역 고가도로 하부 유휴부지 확보 ○ 쪽방 대비 쾌적한 주거환경(안전, 편의 등)을 고려한 임시이주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쪽방 대비 12m² 규모의 주거공간, 각 층별 남·여·장애인 구분된 화장실, 칸막이로 구분된 샤워실, 공동 식당·주방, 휴게실, 세탁실 구성 -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가스 지양, 전기보일러, 전용·공용공간 창문형 에어컨 설치 - 안전 및 생명보호를 위한 주거공간별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영등포소방서 및 외부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출입구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설치</p> <p>-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내·외부 방범용 CCTV 설치</p> <p>○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임시이주시설로 이주 개시</p> <p>○ 향후계획</p> <p>○ 2026. 1.: 임시이주시설 이주 완료</p>	
2	11.27. (목)	차인영	<p>[안양천 이용 주민 접근성 개선 (양평교 승강기 설치, 양평1·2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p> <p>○ (양평교 승강기 설치) 양평교는 계단이 가파르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약자 및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여, 승강기 신규 설치를 통해 안양천 이용 주민의 접근성 개선 을 위해 추진</p> <p>○ (양평 1·2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설치된 지 19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 및 정지로, 주민들의 안전한 승강기 시설 이용을 위해 교체 추진</p> <p>○ 사업개요</p> <p>○ (양평교 승강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양평교(양평동5가 44-1, 양평동25-1) - 총사업비 : 1,100백만원(특교금 900, 구비 200) - 사업기간 : 2024. 7. ~ 2025. 8. - 사업내용 : 승강기 2대 신설(15인승, 적재허중 1,150kg) <p>○ (양평 1·2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양평1보도육교(양평동3가29-3), 양 평2보도육교(양평동5가1-1) - 총사업비 : 200백만원(특교금) - 사업기간 : 2025. 8. ~ 12. - 사업내용 : 승강기 2대 교체 <p>○ 추진성과</p> <p>○ (양평교 승강기 설치를 통한 안양천 접근성 및 안전성 개선)</p>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파르고 폭이 좁은 계단으로 인해 겨울철 낙상 사고 위험이 있던 양평교에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여 이용 안전성 확보하였으며, - 관내 최초로 하천과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를 도입함으로써 주민과 이동약자 등이 안양천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였음 <p>○ (양평 1·2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승강기 이용 환경 제공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시비 발굴 및 재원 확보를 통해 승강기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지속 추진 	
3	11.28. (금)	차인영	<p>[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의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생활SOC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구에서는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신길동 4961번지 일대에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730 m^2 규모의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가칭)'을 조성할 계획임. 해당 시설이 들어 설 신길동 4961번지 일대는 인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거주 인구와 학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교육 시설 및 체육관련 시설 등이 부족하여 시설 건립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음. ○ 이러한 지역적 특징과 구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내체육관, 수영장, 돌봄 교육 연계 프로그램 실, 다목적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며, 특히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은 협소한 부지 면적을 극복하기 위해 해당 부지 옆 어린이공원 지하 (대지면적 1,981 m^2)를 활용할 예정임.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대규모 시설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국·시비 공모사업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참여를 적극 강화하여,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확보 하였음. 올해 8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관련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6년 설계 공모, 2027년 착공을 거쳐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p>	
4	12.1. (월)	차인영	<p>[명예사회복지공무원 '영리한살핌단' 전문조직 운영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총 1,12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음. ○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른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였음. ○ 2025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은 영리한살핌단 (51명)을 중심으로 전문화 및 체계적 관리가 강화 되었음. 기존의 1,345명에서 지역 핵심 주민을 모은 전문 발굴팀을 구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정기 순찰,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을 예방했음. 또한, MOU 체결 확대로 민간 자원을 활용하고, 디지털 신고 시스템(빨간우체통, 카카오톡)을 도입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되었음. 정기적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며, 2025년에는 1,865가구의 위기가구 발굴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의 실질적인 감소가 기대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5	11.26. (수)	남완현	<p>[공개 공지 정비사업 지원을 통한 도시미관 및 주민 생활 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공지는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해당 부지는 사유지이나, 일반 주민에게도 자유롭게 개방되는 공간임.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공개 공지는 총 236개소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세 번째로 많았음. ○ 공개 공지를 잘 정비하면 도심 속 부족한 녹지를 보완하는 '작은 정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됨. ○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원 조성과 노후 휴게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개 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공개 공지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열린 공간이므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11.28. (금)	남완현	<p>[공개공지 정비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노후화된 공개공지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속 휴게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2025년 '공개공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개공지는 사유지 기반이지만 주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조경·휴게시설 정비와 정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부족한 녹지와 여가공간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신청 공모 방식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비비 지원하여 노후 시설 개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주민 이용 편의성과 공간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수한 환경정비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7	12.1. (월)	남완현	<p>[전국 최초 돌봄모델 정착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구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전국 최초로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인 1조 돌봄봉사단을 운영하고, 말벗·산책·여가·인지활동·식사 보조·병원 동행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게는 정서적 안정 제공, 돌봄가족에게는 휴식 시간 보장이라는 효과를 창출하며 현재까지 770여 명의 봉사자 참여와 3,227건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통한 돌봄가족 부담 경감 및 고립 예방 성과를 달성함. ○ 이 사업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역돌봄 모델로 인정 받아 '2024년 우수 행정·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2025년 성과공유회를 통한 우수 봉사자 포상 및 활동 확산으로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이룬 사업으로 평가됨. 향후 신규 봉사자 발굴, 교육 전문화, 대상자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어르신과 돌봄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돌봄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8	11.27. (목)	이성수	<p>[대동단결, 주민참여 기반 청결행정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림동에서는 청결도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청소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대동단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청소 현장상황실 개소를 통해 청소과·동주민센터·대행업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수거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p>및 무단투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기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결지킴이 운영을 통해 주민이 청소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취약지역 순찰,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 현장 계도 등을 병행하여 주민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청결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민·관 합동 캠페인, 책임구간 관리 등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활동을 확대하여 청결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있음.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홍보 체계를 강화하여 외국인 주민 대상 폐기물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배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추진, 다국어 경고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현장 계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동시에 노후화된 재활용정거장 및 클린하우스를 철거·이전 설치하고 취약지역 중심의 상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청소 인프라 개선을 병행하여 도시 미관 및 배출환경을 정비하고 있음. ○ 주간 순찰 및 주말 순찰을 운영하여 무단투기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적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관리도 병행하고 있음. ○ 이러한 추진체계는 청결도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됨. 무엇보다 행정·주민·직능단체가 함께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지속 가능한 청결행정 모델로서 확장 가능성이 큰 우수 사례로 평가됨. 	

연번	감사일시	감사위원	우수사례	비고
9	11.24 (월)	전승관	<p>[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 강화]</p> <p>○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어린이 통학로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보차도 분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관련 조례도 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음.</p> <p>○ 소관 부서는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차도 미분리 구간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p> <p>○ 이는 해당 부서가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지적사항을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p> <p>○ 다만,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구간도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당부함.</p>	